

제346회 국회  
(정기회)

# 국회 본회의 회의 의록

제 8 호

국회 사무처

2016년9월23일(금) 오후 2시

### 의사일정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
3.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

### 상정된 안건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 2

(14시11분 개의)

**○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개의는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기다렸다가 새누리당이 참여하는 것을 노력한 연후에 그다음에 또다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사국장을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보내서 2시에는 예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그렇게 통지를 하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되어 있었습시다마는 1차로 10시 반, 또 오후 2시, 30분을 추가로 기다렸습시다마는 아직 아마 새누리당의 의원총회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예정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국회의장이 과도하게 지연하는 것은 국회법 정신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일단 참석하신 의원님들과 함께 대정부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권영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미 의원 대표발의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동철·윤영일 의원 외 89인으로부터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정세균**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은 어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하여 교섭단체 간 협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시간까지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하여 교섭단체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예정된 본회의 일정은 오늘 하루뿐입니다.

따라서 의장은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회법에 규정된 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 오늘 대정부질문을 마친 후 해임건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것은 국회법에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섭단체대표의원들께서는 오늘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해임건의안의 처리에 관한 협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14시33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4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송파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정부질문을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

서울 송파병 출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 상황이며 특히 삼중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민생경제 파탄, 최악의 남북관계, 민주주의 후퇴입니다.

이러한 삼중 위기는 상호작용을 하여 불공정, 불평등, 불안전 등 3불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총체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정, 상생, 생명의 가치에 기반한 사회로 대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20대 국회에서 새로운 시대정신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오십시오.

대정부질문을 하는 동안 일본군 위안부 한일 합의에 대한 질문이 여러 번 나왔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여러 번 하셨습니다.

○남인순 의원 총리의 인식과 또 국민들의 생각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제가 좀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총리는 ‘위안부 합의가 많은 분들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맞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피해자분들 중에 여러 분들

이,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다행이다. 아쉽지만 이런 합의 내용이 빨리 이행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남인순 의원 국민들의 84%가, 갤럽 조사인데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답변 나온 건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정확한 통계나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신다고 할 수는 없을 거고요. 피해 당사자 할머니들도 많이 납득을 못하고 계십니다.

지금 생존자 사십여 분 중의 열두 분이 정부 상대로 각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알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이게 과연 사실은 납득이 되고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총리께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다른 분들이, 지금 소송을 제기하신 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분들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체로,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들어 보고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얻은 답을 토대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남인순 의원 정부가요, 2013년에 당시 조운선 장관이 유엔에서 ‘당사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해결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라’는 논평도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정부의 태도가 돌변할 수 있을까요?

○국무총리 황교안 정부의 태도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남인순 의원 돌변했잖아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장한다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그것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고 또 상대국은 상대국의 주장을 하면서 이번 합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

다.

그러니까 저희 정부의 관계자들이 얘기한 그대로 되지는 않았지요. 그렇지만 그동안 계속 논쟁이 되었던, 논점이 되었던, 핵심이 되었던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서 지금 정부가 후속 조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그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본은 책임을 인정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일부 정부의 책임……

○**남인순 의원** 일본이, 예.

일본이 책임을 인정한 것은 군의 관여 정도이지 일본 군대의 주도하에 위안소를 설치하고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것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군의 관여하에, 그 군이 관여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책임, 정부 차원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인순 의원** 관여와 주도의 차이도 모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인순 의원** 관여와…… 일본 정부가 워딩 한 것은, 일본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군의 관여를 인정한다는 거였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관여하에……

○**남인순 의원** 군이 관여한 것과 주도한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물론 관여와……

○**남인순 의원** 어떻게 대한민국 총리가 이것도 모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남인순 의원** 관여와 주도의 차이를 모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왜 제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목소리 낮춰!」 하는 의원 있음)

○**남인순 의원** 그러면 그것을 아시면 지금 책임을 인정한다고 했는데 위안소를 설치하고 위안부에 대한 강제동원 인정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합의된 내용 자체가 그동안의 합의 과정에서의 여러 논의들을 결국 집약해서 정리가 된 합의 내용입니다.

○**남인순 의원** 그렇게 두루뭉술 얘기하지 마시고요. 책임을 졌다라고 한국 정부의 총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일본이

사죄와 반성을 했다’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일본 총리가 사죄하고 반성했었다고 돼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예,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런데 사죄라는 게 뭐니까? 진실에 근거해서 할 때 사죄입니다. 강제동원에 대한 인정, 이것이 진실이거든요. 강제동원에 대한 인정이 없는 사죄가 사죄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군의 관여하에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다고 하는 점을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책임을 표현한 것이 그 합의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했다고 하는 그 범위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은 일본 정부의 대표적인 군이 관여해서 위안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는 그런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서 합의가 된 것입니다.

○**남인순 의원** 정말 관여와 주도의 차이를 범을 하신 분이 모를 리는 없는 거고요.

10억 엔의 성격도 이것이 거출금입니다. 거출금인데, 만약에 배상금만의 명목이었다고 한다면 ‘배상상환 및 환불금’이라고 표기를 했을 것입니다. 주는 자가 배상금으로 주지 않은 것을 받는 자가 스스로 배상금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 코미디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그 합의의 내용에 관해서 저도……

○**남인순 의원** 답변을 하세요, 제 질문에. 이것 코미디 아니냐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답변 중에 있습니다.

저도 좀 더 많은 합의를, 일본에 우리에게 대한 호응을 또 답변을, 응답을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래 협의를 해 온 것 아닙니까?

○**남인순 의원** 그러면 배상금 아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또 일본의 입장이 있으니까 계속 시간을 끌고 있고 우리는 시간이 없고 안타깝고, 지금 피해자 할머니들은 자꾸 돌아가고 계시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범위하에서 이런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남인순 의원** 이게 어떻게 정부가 최선의 합의를 했다고 뻔뻔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 제가 조목 조목 얘기했으면 좀 받아들이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뻔뻔’이라든지 이런 표현은

정말 듣기 송구합니다.

○**남인순 의원** 예, 듣기 송구하실 텐데요,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12·28 한일 합의 이후에 정부가 하는 일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3년간 주도하던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사업을 중단했어요. 올해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예산을 집행 안 했어요.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기념사업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이것 왜 이렇게 합니까?

뿐만 아닙니다. 지금 국회가 결의한 위안부 기림비 설치 예산도 전부 다 미반영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시라고 하는 수원시와 같이 결연한 시가 있는데, 거기서 수원시민들이 세우려던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일본의 반대로 최근 무산됐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최선을 다한 거고 역사를 진전시킨 것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이 합의에 관해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뜻대로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원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 사업 자체는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우리와 일본과의 합의 내용과는 좀 다른 차원의, 측면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남인순 의원** 왜 이런 일들이 갑자기 벌어지는지 모르겠고요, 정말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는 역사에는 임기가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밀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어디에 올려야 할지를 결정할 때가 옵니다.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어떻게 올리시겠습니까?’ 이런 영화 ‘밀정’의 대사를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총리, 마지막으로 한번 문겠습니다.

역사 앞에서 검허히 반성하고 일본과 재협상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이 문제는 제삼자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당사자들의 의견입니다. 피해자 당사자들의 의견도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많은 피해자분들 중에, 의견이

많은 분들 중에 또 여러 분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컨센서스하에서 합의를 위한 노력들을 해 왔고, 이것에 대해서 다 만족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이걸 시간이 제한돼 있는 그런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자꾸 연세가 많아지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아 계신 분들도 연세가 상당히 고령자들이십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피해자 당사자들의, 또 다른 우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서 너무 오래 끄는 것은 그것이 과연 최선의 결정이겠는가 또는 차선의 결정이겠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마지막 한 분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그렇게 국가가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이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리, 오늘 금융노조가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강행에 맞서 총파업에 돌입한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총파업 알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27일부터는 공공운수노조, 28일부터는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국민 피해와 노사관계 파국을 막기 위해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 의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그러니까 성과연봉제에 관한 의견을 물으시는 겁니까, 파업에 관한 의견을 물으시는 것입니까?

○**남인순 의원** 파업에 관한 걸 묻는 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파업은 합법 파업의 경우에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되고 정부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그동안 대처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불법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 총파업 중에서도…… 총파업이 하여튼 합법적인 범위에서 잘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인순 의원** 이번에 파업이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얘기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잘 경청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의원** 잘 들어 보셔야 되는 것이 기획재정부가 120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전부 완료됐다고 주장을 하지만 절반 가까운 53곳에서 노조의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강행된 것이기 때문에 도입 과정의 불법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모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또 그 범위 안에서 그렇게 성과연봉제가 합의가 되고 진행되기를, 그렇게 지도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지금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이라고 그런 해석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공공기관 이사회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결의만을 통해서 도입된 성과연봉제는 노사관계법상 무효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해석이 나왔거든요.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어디서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까?

○**남인순 의원** 국회입법조사처요.

○**국무총리 황교안** 국회입법조사처는 그 나름대로 의견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 부분에 관한 법 해석 전문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정부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한번 보시고요.

지금 성과연봉제의 선두주자였던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제너럴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포기를 했어요.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걸로 이 제도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선진적인 기업들도 포기한 제도를 뒤늦게 도입을 해서 실패의 전철을 왜 밟으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성과연봉제를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의 개선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사회적 논의부터 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총리님이 이것을 나서실 생각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갈등 관리 하나도 안 하고 지금 공공부문에서 대파업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성과연봉제는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노사관계에 정한 법령과 여러 지침 등에 따라서 적법하게 집행을 하도록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리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충분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이번 파업이요, 총리님 보고를 안 받으신 것 같은데 사상 최대의 공공부문 파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시작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화도 하고

문제가 뭔지 제기하는 것도 듣고 이런 것 하지 않으면 이 파업이 커집니다.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이것이 고스란히 국민 피해가 되고 그런 문제인데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걸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여러 가지로……

○**남인순 의원** 아니, 지금 총리님이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법 따지는 것이 아니라 총리로서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부처들과 함께 검토하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다음으로 박근혜정부가 상당히 자랑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것인데요. 후속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5월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에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재정절감액이 2083년까지 333조이고 그것의 20%를 공적연금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큰 틀에서 그런 방향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인순 의원** 박근혜정부가 10대 성과라고 홍보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재정절감액 중에서 20%를 쓸 경우에 올해 쓸 수 있는 돈이 1700억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기희생을 통해서 연금 개혁에 합의를 했는데 1700억 날아갔어요.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날아갔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남인순 의원** 전혀 편성이 안 됐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서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아갔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남인순 의원** 거기의 20%를…… 1700억인데요, 그 1700억을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예를 들면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이 연금을 제대로 못 보는 것에 대해서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기금으로 공무원들이 희생한 돈을 거기에다 넣기로 했다고요, 1700억을. 이 합의된 내용 모르세요? 이것이 작년에 정말 얼마나 큰일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1700억 전혀 예산 배정이 안 됐고요, 공무원들만 일방적으로 희생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릅니

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국회의 공적연금강화특위에서 공무원연금 재정절감액 활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실 것입니다. 다만 그 논의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재정절감분을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 과정을 지금 진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제가 사회적 합의기구의 사각지대해소분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에 이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새누리당이 위원을 안 내서 10월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많은 부분을 합의를 했는데 정부가 예산을 편성을 안 한 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에 관해서는……

○남인순 의원 내년부터 1700억 하시겠습니까? 그것 답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재정 당국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남인순 의원 1700억 지금 공무원들의 희생으로 마련된 것인 만큼 복지부나 노동부 등과 협의를 해서 별도의 실링으로, 일반예산에 넣을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실링으로 해서 2017년부터는 반드시 이것이 사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재정 당국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남인순 의원 예.

보건복지부차관 나오세요.

총리님 들어가시고 차관 나오십시오.

차관님,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공공의료 비중?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공공의료 비중이요?

○남인순 의원 예.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한 10……, 육칠 %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차관님이 잘 답변을 못 하시네요.

병상 수 기준으로 9.2%입니다.

문제는 공공의료 비중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 매년 후퇴를 하고 있는데요, 병상 수 기준으

로 보면 2007년에 11.8% 또 작년은 9.2%로 뒷걸음을 치고 있는데요. 1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처음이고 이런 추세로 가면 8%대로 이제 아마 하락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시간문제라고 보는데, 차관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기관을 꼭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 중심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민간기관이라도 그런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성 중심으로 볼 것이냐 여러 가지 범위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지금 추진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물론 모든 것을 다 공공기관의 형태로 만들어서 공공성을 강화할 수도 있지만 민간기관의 응급실이라든지 아니면 권역별 응급실이라든지 이런 것의 지정을 통해 가지고 민간기관의 역할을 공공기능의 역할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런 공공성 강화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작년에 메르스가 확산될 때요, 민간이 그냥 기능별로 공공의 역할을 하면 안 된다, 분명히 공공의 어떤 인프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메르스를 겪으면서 저희가 교훈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중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최소 30%까지 확대를 해야 되지만 30%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10% 미만으로 후퇴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래서 지속적으로……

○남인순 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지속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노력 가지고 안 되지요. 정확하게 답을 하셔야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 공공 형태로, 공공의료원이나 국립병원 형태로 병상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민간 의료기관의 지정 등을 통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형태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차관님 들어가십시오.

총리 다시 나와 주십시오.

이 질문은 물론 복지부에 질문할 수도 있지만

건강보험료 문제기 때문에……

○**국무총리 황교안** 잠깐만 제가 자리에 갔다 오겠습니다. 자료 좀 가져오겠습니다.

○**남인순 의원** 예, 건강보험료 문제입니다. 자료 가지고 오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말씀하시지요.

○**남인순 의원** 정부의 늑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지연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건강보험 체계가……

○**남인순 의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국무총리 황교안** 예, 부과체계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원래 2015년에 발표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하루 만에 발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지난해 건보공단에 제기된 보험료 관련 민원은 총 6725만 건입니다. 그래서 전체 민원의 74.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직이나 은퇴 등의 사유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소득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서 국민들은 이것을 보험료 폭탄이라고 합니다.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이 고통이 굉장히 큼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2014년 이야기지요. 송과 세 모녀의 건강보험료가 얼마였냐면 5만 원 넘게 부과가 됐습니다.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조속히 개편해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여러 번 저희가 속았습니다. 언제까지 정부의 구체적인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내놓을 것인지 한번 총리로서 소신 있는 답변 좀 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 정부도 공감을 하고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국민 다수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제도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에는 저소득 고액 재산가의 보험료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고 또는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가입자가 새로이 발생한다 이런 걱정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 논란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부과의 형평성이나 수용성 그리고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남인순 의원** 검토를 계속 오래 하셨어요. 이미 기획단에서 다섯 가지 방안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까지 다 마친 상황입니다. 이제 정부가 결정만 하면 됩니다.

제가 기획단에서 개선안을 시뮬레이션한 것 중에서 하나만 얘기를 드릴게요. 송과 세 모녀처럼 생활수준이 비슷한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449만 명의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중심으로 개편할 경우에.

그러면 이런 것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것 이미 다 방안 나왔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다 나왔고, 왜 결단 안 하는 겁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언제까지 할 거냐,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여러 번 속았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누구한테 속으셨습니까?

○**남인순 의원** 정부한테요.

○**국무총리 황교안** 정부는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남인순 의원** 아니지요. 정부가 발표한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고하러 갔는데 청와대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작년에 안 했어요. 언제 할 거냐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남인순 의원** 검토를 그러면 새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개선안이 다섯 가지가 나왔고 거기에 따른 시뮬레이션 나왔고, 결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피해를 최소화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무슨 노력을 하고 있나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검토들이 필요했고 1차 검토, 2차 검토를 죽 하고 있는데 물론 의원님 말씀처럼 합의가 다 되면 빨리 처리하는 게 좋지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몇 가지 이론들이 있고 다툼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다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중

합적으로?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인순 의원** 야당이 도와 드린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으니까 빨리 검토하셔서 많은 분들의 고통을 덜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관계부처로 하여금 가급적 조속하게 검토를 하도록 당부하겠습니다.

○**남인순 의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고령사회 진입 연도가 2017년도에서 2018년으로 바뀐 것 아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무슨 연도가요?

○**남인순 의원** 고령사회 진입 연도.

○**국무총리 황교안** 진입 연도……

○**남인순 의원** 고령사회 진입 연도라는 건 뭐냐 하면 65세 이상 인구가 14%가 되는 건데 이 연도가 2017년에서 18년으로 바뀌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알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당초에 2010년 10월에 수립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이것에는 고령사회 진입 연도를 2017년으로 기재했는데 그것이 약간의 계산 착오가 있었다, 뒤에 그게 확인이 돼서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기본계획을 보완하면서 2017년으로 돼 있는 것을 2018년으로 수정해서 바로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일단 총리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남인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청주 상당 출신의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충북 청주 상당구 출신 정우택 의원입니다.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구어 낸 놀라운 대한민국은 성공과 성취의 역사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뚫고 세계가 주목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 되는 대한민

국 또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열어 나가고 올바른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역사적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혁신·대통합·대도약 3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뉴 코리아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고 세계 속의 위대한 대한민국 그레이트 코리아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우리 사회의 비리와 부패의 부끄러운 민낯 그리고 분열과 갈등은 우리 사회의 성장판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해운·조선업을 구조조정해야 할 원인을 보면서 국민들은 차제에 올바른 대한민국을 위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심각한 국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총리, 나와 주시지요.

총리에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총리 취임 말씀이신가요?

총리는 1년 7개월 됐습니다.

○**정우택 의원** 지금 하시면서 총리로서 느끼신, 우리나라 사회가 직면해 있는 혁신 과제를 만약 꼽으신다면 뭘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는 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4대 구조 개혁, 공공부문의 개혁 또 교육 분야의 개혁, 금융 분야의 개혁, 노동 개혁까지 이런 4대 개혁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과 관련된 법안들이 빨리 통과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전반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 여러 영역에 있어서 잘 성취가 되어서 우리 경제가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경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신산업이 육성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전략적인 정책 방향에 나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민생의 안정입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사회 전반에 힘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 또 입



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이 얘기는 안 됩니다마는 결국 우리가 안보 의식을 좀 다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안보는 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시시비비를 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고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정부가 중심을 잡고 방향을 잘 잡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역량들을 집중해 가고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 잘 정리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리가 국회에 와서 충분히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같이 좀 충분히 설명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부금 모집 과정 또 재단 설립 과정에 대해서 지금 야당은 이게 특혜 의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어저께 대통령께서는 이걸 난무하는 비방 또는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도 지금까지 파악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지금의 이 말씀은, 야당의 그런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혹은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의혹 제기에는 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세균 의장, 박주선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그동안 나온 이야기들은 구체적으로 이것이 이렇다, 저것이 저렇다라는 말은 하지만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증에 대한 진술들이 없이 주장들이 없이 그렇게 말만 나오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그리고 나온 의혹들을 틈틈이 확인을 해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법절차에 따라서 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부처에 확인을 해 보니 그리 답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이지 책임 있는 정부 부처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그건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주장만 계속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흔들리게 하는 적절하지 못한 대처 방안이 아니냐, 우리가 원칙에 입각하고 법에 입각해서 사실에 근거한 주장들을 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하고 이런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불법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은 의법 조치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우리 사회가 신뢰사회로 가는 그런 밑바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결국 지금 말씀을 들으면 사실이 아니다, 근거가 없다, 현재 총리로서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의혹은 뭐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글썄, 제가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재단을 2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편법으로 만들어졌고 또 그 과정에서 불법들이 개입이 됐다, 그런데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결국 정부의 관여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걸 통해서 결국은 그 두 재단이 거액의 기금을 받도록, 기부를 받도록 이렇게 한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냐 이런 것들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가 충분히 확인할 시간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4일째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틈틈이 좀 확인을 해 보면, 관계된 부처들의 검토나 보고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없다, 근거가 없는 얘기가 지금 주장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 문체부에서의 법인 허가가 하루 만에 나왔다는 것 또는 심지어 창립총회 회의록이 조작됐다 또 단기간에 어떻게 800억 가까운 돈을 모을 수 있느냐, 또 이 두 재단의 설립에 청와대 수석과 비선 실세가 개입을 했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혹 제기에는 대해서 우리 정부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총리 입장은 뭐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대응 방안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 만에 인가가 났다는 그런

부분도 제가 어제, 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얼마 만에 낫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허가가 낫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단 설립 과정에서 전경련에서 사전에 미리부터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문체부에 의견을 묻고 자문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인 설립 절차들에 관해서 충분히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신청한 뒤에, 문체부에서도 더 검토할 게 없으니까, 사전 검토가 된 거니까 그래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루 이틀 만에 인가가 나는 그런 예가 없지 않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조작됐다는 문제는, 일부 자료가 조작됐다는 것은 증거 판단해 보면, 증거 조사를 해 보면 나중에 나오겠지요. 그게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작이 됐으면 그런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증거 없이 이건 조작됐다, 됐을 것이다, 이런 점저런 점을 보면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더 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기간 내에 많은 모금이 됐다 하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단을 설립하기 이전에 많은 준비가 있었답니다. 전경련에서 주도한 것인데 준비를 했고 또 공유를 했고 또 사회공헌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서 각 기업마다 공익기금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이런 활동에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요.

공무원들이나 비선 실세 개입 이 부분은 정말 사실이 확인된 것을 토대로 해서 얘기를 해야지 의혹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대응이 좀 더 신중하고 근거에 입각한 그런 합리적인 문제 제기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우택 의원 우리 대통령께서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총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고 또 총리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우택 의원 부정청탁방지법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상임위원장 때

통과시킨 장본인으로서 또 제가 우려의 시각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한 혼란도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도 하지만 이런 혼란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범법자 양산을 만들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법이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시각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처음에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당시는 아마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을 냈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바로잡고 깨끗한, 비리가 없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점은 기본적으로 확실히 그렇게 돼 가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입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이 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이미 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이 법이 잘 정착이 돼서 우리 사회, 공정한 사회, 바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 이바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전히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나중에 집행될 때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해서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 법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 드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권익위원회에서 법 해설집과 직종별 매뉴얼 또 Q&A 사례집 등을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이미 배포했고, 적용대상자 등에 대한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의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을 하며, 설명을 해 주면서 사각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이렇게 자료를 내려보낸 것을 토대로 해서 저는 또 저희대로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결국은 공직사회와 직접 관련된 것이니까 충분히 알고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각 부처별로 좀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대상 기관들에서도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유념해서 적용대상 기관이나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 또 홍보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이 법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그것이 결국 우리 사회를 깨끗하고 맑게 하고 투명하게 하는 이런 우리의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우택 의원 또 이 공직자들이 민원인과의 접촉을 회피할 가능성이 큼니다. 소위 몸보신 문화가 더 번질 수 있고 또 소극행정을 할, 이런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사회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리께서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그런 말씀에 전적으로 또 공감을 합니다. 또 그렇게 만약 공직사회가 청탁금지법 때문에 이완되거나 적극성을 띠게 되지 못하는 소극 행태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제재가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은 소극행정이 아니라 적극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만약 공직사회가 좀 그런 느슨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고쳐 나가야 된다, 반드시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탁금지법은 장기적으로, 거둬 말씀드리다시피 바른 공직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게,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리라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분야에서 소비가 감소되고 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직 사회가 이완되거나 해이해지거나 소극 행태로 바뀌는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법 시행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분야들, 특별히 공직자들의 소극 행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모니터링 하면서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택 의원 특히 이것 시행되면서 우리 농축산업계 걱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물에서 농수산물 제외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법이라든지 또는 개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 그리고 균형성이 어떻게 보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탁금지법의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고 또 제한 범위가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 저 부분들을 하나 고려를 하다 보면 ‘농업인을 봐줬으니, 거기의 편의를 봐줬으니까 축산인도 해 달라’ ‘축산인을 했으니 화훼 부분도 해 달라’ ‘화훼 부분을 했으니 요식업도 도와 달라’ 이렇게 한다고 치면 이 법의 본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본래 법이 입법된 대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주신 대로 집행을 해 나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사회가 감내할 수 없는 그런 피해나 불편함이 있는지 이것을 잘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들을 집적해서 법을 개정하거나 또는 지침을 개정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고쳐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농수산업종에 대한 특별한 다른 규정을 두기는 어렵고요.

저도 계속 해당 업계에 부탁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맞추어서 농수산물의 가격, 제품의 가격 같은 것들을 조정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추석 연휴에도 보니까 5만 원 이하짜리 선물들이 많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되고 또 그것들이 그 대신에 널리 활용되면 고액의 선물이 소수에게 나누어지는 것이 저액으로 많은 분들에게 나누어지면 또 다른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농수산업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우택 의원 일단 시행은 하고 결과와 여론의 반향을 봐서 개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정우택 의원 대통령께서는 농수산단체장들을 연례적으로 만나셨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떤 일인지 간담회 개최가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총리께서 한번 대통령께 농수산단체장과의 면담 주선, 간담회 주선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농촌사회를 살피고 또 필요한 지원들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틈날 때마다 농촌도 찾아가고 또 농촌에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스마트기기를 만지는 것 가능하겠나’ 그랬는데 지금 보면

스마트팜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거기서 연세가 많으신 분, 제가 만난 분들은 80 가까운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정책들에 결국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러나 농촌에 대한 정부의 걱정 또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평소에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의원님 말씀하신 조치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택 의원** 대통령께 의향을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부정청탁법 시행하고 관련해서 범국민적으로 클린사회 캠페인을 제대로 벌여서, 우리나라 혁신의 제일의 과제를 저는 부정부패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우리 사회의 윤리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이러한 범사회적 캠페인, 클린사회 캠페인을 벌일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합니다. 사회를 바르게 하는 것은 법이나 제도적인 측면도 있지만 인식의 개선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당신은 법을 잘 지키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70%가 ‘나는 법을 잘 지키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는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70%의 사람들은 ‘법을 안 지키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 지키다’고 말한 사람이 70%인데 같은 국민들에게 물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지키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70%라는 것이니까 좀 이율반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나부터 법을 잘 지키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정된 사회, 바른 사회가 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법이나 제도나 처벌이나 제재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캠페인으로, 국민적인 운동으로 그렇게 하면 많은 분들에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과도 물론 상의를 드리고 의견도 듣고 이 부분에 관한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깨끗한 사회, 클린 캠페인을 해가는 노력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법조계의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와 부패 이런 현상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리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동안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아주 부적절하고 있어서는 안 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정우택 의원** 지금 이런 소위 말하는 자체 개혁, 소위 말하는 셀프 개혁이 결국 실패했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셀프 개혁이 실패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감사의 비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인사 영입 또 감찰조직을 확대하고 인력을 확충하고 또 비리 제보를 활성화하는 등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 노력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또 비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개개 검사들의 의식이나 조직문화에 있어서 아직도 개선되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우택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검찰이 무슨 조직이 없어서, 제도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깥에서의, 지금 시중의 얘기는 결국 검찰이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현재 감사에 대한 비위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특임검사나 또 특별수사팀을 구성을 해서 철저하게 수사 또는 감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최근 대검에 검찰개혁추진단을 발족을 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각종 제도개선책을 연구를 하고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 2004년에도 검찰기능 강화하겠다고 그래서 감찰위원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의 근본 원인은 우리 과도한 검찰

권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진정한 개혁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좀 갖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동안의 검찰권의 행사가 과연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법무부나 검찰에서 연구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 우리 이런 것을 보면서 만약 정말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이라는 그 표현이 적당하다고 맞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는 예전에도 거론이 되었던 수사과 기소의 분리 문제가 예전에 많이 거론이 되었던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라든지 또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에 일정한 부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개혁적인 목소리가 또 나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물론 검찰에서는 당연히 부인하실 것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장관의 견해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수사권 조정 문제는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수사기관 간의 어떤 권한의 분배 문제를 넘어서서 국민의 권익 보장 또 법적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 과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지금 4년이 되었습니다. 갓 4년이 되는데, 그런 지금 현 상황에서는 현행 제도에 따른 수사 실무를 안착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우택 의원** 최근 거론되고 있는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수사기관 이외에 2014년도에 여야가 합의로 공직 비리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검사제도 또 특별감찰관제도를 도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가 힘든 이런 공수처, 옥상옥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

비 문제 또 인권 침해적인 사찰기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지적들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또한 입법·행정·사법 어느 기관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수사·소추 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은 위험적인 요소도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정우택 의원** 2013년 4월에 고위공직자 비리를 조사했던 대검의 중수부가 폐지됐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렇습니다.

○**정우택 의원** 그 폐지되었을 때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과도한, 과잉 수사의 우려들이 가장 아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우택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정치적 중립성이었습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정우택 의원** 그런데 이번에 공수처를 제안한 일부 어떤 법안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국회의원 30명이 요구를 하면 무조건 수사를 하게 되어 있는 이런 법안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잘못하면 어떤 정쟁의,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에 굉장한 의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국회의원 30명의 동의로 수사를 착수를 하도록 한다면 국회의원의 일부가 행정권 행사를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은 헌법상 규정된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나와 주시지요.

내년에 지상파 UHD 본방송 앞두고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정우택 의원** 지금 일부에서는 내년 2월 본방송 시행이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대로 시행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상파 UHD 방송은 지금 세계 최초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사의 준비 상황도 중요하지만 또 해외의 기술 상황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지상파들이 UHD 방송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그 신청서를

지금 심사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심사 과정에서 여러 내용들을 철저히 점검을 해 가지고 내년 초에 계획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우택 의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년 2월에 본방송 가능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지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 그런데 아까 계획서를 냈다고 그러는데, 지상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가신청서를 냈습니다.

○정우택 의원 예, 그래서 UHD 방송을 위해서 지상파는 12년간 6조 7900억 원을 투입하겠다 이런 계획을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정우택 의원 그런데 지금 금년 상반기만 해도 이 지상파 3사 적자가 100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그 천문학적인 액수 투자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지상파가 특히 올해 들어서 경영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파가 지금 UHD 방송에 투자하겠다고 한 금액은 12년 동안에 투자하겠다고 한 금액을 총합계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그와 같은 투자 금액을 제시를 한 것은 지상파가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를 사용을 해 가지고 UHD 방송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들에 대한 공적인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상파가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서비스 초기에 UHD 방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송사하고 잘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택 의원 그렇게 얘기하면 좀 두리뭉실하고요.

흔히 말하는 중간광고, 이런 것 허용과 같은 이런 규제 개혁을 해 주지 않으면 저는 이런 투자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게 운영될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해서 요새 여러 가지 논의를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허용 여부는 우선 미디어 시장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하고 여러 가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각 이용자들의 미디어 시청 이용 형태가 변화하고 있고 또 방송·통신 융합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광고를 새로이 허용해 주다 보면 또 다른 매체에 미치는 그런 여러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작년에 광고총량제를 비롯해서 광고제도 개선을 일단 실시를 했고, 지금 현재 약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의 작년에 광고제도 개선으로 인한 효과를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토대로 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광고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 저는 매체를 구분해서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나라,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결과를 보시겠다는데 적극 검토나 신중 검토나, 신중 검토라고 얘기하시면 이것 안 한다는 소리로 저한테는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적극 검토해 보시겠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글썽, ‘적극’ ‘신중’이라는 말의 의미가 좀 애매합니다라는 저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어쨌든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는 일이 방송산업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택 의원 잘 아시다시피 UHD는 차세대 방송산업 성장의 핵심 분야입니다. 또 세계 UHD TV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주선적으로 나서지는 못할망정 이것을 실천하는 방안에 게을리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UHD 전환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고 또 본방송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많이 노력

하겠습니다.

○정우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감사합니다.

○정우택 의원 교육부장관……

최근에 학교생활기록부 조작·각색 이런 사건이 있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정우택 의원 이것은 대학 입학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 앞으로 학부모 불신, 이것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생활기록부 조작은 입시뿐만 아니라 교육 전반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단위 학교장 책임하에서 학생생활기록부를 처리하게 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정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지 명백한 어떤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번에 이런 조작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10월 말까지 교육정보시스템, NEIS라고 그러니까는 NEIS 시스템의 권한 부여라든지 적정성 및 수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든지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 행동특성사항 및 종합의견 영역에 대해서 부당 정정 및 과다 수정 상태가 발견이 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난 원인을 규명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방지할 수 있는 예방대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우택 의원 요새는 1인 가구가 유행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정우택 의원 또 소위 혼밥족, 혼술족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또 심지어는 요새 1인 미디어, 1인 CEO 시대인 것 같아요.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열려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러려면 그 기본이 저는 창의력과 상상력 또는 학교 같으면 현장학습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정우택 의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요새 시행되고 있는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가 주를

이루는 소위 말하는 수능, 수학능력시험, 저는 이 수능이 가장 창의력을 없애는 저는 최악의 학력 평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의 입시가 상당 부분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학종에 의한 전형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수능에 의한 평가는 30% 미만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종을 통해서 학생의 학교에서의 어떤 발달 상황이라든지 수행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전형요소 반영이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수학능력시험 자체가 여전히, 비율은 낮아졌습시다라는 대학에서의 중요한 전형 요소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능시험 자체를 바꾼다든지 폐지하는 문제는 좀 더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의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해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평가에 있어서 단순히 어떤 학업 성적, 점수 위주의 서열화보다는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이라든지 인문학적인 통찰력이라든지 인성, 도전 정신 이러한 가치들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해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종 평가에 대한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대학에서는 지금, 제가 대학총장님들이나 입학처장들을 죽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대학에서는 이 학생이 과연 본인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서 지금 어떤 상태에 도달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나 어떤 사교육 시장을 통해서 습득된 그런 역량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학에서의 요구에 맞게, 아까 이전 질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학생부를 정확하게, 공정·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평가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 과목 등급별 입학제도라는 게 있지요? 그게 지금 현재 수시로 입학하는 그런 수

시선발 제도와 좀 유사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목 등급별 입학제도 이것을 좀 적극 활용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기본적으로 현재 입시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입학 전형에 관한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학시험이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설립 목적이나 건학 이념에 따라서 그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발하는 전형 방법의 도입을 각 대학이 알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자율이 주어진다면서 거기에 따른 책임도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대학의 자율을 존중하되 그러한 입학 전형의 방법이 사회적인, 국민적인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나가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 지금 우리는 산업 체계로 보면 이제 4차 혁명 시대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정우택 의원** 즉 우리 교육도 이 4차 혁명에 걸맞은 이러한 새로운 미래교육 전략과 제도가 이제 짜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전적으로……

○**정우택 의원** 교육부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지금 현재 2015 교육과정을 도입해서 금방 말씀하신 바대로 학생들의 창의성을 길러 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압축성장·산업성장 시대에서는 어떤 지식의 전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마는 이제는 학생들한테 그러한 지식을 집어넣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잠재적인 재능이나 능력을 끄집어내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올해 전국에서 실시가 되고 있고, 그러한 자유학기제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다양한 융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교실의 모습이 상당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조용했던 교실이 왁자지껄해지고, 학생들이 수업에 임하는 태도도 상당히 달라져 있고, 수업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바꾸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토론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러한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는 좀 더 고등학교로도 확산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대학 입시도 바뀌어져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우택 의원** 제가 선거 때 보니까 학교 교육, 방과 후에 노란 차들, 학원 차들이 와서 전부 대기해서 애들이 교문 나오자마자 바로 실어 가더라고요. 그것 보면서 저는 ‘이것 공교육 무너지는 게 아닌가? 무너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장관과는 제가 사실은 동문 간인데, 우리 장관 생각이 더 많이 났어요. 공교육 살리는 데 정말 장관답게, 멋있게 한번 교육 정책을 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인식의 전환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제가 듣는 얘기로 도심 학생과 농산어촌 학생의 교과 성적이 대등하다고 그랬을 때 과연 어떤 학생이 더 우수한 학생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교육이 좀 더 살아나고 내실화되고 하면 사교육 시장이 들어올 틈새를 차단하고, 또 제도적으로 사교육을 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을 제가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한 이십여 차례 이삼백 명씩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토론을 해 왔습니다마는 학부모님들도 인식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고, 아이들이 학교에서의 어떤 행복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교과 성적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를 한 분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실지로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성적도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강제로 공부를 시키는 것보다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높은지 하는 것들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앞으로, 학부모님들이 이전에 학교 다니실 때의 관습이 배어 있는 부분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되는 코딩 교육, 전문인력이 필요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정우택 의원 제대로 준비가 되고 제대로 시행이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 부분 참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코딩 교육이라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딩 교육이라기보다는 영어로 말씀드리면, 최종합니다.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된 게…… 컴퓨터이셔널 싱킹(Computational Thinking)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정우택 의원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아니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기계적인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컴퓨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 갈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초등학교에서 2018년부터 필수 교과로 실과 과목 내에서 지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이 교원 양성 대학에, 적어도 초등학생들의 그러한 소프트웨어 교육만큼은 어떤 특정한 전공자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초등학교 교사들이 가르칠 수 있는 소양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교원대학 총장님들을 만나서 이미 그러한 소프트웨어 관련된 전공교육을 교원양성대학에서 실시할 것을 요청드린 상태이고, 그다음에 컴퓨터 등 하드웨어를 충분히 공급해 줘야 되는데 하드웨어가 워낙 빨리 변하기 때문에, 보통 5년 주기로 이것을 바꿔 줘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좀 더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것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번져 가고 있는

이 갈등의 문제, 저는 통합의 시대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영남권 신공항 문제라든지 또 지난 번의 사드 배치 이런 것에서 봤듯이 갈등의 현장에 국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이런 통합의 문제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계실 텐데, 이 이념과 계층 또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것을 넘어서 통합의 시대로 가야 하는데 과연 정부는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구상을 갖고 있는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갈등 문제가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갈등 해결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범정부적인 갈등 해결 시스템도 만들고 있지만 또 각 부처별로도 갈등관리 책임자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사회 전반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에서, 종전에는 각 부처의 업무만 살펴봤습니다마는 이제는 다른 부처와의 협업도 필요하고 또 민사회와의 협업도 필요하고 또 유관단체들과의 검토도 필요한데 그것을 정부의 입장에서만 본다고 하면 해결점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단체, 기관들의 또 민간의 전문가들과 함께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갈등 해결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주장의 방법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법적인 것도 결국 때법이라는 말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민주사회에서 합리적인 갈등 해결 시스템들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크지 않은 문제인데도 해결이 안 되고 오래 장기화되는 이런 일들도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정부는 정부대로 갈등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또 민간에는 민간대로 많은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도 민간 갈등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것이 소통하고 융합함으로써 사회 각계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큰 하나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가 현장을 많이 찾아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총리가 된 뒤에도 현장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매주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찾아 가면서, 현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지만 거기 답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도 듣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듣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고 사회가 같이 해결해 나갈 방법들을 만들었는데도 국민들이 모르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설명드리면서 정말 소통을 통해서 우리 문제의 핵들을 끄집어내고 또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은데, 결국 현장에서 제가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책상에 앉아서 또는 오라고 그래서 여러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가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또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이 우리 정책에 반영됨으로써, 이렇게 되면 현장의 이야기를 들은 정책들은 갈등 소지가 훨씬 적어집니다. 그런 시스템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가 '나' 중심의 사고에서 '우리' 중심의 사고로, 옛날에 우리 중심의 사고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나'보다는 '우리'가 함께 먼저 세워지고 또 잘살게 되고 발라지면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바뀌어지는 것이니까 이런 측면에서, 아까 의원님 캠페인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범국민적인 캠페인들을 통해서 양보하고 또 조정하고 타협하는 미덕들을 같이 길러 가는 것도 필요하다.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것이지만 정부가 좀 양보를 하고 대책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택 의원 3대 과제 중 하나로 제가 대통합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마는 그 물꼬를 트는 총리가 돼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 유념하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리우올림픽 펜싱 경기에서 박상영 선수의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외침은 우리 국민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고 하는 한목소리를 내는 정치권도 국민의 불편한 마음을 속 시원하게 풀어 주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사회 내부의 통제시스템과 윤리의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각 분야에서 포퓰리즘은 더욱 준동할 것이며 분열과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사회가 하나로 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 단합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주선 정우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통 의원님들이 30분 이내에 질문이 끝나는데 정우택 의원님은 55분 동안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정읍·고창 출신의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의원 전북 정읍·고창, 고창·정읍 유성엽 의원입니다.

박근혜정부도 어느새 4년차 임기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정부는 역대 최악의 국정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멸절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습니다.

명백한 경제정책의 실패로 임기 내 경제성장률은 2013년 2.9%, 14년 3.3%, 15년 2.6%로 평균 3%조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정부는 2.8% 성장을 전망하고 있지만 작년 4/4분기 0.7%, 올 1분기 0.5%, 2분기 0.8%로 3분기 연속 0%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 실업률은 12.5%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가 무려 18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제발 먹고살 수 있게 해 달라고, 제발 경제를 살려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지만 현 정부는 세계경제 불황 탓만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세계 평균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경제난이 심각해졌는지, 어떤 경제정책이 잘못된 것인지 원인조차 알지 못하니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희망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남북관계 또한 파탄 상태입니다. 70년대 중반의 상황으로 정확하게 40년 후퇴되었습니다.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남북관계를 20년 후퇴시킨 이명박 정부에 이어 현 정부 또한 개성공단 철수로 다시 20년을 후퇴시켰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의 남북관계는 1970년대 중반의 상황으로 퇴보하였고 그 결과 핵무기 개발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상황이 이토록 어려운데도 박근혜정부는 시종일관 불통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법률을 무시하는 억지를 끊임없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여당 내에서조

차도 지적을 받는 우병우도 끝까지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온 국민적 의혹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딱 잡아떼고만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증인을 한 명도 채택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박근혜정부를 법도 국회도 국민도 깡그리 무시하는, 억지만 부리는 ‘억지정부’로 규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감사합니다.

○유성엽 의원 지금까지 제가 박근혜정부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년 5개월 남았습시다마는 특단의 결단이 없는 한 별로 좋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까지를 감안해서 박근혜정부의 성적을 한번 매긴다면 백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총리께서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께서서 우리 경제를 걱정하시고 또 남북관계를 우려하시면서 여러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경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을 정부가 외국의 탓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제경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국제적인 경제적 위기가 있고 또 그동안 고도성장을 이루어 왔던 나라들이……

○유성엽 의원 총리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시간이, 지금 굉장히 촉박한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설명해 주시는 것보다는 오늘의 사정을 감안해서 짧게 질문에 대한 요지 위주로 답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알겠습니다.

○유성엽 의원 성적을 백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총리께서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국제경제가 어렵지만 저희는 저희대로 구조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 왔고 이런 노력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도…… 그런 평가에 우리가 좌우될 거는 아니습시다마는 우리 경제 방향이나 또 개혁의 노력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도 같이 유념해 주시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노력해 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남북관계 후퇴와 관련해서 그 문제는 꼭 말씀을 다시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런 남북관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그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북한이 핵 개발을, 핵 도발을 한 것이 문제고 이런 핵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지금 3년 7개월 됐습시다마는 그 3년 7개월 사이에 핵 도발을 할 수 있었던……

○유성엽 의원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지적했던 것은, 물론 북한이 핵 개발한 것이 잘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려하는 일이지요. 핵 개발이 안 됐어야 할 일인데, 어쨌든 핵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8년 동안,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정부 3년 넘게 압박과 봉쇄와 제재를 취해 왔지만 결국은 핵 개발을 초래하는 결과를 맞게 됐다, 결국은 실패한 거다,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남북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이걸 지적하는 것이요.

○국무총리 황교안 결국 그 책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회를 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원도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대화를 한다고 했지만 북한은 그것을 결국 핵 개발에, 핵 고도화에 사용했습니다. 그 문제의 책임은 북한에 있는 것이지, 저는 어느 정부든……

○유성엽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북한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어쨌든 상대방인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의 책임도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했던 것이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우리도 더 잘 해야 되겠지만……

○유성엽 의원 오늘 여러 가지 충분히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듣고요.

아까 정우택 의원님 질문 답변 과정에서 ‘미르재단, K스포츠 관련해서 허위 주장이라든지 보도 등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근거가 없는 주장이나 또 유언비어를 불법으로 유포하는 것이나 이런 불법적인 것은 어느 경우에도 바르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유성엽 의원** 그러면 어떻게 허위 보도로 소송을, 언론사를 고발하려고 그러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상응한 대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계자나, 저희들도 검토해 볼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은 아니지만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진실이 뭔지를 알리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런데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총리께서도 이것은 아마 보도를 보거나 보고를 받아서 아시겠지만 신청한 지 하루 만에 허가가 나갔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다음에 보름 만에 800억이 넘는 돈을 순식간에 모금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단기간 내에 모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렇지요, 그것도 인정하는 거지요?

또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허위로 돼 있고 출연도 하지 않은 사람, 발기인에 서명도 하지 않은 사람을 그 재단의 이사장으로 선임했다는 말이지요. 그것도 인정하는 거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것은 거둬 말씀드리지만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되고 그 증거에 의해서 판단이 돼야지 지금 단계에서 불법이다……

○**유성엽 의원** 좋습니다, 좋아요.

아니, 이 정도가 되면…… 통상 사단법인 신청해 가지고 문체부가 처리한 실적을 보면 그동안 20.6일이 걸렸어요. 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글세계화 사단법인 신청은 1년이 넘도록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허위로 만든 회의록을 가지고 하루 만에 허가가 나갔다, 보름 만에 800억 원을 모금했다 이것은 뭔가 정권 실세의 힘이 작용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총리, 좋습니다. 이것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좋겠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국정감사 말씀하셨습니다?

○**유성엽 의원** 국정감사 다음 주부터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정감사를 통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누가 주도했고 누구의 책임인지, 아니면 누가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건지 이것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규명되는 게 맞겠지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불법 부분에 관해서는 우선 증거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하루 만에 인가가 났다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거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절차가 다 갖추어지고 또 서류들이 갖춰져 있다 그러면 기간은……

○**유성엽 의원** 이례적으로 이 건의 경우만 하루 만에 났단 말이에요, 이 건만.

○**국무총리 황교안** 이번의 경우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하루나 이틀 만에 난 사례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성엽 의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어떻든 이것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겠지요, 정부를 위해서요?

○**국무총리 황교안** 어떤 형태로든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스크린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유성엽 의원**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이 관련해서 증인을 한 명도 채택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거절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증인채택의 문제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적정한 증인이나에 관한 논란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과연 부를 사람을 불렀느냐……

○**유성엽 의원** 그러니까 이 미르재단, K스포츠 관련해서는 한 명도 채택하지 못하겠다라고 버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증인적격이 있다고 하면 특정 당에서 반대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증인적격이 있느냐, 부를 만한 증인이나 그리고……

○**유성엽 의원** 아니, 한 명도 못 하겠다라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명도 못 하겠다……

○**국무총리 황교안** 부르지 않아야 될 사람 같으면 한 사람도 불러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꼭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많은 사람을 불러야 되겠지요. 그것은 이 사안은 한 명 이상은 꼭 불러야 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성엽 의원** 제가 그것은 새누리당이 잘못하

고 있는 거라고 지적을 하면서, 새누리당이 그러더라도 정부에서 자발적으로 내보내실 용의 없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누구를 내보내……

○유성엽 의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출석시켜서, 내보내서 증언할 용의 없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언론에 보도됐다는 것 때문에 내보낸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유성엽 의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까, 어차피 국정감사에서 다뤄 갈 것이기 때문에.

총리, 세월호 참사 34일째 되던 날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 담화문 발표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발표가 있었다는 것은 기억이 납니다.

○유성엽 의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해경을 지휘·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알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다.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어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논의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대체로 기억이 납니다.

○유성엽 의원 대통령의 이 엄중한 약속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1년 반 이상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11건의 안전을 접수해서 조사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성엽 의원 그러면 총리께서는 대통령이 이 담화문에서 밝힌 그대로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 말씀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항목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유성엽 의원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을 1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법을 의결해 줬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시행 일자가 못 박혀 있지 않습니다.

○유성엽 의원 부칙에 시행 일자가 박혀 있지

요.

○국무총리 황교안 법에는 임기가 2015년……

○유성엽 의원 아니, 특별법.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유성엽 의원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법 부칙에 들어 있잖아요.

○국무총리 황교안 법에는 세월호 특조위의 임기가……

○유성엽 의원 아니, 지금 제가 임기 말씀하는 게 아니라 특별법의 시행일.

○국무총리 황교안 어느 특별법 말씀하십니까?

○유성엽 의원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렇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런데 특별법 시행령 언제 만들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그 날짜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성엽 의원 대략 몇 월 달쯤 같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그건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엽 의원 5월 11일입니다.

특별법을 1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법을 통과시켜 줬는데 그 특별법을 시행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5월 11일 날짜로 제정·공포를 했어요.

왜 이렇게 느장을 부렸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누가 느장을 부렸다는지는 제가 짐작은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유성엽 의원 누가 그러면 느장을 부렸어요? 충분히 답변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정부는 정부대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만든다고 하고 시행령을 만드는 데는 여러 쟁점들이 있으니까 그 쟁점들에 관해서 관계 단체들과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에서도 또 많은 논의를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정부는 법 시행과 맞춰서 이것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차일피일 하면서 몇 달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제가 보기에요 세월호특별조사

위원회는 국회로부터도, 사법부로부터도, 행정부로부터도 독립된 행정위원회입니다. 여기가 독립 위원회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래서 세월호 특조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해수부가 제정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요.

더군다나 대통령께서도 ‘해수부도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했잖아요. 특조위의 조사대상이 해수부인데 그 해수부에다가 특별법 시행령을 맡길 권한을 줘요?

○국무총리 황교안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책임을 질 부처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성엽 의원 해수부가 특조위의 조사대상이라니까요.

그것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법을 만드는 것은 결국 국회가 만드는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는 여러 부처들의 의견도 있고 그렇지만은 또 그런 것들을 모아 국회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유성엽 의원 아니, 제가 시행령을 말하는 거예요, 시행령.

○국무총리 황교안 그러니까 국회가 법을 만들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지요. 우리가 법은 해수부를 주무부처로 했는데 시행령은 또 다른 데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건 같은 부처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유성엽 의원 과거에 말이지요, 민간 화해·진실 이런 진상규명 시행령은 서무 부처인 행자부가 만들었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서무 부처……

○유성엽 의원 시행령을 만들 때 소관이 없는 경우에는 형식상 행자부가 하는 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소관이 불분명하고 없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관이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유성엽 의원 해수부가 이것 시행주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어떻든 그 문제를 놓아두고.

그런 해수부한테 맡겨 놓으니 호락호락 만들겠어요, 조사받고 싶어서? 누장을 부린 것입니다, 이래저래 핑계를 대고 트집을 잡아서.

좋습니다. 왜 그런데 세월호 특조위를 가동시킬 수 있는, 운영시킬 수 있는 예산 89억 원을

왜 8월 4일 날에서야 의결했습니까? 바로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가동하도록? 왜 이렇게 늦추었습니까? 늦춘 이유가 뭐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마찬가지로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확인해 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에 관한 협의라든지, 예산에 관한 협의 전에 조직이 필요합니다. 조직이 있고 인원이 확정되어야 예산이 나갈 것 아닙니까? 조직을 만드는 데 또 많은 논란이 있어서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어떤 조직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유가족들은 유가족들대로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 그 조직은 안 된다, 그 조직에는 누구 들여놓으면 안 된다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우선 조직 자체가 만들어지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유성엽 의원 어떻든 제가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누장 부리고 예산 배정하는 것 8월 달이 되어서야 주면서 누장을 부릴 대로 부리다가 6월 30일이 딱 되니까, 금년 6월 30일이 되니까 1년 6개월 되었기 때문에 문 닫아라 이렇게 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위원회 활동기간의 개산점, 시작을 무엇으로 보아야 합니까? 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정부가 뭐 문 닫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해야 된다, 지금 세월호 특별법 부칙에 세월호 특조위의 위원들의 임기가 2015년 1월 1일 날 개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최초의…… 최초의 위원들은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좋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7조에 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라는 것 들어 있지요, 세월호 특별법 7조에?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엽 의원 아니, 설명이 아니라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7조에?

○국무총리 황교안 7조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유성엽 의원 읽어 보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7조는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년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활동을 종료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활동의 종기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라는 것은 3개월도 될 수 있고 6개월도 될 수 있고……

○**유성엽 의원** 그러니까 구성을 마친 날이라고 되어 있지요, 시작이?

○**국무총리 황교안** 그날로부터 1년 이내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러니까 1년이든 뒤에 또 연장할 때는 6개월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언제 개시되었습니까? 우리들 20대 국회의원들 임기가 언제 개시되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것은 제가 5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5월 30일.

○**유성엽 의원** 우리 원 구성은 언제 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것은 한 십머칠 지난 뒤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아니요, 이번에 굉장히 빨리 했잖아요, 원 구성.

○**국무총리 황교안** 제 기억에는 십머칠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이번에 원 구성을 굉장히 빨리 했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빨리 했습니다. 빨리 해서 제가 십머칠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하고 국회의 원 구성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개념이?

○**국무총리 황교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유성엽 의원** 다를 수가 있단지요. 법을 전공하신 분이……

○**국무총리 황교안** 아니, 법마다 다릅니다. 법마다 다르고 지금 세월호 특별법을 아까 말씀하시는……

○**유성엽 의원** 그렇게 법마다 다르다고 억지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대통령 담화문을 한번 회상해 보세요. 특검이라도 해서 낱낱이 밝히려 한다고 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위원회가 충분한 기간을 확보해서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을 해석해 주는 것이 합당한 태도지, 약속에 충실하

게 이행하는 태도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못 하게 하려고, 무력화시키고 방해시키고 누장 부리는 데 일관했잖아요, 지금.

○**국무총리 황교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래 놓고 법에서 그것을……

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1년 플러스 6개월입니다, 이게.

○**국무총리 황교안** 1년 이내, 플러스 6개월입니다.

○**유성엽 의원** 그러니까 1년 6개월이예요, 어떤 든 최장.

○**국무총리 황교안** 활동기간이 그렇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러면 위원회가 언제 구성되었느냐 이거예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러니까 그 구성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마치라는 것이지 1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성엽 의원** 지금 위원장 언제 선임했습니까?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 언제 선임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날짜들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성엽 의원** 특조위 위원장 언제 선임했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위원장을 이완구 국무총리로부터 받은 날이 3월 5일 날입니다, 2015년 3월 5일.

○**국무총리 황교안** 예.

○**유성엽 의원** 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은 누가 위원장이고 누가 부위원장이고 분과가 어떻게 구성되고 이것이 위원회 구성 아니예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유성엽 의원** 그러면 아무리 예산이야 8월 4일 늦게 줬다고 하더라도, 8월 4일 날 늦게 줬다 하더라도 적어도 백번 양보해도 3월 달부터 위원회 활동이 개시된 것으로 봐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백번을 양보해도? 그런데 왜 금년 6월 30일 날 문을 닫게 해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부칙 제1조에는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조에는 ‘최초로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그러니까 2015년 1월 1일입니다—이 날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국회에서 같이 만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본다면 결국 임기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의 임기가 끝난 것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다른 것보다도 이 법 명문규정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의 임기가 끝났는데, 그런데 활동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뭐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활동이라는 것은 임기는 1년 반을 보장하고 있는데 활동은……

**○유성엽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뭐다 가기는 갔습니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냥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하도 답답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담화문 기억하세요, 아까 제가 한번 읽어 드렸는데?

**○국무총리 황교안** 예.

**○유성엽 의원**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알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다.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어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논의해 달라.”

제가 여기서 세월호 특조위가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아닙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조사 활동을 성실히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든 취지를 오히려 깡그리 무시하고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밝힌 이러한 약속을 정부는 이행하는 커녕 거꾸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이렇고도 약속을 지키고 법률을 지키는 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억지를 부리고 거짓말을 하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담화문을 발표했어? 발표했으면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나 공직자는 법에 의해서, 법에 준거해서, 법에 매일 것은

없지만 법에 근거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유성엽 의원** 법을 잘못 해석……

누가 법을 해석했습니까, 이 법을 그렇게?

**○국무총리 황교안** 아니, 이 법이 해석을 누가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법대로 보면 그런 것입니다. 법에 위원들의 임기는……

**○유성엽 의원** 그것은 위원들의 임기 개시가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1월 1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누가 했느냐는 말이에요.

**○국무총리 황교안** 임기가 끝나면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이 임기가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임기가 있어야 되는데 임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활동하기 어렵다. 그리고……

**○유성엽 의원** 그렇게 안 되는 쪽으로, 안 되는 쪽으로 법 해석을 몰고 가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정부의 그런 불성실한 약속 파기에 대해서 저는 개탄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법은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 규정대로……

**○유성엽 의원** 외부에 물어봤습니까? 누구한테라도 의뢰해 봤습니까, 법 해석에 대해서?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법을 30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성엽 의원** 그러면 엉터리로 30년 하신 것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뭐 그렇게 평가하시면……

**○유성엽 의원** 그런 해석을……

**○국무총리 황교안** 평가가 뭐 그렇습니다마는, 이 법 자체는 해석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법을 보면 여기 답이 있는 것입니다.

**○유성엽 의원** 저는 지금이라도, 지금 현재 새누리당에서 안전조정 절차를 신청을 해 놓은 모양이던데 안전조정 절차를 신청한 것 알고 계시지요? 이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안전조정 절차 신청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거 신청해 놓은 모양인데 이것은 법 개정도 필요 없는 사항이에요. 그냥 법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1년 6개월을 보장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8월 달에 예산 배정이 되었으니까 내년 2월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백번을 양보해서 3월 달에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



기 때문에 금년 9월 30일까지는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6월 30일부터 억지로 문을 닫게 해 가지고 지금 몇 달 공쳤습니까? 그거 다 인정해서 한 11월까지는 인정을 해 주세요.

선체 인양 언제 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인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 인양업체가 이달 말까지 인양하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일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아마 그 목표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소홀하거나 또는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의 해석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끝났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체가 물속에 있으니까 그 선체를 인양하면 그것을 조사를 해서 어떤 피해, 남아 있는 의혹들도 더 찾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고……

○유성엽 의원 거듭해서……

○국무총리 황교안 그 선체를 같이 살펴보는 과정에서 아마 유가족들이나 특조위의 관계자분들도 함께 참여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최소한 선체 인양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져야 특조위의 조사를 그래도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쉽게라도.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법에 대한 해석을 잘 하셔서 법 개정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상관 없이라도 제대로 좀 정부가 잃어버린 것까지 찾아서 보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들어가십시오, 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의장님!

○부의장 박주선 원래 마이크가 꺼지면 질문을 멈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성엽 의원 지금 현재 특조위에서 국회에다가 특검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법사위에 회부가 되어 있는데 지금 특검법을 보면 그 특검의 결정은 국회의 의결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본회의에 상정해서, 저렇게 정부에서 잘못된 법 해석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국회에서라도 제대로 의결해서 특검이라도 하게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부의장 박주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 시간은 대정부질의 시간이지 지금 저 의장한테 질의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유성엽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주선 잘 알겠습니다.

○유성엽 의원 여하튼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박주선 예.

○유성엽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주선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중구성동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익표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중구성동구갑 국회의원 홍익표입니다.

조운선 장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기 전에 국무위원 여러분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당이 다르고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찰이 있고, 있을 수 있겠지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또는 대정부질문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최소한의 양식과 상식을 기대하겠습니다.

조운선 장관님, 미르·K스포츠 재단 문제 잘 알고 계시지요? 미르하고 K스포츠재단 얘기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운선 예, 그런데 사전에 저에게 말씀하신 질의 내용이 의원님으로부터는 없어서……

○홍익표 의원 아니,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저는 그냥 묻겠습니다.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정부 측에서는 현재까지는 확인된 의혹이 없다 현재 이런 상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운선 모금 과정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홍익표 의원 그러니까 현재 재단 설립 과정에서 부실 내지는 서류 조작 의혹이 제기됐고 정부는 그렇지 않다, 지금 그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거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운선 지금 말씀하시는 설립허가 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창립총회가 대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면회의가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서 설립 절차에

하자가 있다라는 말씀이시라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여러 가지로 정치적 공방이 되고 대통령께도 부담이 되고 있는 사안이에요. 절차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이 있어서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데, 차라리 재단 설립을 취소하거나 그럴 용의는 있으세요? 검토해 볼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짧게 예, 아니요만 답변하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미 검토한 바에 의하면 재단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홍익표 의원** 검토했더니 방법이 없다,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예,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또 외부에 법률 자문을 구한 바에 의하면 현재로서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홍익표 의원** 청와대에서도 계셨고 지금 두 번째, 이 정부 들어서 두 번째 장관을 하고 계신데 어느 게 대통령을 위해서 훌륭한 선택이고 좋은 선택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총리께서 대정부질문 내내 답변을 증거하고 사실만 이야기하시기에 저는 일베 회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으실 걸로 믿는데.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요?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비유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홍익표 의원** 총리께서는 아까 제가 문광부장관에게 질문드렸던 것처럼 이 재단 문제에 대해서 아예 해체나 설립 취소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 없으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검토한다기보다도 필요하면 소관 부처에서 판단해야 될 텐데 아까 문체부장관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의 검토 결과로서는 그것의 설립을 취소할 그런 사유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 총리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정무적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이 더 이상 국가적 에너지

가 소비되거나 정쟁이 돼서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되고 정치권에도 전체 그리고 국민에게도 부담이 된다면 이미 제가 보기에는 그 재단 설립 자체가 국가적으로 마이너스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일단 허가된 것을 취소할 때는 또 취소의 요건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의혹이 제기됐다고 그래서 취소하게 되면 아마 재단에서 또 문체부 상대로 소송을 낼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에 합당한 그런 자료들이 있고 판단이 뒤따를 때 가능한 것이지요.

○**홍익표 의원** 이미 허위 서류 제출이나 조작만 갖고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 되는데 그렇게 판단 안 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우선 그 자체가 어떤 내용에 위조가 있었던지 또 허위 조작이 있었느냐 하는 이런 부분 자체가 규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다른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요. 지금 저희들의 판단으로서는, 아까 문체부 판단으로서는 설립 취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 제가 도덕경 얘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지도자에 대한 분류가 몇 개 있는데 가장 좋은 지도자는 있는지 없는지,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지도자가 제일 좋고요. 사실 현대 정치에서 그것은 어렵겠지요. 두 번째 좋은 지도자는 아랫사람이, 주변 사람과 친근하고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다음 지도자는 두려운 자고요. 마지막은 업신여김당하는 지도자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어떤 평가를 받는지 총리께서 민심을 들어 주시고, 두 번째 이 재단들로 인해서 대통령께 누가 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게 대통령을 보필하는 자세지 대통령이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를 않고……

○**홍익표 의원** 제가 정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천망회회 소이불실(天網恢恢 疏而不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늘이 영성해 보여도요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재단 문제 이렇게 무리하게 끌고 가시면 이미 지난 5공화국이든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든 이러한 무리한, 재벌로부터 돈을 모으고 그 과정에서 측근에 대한 비리가 불거졌을 때 그 결과가 어떤지는 우리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의원 저도 그 전제로 한 게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한 부담을 사전에 총리께서 풀어 주는 게 어떠냐 하는 것으로 제안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알고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 피해자가 얼마인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가습기 피해를 당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조사 결과 나온 인원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누가 조사했고 어떤 판단으로 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적지 않은 인원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해서 정부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 자료를 한번 봐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정부 측의 사망자는 현재까지 한 189명이구요. 그다음에 신고 접수된 것은 9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피해신고 접수 기준으로 했을 때 3500명이 넘습니다, 피해 신고가. 지난 1994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7년 동안 어마어마한 사회적 재난의 피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한번 보면 정부와 국회 그리고 2011년부터 민사소송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PPT에 나오지만.

그러나 이게 제대로 수사된 게 금년 1월 달 들어와서, 검찰에서 수사지휘부가 만들어지면서 제대로 수사된 게 금년 1월부터입니다. 누장수사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권과 정부 모두가 그동안 직무유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도덕한 기업과 정부의 무능 그리고 정치권의 무관심이 이 사건을 만들었고 키웠고 현재까지 끌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련의 과정들, 제가 알기로는 2006년인가요? 그때부터 아마 문제 제기가 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도 여러 번 검증을 했는데 검증 결과 이것의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또는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서 조사가 상당히 오래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2009년, 11년 이경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결과가 나와서 그것이 과연 어떤 인과관계를 통해서 연결되어 온 것인가에 관한 조사가 또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선 가습기살균제가 들어가 있는 것은 수거하면서……

○홍익표 의원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조치들을 해 왔기 때문에……

○홍익표 의원 총리께서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이건 제가 박근혜정부의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94년 이래 누적된 과오에 대해서 유가족들에게 사과 한 말씀 할 수 없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홍익표 의원 아니, 사과 한마디 하실 수 없나고요?

옥시레킷벤키저 본사가 엇그제 사과를 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더 민감하게 잘 챙겼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2000년대의 우리 판단기준과 또 그동안의 기술적인 수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상이 밝혀진 뒤에, 이것이 결국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뒤에 저희들은 어떤 분들에 피해가 있었는가를 조사해서 가급적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고, 그런 점검과정에서 소위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해 냈었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된 뒤에 수사가 진행돼 가지고 지금 처벌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 총리,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돼서 물론 원천적인 책임은 기업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산업부, 노동부, 복지부, 환경부 등 유관부처의 책임도 간단치가 않아요. ‘묻지마 규제완화’가 결국 이러한 사

태를 초래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정 전반을 포괄하는 총리 입장에서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 못 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연혁적인 말씀을 꼭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피해를 보상하고, 보전하고 원인을 규명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익표 의원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 이와 관련된 보고서 채택한 것 보고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보고를 제가 받진 않았습니 다만 그런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 보시면 9월 15일 날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에 대한 국가의무를 강조했고요. 유해물질 정보접근권을 보장하지 못한 법의 허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한 포괄적인 사과 그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영구추념물 및 구제책 제시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것 보고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보고를 받진 않았습니 다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 이게 인명 손실이 간단치가 않은 사건입니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홍익표 의원 사회적 재난입니다. 그렇게 판단 안 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큰 재난이고 그래서 엄중한 의지를 가지고 정부가 지금 원인 규명을 하고 피해자를 찾고 또 필요한 데로 지원을 하고 도움을 드리고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영국 레킷벤키저 본사 가서 사과받은 내용 보고받으셨나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내용은 자세하게 보고 들지 못했습니다.

○홍익표 의원 카푸어 레킷벤키저 대표와 면담을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그래서 대표가 사과를 했고, 특히 산소통을 달고 살아야 되는 성준 군과 카푸어 대표가 직접 통화하면서 사과도 했습니다. 그 장면 못 보셨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제가 이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홍익표 의원 저는 총리께서 성준 군을 한번 만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누구를……

○홍익표 의원 피해자인 성준 군을 한번 만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싶습니다. 그럴 용의 있으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익표 의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좀 움직이시면 안 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필요하면 움직이겠습니다만 우선 움직이려고 하면 누구를 만날 건가 또 어떤 얘기를 들어 볼 건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익표 의원 법과 제도로 정치를 하지만 때로는 마음과 인정으로도 정치를 해야 됩니다. 총리께서 그런 생각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또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의원 가슴기살균제 피해사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안고 있어요. 지금 미흡한 게 몇 개 있는데, 전반적으로 검찰에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도 자리에 계시지만, 검찰이 2011년에 수사를 지휘하면서, 검찰수사를 중단하면서 능장수사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초기 단계에 제대로 증거 수집을 못 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관련 기업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증거를 은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줬고 피해가 확산되는 이 유도 제공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특히 김앤장 관련해서 보고받으셨나요, 총리께서?

○국무총리 황교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홍익표 의원 김앤장이 옥시의 법률자문회사인데 제대로 된 조사 한번 안 하고 그냥 면죄부 줬습니다. 특히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그다음 날 김앤장 혐의 없다고 했어요, 관련 변호사들.

물론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긍정적인 일도 했습니다. 김앤장 전체를 제가 폄하하거나 매도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대리인을 담당했던

몇 명의 변호인과 변리사는 분명히 증거 인멸이나 증거 조작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제대로 된 조사를 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검찰이 그 사실을 인정도 안 해요. 그리고 면죄부를 줍니다.

법무부장관도 하셨는데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는 거대 로펌회사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니냐?’ ‘검찰이 봐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검찰이 김앤장 봐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봐주고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런 대표 기업들 몇 있습니다. 그 대표 기업들이 잘못된 것에 관해서는 오히려 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의원님 아까 검찰이 능장수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나중에 장관께 물어보시겠지만,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게 2011년도에 수사 의뢰가 됐는지, 고발이 됐는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그 기술적인 검증이 끝날 때까지 처리를 중지한다, 시한부 기소중지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해봤는데 연구조사 결과가 늦었습니다. 늦어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한 2~3년 지난 다음에 결정이 나오니까 바로 재기수사를 해서 그것을 경찰에 지휘를 했고 경찰에서 제 기억에 한 6개월 정도 만에 조사를 마쳐 가지고 검찰로 보냈고 그것이 금년 1월 달이었습시다. 그래서……

○**홍익표 의원** 총리, 답변 됐고요.

제가 법무부장관에게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들어가고요.

법무부장관 좀 나와 보십시오.

김앤장 관련 법률대리인들에 대한 수사·조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 무혐의라면서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무혐의로 결정한 바 없습니다. 지금 이 사건 전체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한 바 없습니다.

○**홍익표 의원** 그러면 관련 법률대리인들에 대

한 수사·조사 할 겁니까? 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검찰에서 수사의 필요성과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수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홍익표 의원** 그러니까 증거 조작과 관련해서, 변호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이런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고 수사가 진행 중에 으니까,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홍익표 의원** 아니, 결론을 묻는 게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 그리고 영국에 사법공조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사법공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이것도 능장수사하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해서, 이 조사 다 끝나고 언제 소환할 겁니까?

국가 간 사법공조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작 요청한 이후로도 짧게는 3~4개월에서 많게는 한 1년 이상 걸릴 때가 있는데…… 그렇죠?

○**법무부장관 김현웅**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부의장, 정세균 의장과 사회교대)

○**홍익표 의원** 지금 진행되는 조사나 재판 일정과 맞춰서 영국 본사 또는 외국인들에 대한 사법수사를 차질 없이 할 수 있게 공조할 수 있습니까? 장관이 책임질 수 있어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 노력만 하시지 말고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지요, 장관께서.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 참, 정말……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이 사건을 2011년부터 지금까지 끌어왔고 앞으로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도록 지휘 감독하겠습니다.

○**홍익표 의원** 들어가시고, 총리 잠깐 나오시지요.

지금 현재 남은 몇 가지 과제에 대해서 제가 총리께 부탁드리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히 CMIT/MIT 계열의 인과성에 대한 동물성 과학조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속히 조사해서 폐 손상 이외의 환자들에 대한 구제조치를 정부가 빨리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련 기업들과 협의를 해서 정부가 피해자들 구제를 위한 기금 설립에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세퓨 같은 경우는 회사가 망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보상받을 길이 막혀 있어요. 이것은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검토하실 용의 있으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CMIT/MIT와 관련된 과학적인 조사들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마는 차제에 면밀하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범정부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 손상 이외의 부분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것을 동시에 하려고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필요한 부분들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지원 문제에 관해서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겠습니다. 그게 기금을 만드는 방법이 될지 또 다른 방법이 될지 이 부분은 주무부처와 함께 상의를 해 보도록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퓨나 이렇게 이미 도산해서 없는 이런 기업들로 인한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게 가해자의 책임인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정부나 아니면 사회가 도와드리고 보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 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은 다

시 한번 정리하면 기업의 부도덕성과 정부의 못지마 규제 완화, 무책임이 합쳐져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돈으로 사고팔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장경제는 필요하지만 시장경제가 이 사회를 과도하게 지배하면서 시장사회에서 모든 것이 물질만능과 돈으로 평가받는 사회가 됐을 때 어떠한 피해가 오는지를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향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적 조사를 통해서 3·4등급 피해자 구제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레킷벤커저 및 SK케미칼을 포함한 국내 기업 및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검찰수사가 필요합니다. 또 관련 기업의 책임 있는 배상과 사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정부나 관련 기업들이 피해자 유가족을 위한 기금 조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 는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서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울러서 다국적기업에 의한 이러한 범죄행위, 개도국에서 일어난 이런 환경안전에 대한, 유해성에 대한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저는 이 문제를 차제에 WTO 차원에서 통상규범으로 만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가습기 피해자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국제사회와의 규범도 있고 또 우리 안의, 우리 국내의 법적 제재들도 있고 장치들도 있고 또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련 부처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이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익표 의원** 제가 하나 더 주제를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에서의 양성평등 문제 좀 얘기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나 보시지요.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지수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낮은 출산율 얘기가 있는데, 우리 출산율 매우 낮지요. 이 출산율이 매우 낮고, 이미 많이 지적됐습니다,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인구증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장래 인구증가율 전망으로. 그런데 이 원인이 단순하게 소득양극화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성 문제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여성, OECD의 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115위입니다. 이 115위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여성의 경제적 참여와 기회의 문제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낮은 점수를 받고 있어요, 이게 125등이예요.

우리나라 지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해 옵니다. 작년보다 조금 올랐지만 기본적으로 10년 전, 5년 전에 비해서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노인 및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을 봐도 여성과 청소년의 고용률이 현격히 낮습니다. 특히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 줄이 여성인데 평균에 훨씬 밑돕니다.

성별임금격차,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크게 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가장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는 거지요.

유리천장 지수도 낮습니다. 한국이 OECD 국가 중 꼴등입니다. 여성 임원 비율도 0.4%에 불과하고요. 여성·노인의 빈곤 비율도 세계 최대입니다. 최고 수준입니다.

총리께서는 부산지검에 계실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산 여자가 드세서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맞는다’ 이런 얘기한 적 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때 아마 특정 영역의 이런 분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그분들이 술이나 또 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는데……

○홍익표 의원 어쨌든 그 당시의 표현상 부적절한 부분에서 그것은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정확하게 제가 표현하지 못하고 간혹이라도 그 문제 때문에 그 특정 지역 여성분들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에 말씀드렸고, 지금도 입장이 같습니다.

○홍익표 의원 제가 총리께 그 문제를 그냥 말

꼬리를 잡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정치권 또는 정부의 젠더의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주의해야 될 일이고, 우리 한국 여성의 현실이 이미 제가 누차 지금 지표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시장 참여율이 대단히 낮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성별 임금 격차가 매우 높고 최하위권이지요.

그다음에 불안정한 종사자들, 즉 비정규직에서 대부분 여성들이,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는 차별도 받지만 여성이라는 차별을 근원적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여성이 경력단절 할 때 왜 일하는 여성이 일 그만두는지 아세요?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 여러 가지 못 들으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홍익표 의원 첫째, 결혼할 때, 두 번째 출산할 때……

○의장 정세균 홍익표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의원 예.

세 번째, 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이 세 가지 이유로 여성들이 대개 30대 초중반에 일을 그만둡니다. 이러한 연령의 여성들에 대한 대책을, 지금 정부의 고용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곁도는 게 대단히 남성 근로자들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비정규직 문제나 차별받는 문제들의 핵심은 여성 근로자들에 다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남성 중심의 고용대책이나 복지대책 사회안정대책을 만들다 보니까 현실하고 곁도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페미니즘은 보다 더 평등한 세상 그다음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세상을 사는 게 21세기 페미니즘이 지향하는 사회라고 했습니다. 엇그제 반기문 총장도 유엔 마지막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 가지 덧붙인다면 강남역 사건과 같이 우리 사회에는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좀 더 안전한 사회까지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사회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런 문제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국정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에 여러 가지로 많은 교훈을 제가 얻었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지금도 여전히 여성, 양성 평등의 원칙에 좀 모자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여성의 인권 문제라든지 또 편차를 개선하는 문제 이것들이 출발이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은 외국에 못지않게 빠른 속도로 투자도 하고 자원도 기르고 있고 또 배려도 하고 챙길 부분 챙기고 있습니다.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아직도 양성 평등 사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금은 많은 예산 투자도 하고 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정세균** 홍익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임이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황교안 국무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현장 노동자 출신 임이자 의원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임이자 의원** 장관님, 작년 한 해 동안 밤잠 설쳐 가면서 애간장 다 태우면서 노사정 대타협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1여 년이 경과되고 있는데, 그 핵심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작년에 저희들이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력이 너무 낮아서 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또 금년부터 정년 60세가 시행되면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이 안고 있는 노동시장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고쳐서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주자라고 해서 노동 개혁을, 대타협을 추진했습니다.

대타협을 추진하게 된 큰 내용으로 보면 우선

우리나라가 일자리 창출력이 떨어진 이유가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중성장 시대에 들어선 것도 있지만 우리 노동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고용계약 관계가 경직적이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직접채용을 하지 아니하고 도급을 주거나 일용·임시직으로 쓰기 때문에 중간의 일자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장시간 동안 일을 하기 때문에 일하는 분들은 장시간 하지만 일이 없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안 주어지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앞으로 미래 사회는 일자리 이동이 굉장히 빈번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동 간에 사회안전망이 보강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비정규직들에 대해서 격차를 좀 해소하고 고용을 안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았고요.

문제는 우리 노동시장 내의 상위 10%와 하위 10% 격차가 4.7배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격차가 큰 세 나라,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격차를 줄여야, 소위 중소·중견 기업의 일자리가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되어야 실질적으로 청년 고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담기로 하고 노사정 간의 대타협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임이자 의원** 지난 노사정 대타협을 바탕으로 해서 제19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노동 개혁 법안 내용과 주요 쟁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렇습니다. 노사정 대타협에서 타협을 하면서 저희들이 일부는 법 개정을 통해서 또 일부는 현장의 노사가 노력을 통해서 관행을 고쳐서 우리 대한민국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규율을 투명하고 유연하게 해서 일자리를 더 늘리고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자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부분이 다섯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지금도 현장에 어떤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안 한대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에 대법원에서 판결 내린 것을 근거로 해서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위 그로 인한 갈등을 해소해서 기업들이 근로



자를 채용하는 데 두려움을 좀 없애 주자라고 해서 그 내용을 정리했구요.

두 번째는 근로시간, 야간·연장·휴일 근로에 대한 해석도 법원별로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나치게 우리가 근로시간이 길기 때문에 휴일과 연장근로를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노사정 간에 향후 4년 동안에 단계적으로 줄이고 또 급격하게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 근로자들 입장에서 휴일·연장 근로가 줄어들기 때문에 1인당 약 49만 원 정도 임금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줄어드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줄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줄이는 게 좋겠다고 해서 4단계로 하면서 또 특별히 일시적인 업무량이 증가를 했을 경우에는 4년 동안에 대해서 휴일근로를 추가로 연장해서 60시간으로 갔다가 나중에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단계적 접근 방법을 저희들이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안전망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현재의 우리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평균임금의 50% 수준인데 이 부분을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올리고, 현재 또 우리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90일에서 240일입니다. 이 부분을 30일 추가를 해서 120일에서 270일로 늘려서 사회안전망을 좀 튼튼히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현재는 일을 하다 다쳤을 경우에는 국가가 산재를 보상해 주고 있지만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의 경우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장 내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 통근버스를 타고 오다 다쳤을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을 하는데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자기 차로 가거나 대중교통을 타고 갈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그런 격차 해소 부분도 있고 해서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상을 해 주는, 산재로 인정하자라는 법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26만 명 정도가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실업급여의 경우는 현재 125만 명 정도가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지급 수준을 높이고 지급 기간을 늘려 주게 되면 그 대상도 한 4

만 명 추가돼서 129만 명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서 지금, 소위 수혜 수준도 현재는 평균 496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준과 연장을 하게 되면 167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난 약 643만 원으로 더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되어 있고요.

근로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약 286만 명이 집에 가서 자녀들과 저녁을 함께할 수 있는 저녁이 있는 삶을 할 수 있을 뿐더러 약 15만 명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OECD에서 우리 노동시장을 평가를 하면서 우리 노동시장의 규율에 대해서 개별해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를 경직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 기간제와 파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은 경직적인데 격차는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와 파견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수준으로 기간과 규제 부분은 좀 풀어 주면서 격차를 해소하는 쪽으로 가자는 내용, 기간제법 개정안과 소위 장년층에게 일자리 기회를 더 많이 주자는 파견법 개정안 그렇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이자 의원** 가장 첨예하게 대립됐던 쟁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우선 근로기준법의 경우는 통상임금의 정의에 대해서 일단 달라지는데요 저희들이 대법원 판결대로 정의를 하겠다고 해서 현재는 큰 쟁점이 없구요.

파견법의 경우에 있어서 파견제도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 논쟁이 있는데 저희들은 정기적인 노동시장의 불확실성과 소위 경직성을 해소해 주게 되면 기업들이 가급적 직접 채용하기 때문에 소위 비정규직은 늘어나지 않는다, 크게 전체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 파견의 허용 업종을 저희들이 좀 늘려 잡는 이유는, 우리 노동시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무기계약직이라는 정규직 시장과 중간에 차별을 해소하지 못하도록,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기간제·파견 이것은 국가가 법으로 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을 못 하는 보호받는 영역입니다. 이 규제가 있는 이후로 우리 노동시장에 소위 말해서 하도급, 임시·일용 쪽에 또 노동시장이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단계 구조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파견제도를 넓히게 되면 우선은 일자리 자체가 늘어날 뿐만 아니고 임시·일용으로 가 있는 이 영역이 파견으로 와서 보호를 받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계, 일부 노동단체에서는 파견 자리가 늘어난다고 보고 있는 그런 쟁점들이 있습니다.

○**임이자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정부 노동 개혁과 관련되어 가지고 노동유연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게 무슨 개혁이나, 개선이지', 그러나 또 다른 노동의 안정성을 주장하고 지향하는 노동계에서는 '이게 무슨 노동 개혁이나, 노동 계약이지'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 나가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저와 한국노총 위원장, 그다음에 경총 회장, 노사정위원장이 거의 1년에 걸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혁을 하면서 어떤 수위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우리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주려면 정말 우리 노동시장 내의 경직적인 요소를 풀어 줘야 된다고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경직성에 관련해서 우리 개별하고 부분은 OECD 중에, 숫자가 높은 게 경직적입니다, OECD 34개국 중에 우리가 23위 정도 되고 또 기간·파견 규제 기간도 2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업종도 제한되어 있어서 기간·파견과 관련된 부분은 34개국 중 26위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정리해고는 저희가 굉장히 유연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월드뱅크나 WEF 등에서는 우리 고용환경, 해고비용 이런 부분에서는 매우 경직적으로 백십몇 등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경영계에서는 법으로 소위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해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입법을 해 달라라고 했던 부분도 있고, 더불어서 지금 우리 취업규칙이 기업 내의 모든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기업 내의 헌법과 같은 것이 취업규칙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법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개정할 때는 근로자 대표 의견만 들으면 되고 불리하게 개정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 내의 현상이나 사회 현상은 여

러 개가 복합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불리한지, 어떤 부분이 유리한지 판단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5개를 고치는데 4개가 유리하고 하나가 불리했을 때 과연 이것을 유리한 것으로 봐야 될 것인가, 불리하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을 입법으로 해결해 달라……

일본의 경우는 근로계약법에 의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법으로 명쾌히 해 줘야 유연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들을 했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노사, 우리 노동시장 규율의 경직성 중에 또 경영계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른 나라는 파업하면 다 대체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대체를 금지를 해서 생산 차질을 더 크게 하고 기업이 파업을 하게 되는, 이렇게 대응 수단을 없게 하느냐' 하는 굉장히 좀…… 그래서 '대체를 허용하게 해 달라'는 요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더불어서 노사 당사자가 '우리 회사의 임금협약을 맺어서 그것을 1년을 적용할지 2년을 적용할지 3년을 적용할지는 우리 당사자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왜 법으로 1년으로 딱 묶어서 매년 교섭하고 파업하고 이것을 반복하게 정부가 조장을 하느냐, 선진국처럼 소위 유효기간에 대해서도 풀어 달라'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노동시장 개선을 하는데……

(「지금 강의 듣는 게 아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들어 봐요」 하는 의원 있음)

정부가……

(「적당히 하셔야지!」 하는 의원 있음)

정부가 규율을 정해 놓고 그 규율에 맞게끔 정부가 주도해서 개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노사정 대타협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협에 의해서 개선을 하는 게 그래도 효과가 크고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주는 다른 가치들이 많을 거라고 봐서 그러면 개혁의 내용을 좀 줄이고 타협 쪽으로 가자고 했습

니다.

그래서 경영계가 요구한 소위 해고의 유연성이랄지 취업규칙 변경을 법으로 해 달랄지 이런 부분은 미안하지만 법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의 경직성 부분은 풀어 주기는 어렵지만 다만 불확실한 요소, 이게 해고가 가능한지 근로 시간이 몇 시간인지 이런 불확실한 요소는 해석으로, 법원의 판결, 대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한 지침으로 풀어 주고, 더구나 과업 시 대체랄지 임금협약 기간을 연장해 주는 이런 집단적인 노사관계 법까지를 하게 되면 대타협이 어렵다, 그래서 내용도 좀 그 부분을 제외하고 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영계에서 ‘아, 이게 무슨 개혁이나? 아주 점진적으로 하자는 의미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금년 들어서 대타협한 이후에 현재 들어와서 그게 개선에 불과하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은……

(「이것은 대정부질문이지 대정부토론이 아닙

니다. 적당히 좀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입법 자체의 지연이……

원래 저희들이 대타협을 한 배경에는 금년에 정년 60세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년 60세가 시행되기 전에 현장의 관행도 고치고 입법도 해서 정년 60세로 인한 청년 고용의 악영향을 해소 하자는 차원에서 했었는데 입법도 늦어지고, 또한 저희들이 2개 지침으로 했는데 이 지침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2~3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경영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의원 예.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반면에 이제 노동계에서 개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은 정년 60세를 도입하면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노사는 장년 고용의 안정이나 또 청년 고용의 위축을 줄 수 있는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임금체계를 개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체계 개편이 금년에 정년 60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함께 고쳐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금 성과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 자체를 상급단체는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제도에 법에 대한 의무를 시행하는 것을 상급노동단체에서는 개악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결국 이제……

(「그렇게 하면 누가 상 줍니까? 평소에 좀 잘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현장에 있는 우리 근로자들, 청년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바라보고 필요한 입법을 하고 개선을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그리고 있는 노동시장은 기업들이 가급적이면 직접 채용을 하게 해서……

(「적당히 좀 합시다, 적당히」 하는 의원 있음) 중간의 일자리를 늘리도록 해야 청년 고용 문제도 풀 수 있고 장년의 고용 안정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장관이 새누리당 소속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시라고」 하는 의원 있음)

○임이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시고요, 총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세균 장관 말이지요, 답변을 좀 핵심 위주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는 의원 있음)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의원 장관님 들어가시고요,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세상에 장관이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장관이?」 하는 의원 있음)

총리님, 지금 제가 김재수 장관 청문회에 참여했던 모 야당 의원님이 쓰신 글을 읽겠습니다. 잘 들어 보시고 제 질문에 답변 바랍니다.

“김재수 농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하여 9월 6일 이후 언론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문의·확인 전화를 받았다.(이제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라도 정리해 두어야 할 것 같아서 긴 시간을 쏟아 이 기록을 작성합니다.)

1. 9월 5일 야 3당 원내대표(우상호·박지원·노회찬)가 김재수 농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발표했다. 그다음 날(9월 6일)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 나는 그 해임건의안 내는 걸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그것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다.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관련 나의 첫 번째 문제 제기였던 셈이다.

9월 12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미국으로 떠나던 날 박지원 대표는 내게 전화를 해서 미국 가서 해임건의안을 안 내는 방향으로

얘기해 보겠다고 얘기하셨었다. 그러더니 9월 20일 미국에서 귀국한 박지원 대표는 야 3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이제 해임건의안을 내야 할 것 같다면서 황 의원 입장은 여전한 거냐고 묻는 것이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어제(9월 21일) 아침 비상대책위원회에 나가서 나는 해임건의안 반대 입장을 다시 반복하게 되었다. 이날의 우리 당 의원들의 정례 수요 오찬모임(15명 정도 참석)에서 나는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오후(1시 30분) 해임건의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긴급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내 입장을 재천명했다. 그리고 다행히 우리 당은 진지한 토론을 거쳐 다른 두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내는 데 참여하지 않기로 입장을 최종 통보하였다.(사려 깊게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박지원·김관영 원내 지도부에 깊이 감사드린다.)

내 입장은 간단했다. 김재수가 정책역량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엉터리는 아니더라, 해임건의안은 공연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정국 파행이 번연한 일부 야당의 해임건의안 정략에 국민의당이 들러리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 2. 다음은 그간의 내 발언들의 요약이다.

그 동료 의원들과 오찬 모임에서 나는 ‘어찌다 보니 내가 김재수(장관)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됐다’고 말하며 웃었다. 그러면서 나는 프랑스의 유대인 육군 대위 드레퓌스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인민재판식 극형에 몰렸던 드레퓌스를 위해 에밀 졸라는 동시대와 동시대인들을 고발했었다. 나는 인 것은 인 거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 얘기했다. 내 입장 설명을 듣고 난 정동영 의원은 ‘모 의원 같은 사람을 만난 김재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했다.

솔직히 야당 의원으로서 야당 원내대표들이 합의·발표한 사안에 대해서 여당 측 장관후보자를 변호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한다는 것은 몹시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모 의원이 아니면 이처럼 나설 수 없었을 것이라는 뜻이었다.(정동영 의원 호의에 감사드린다.)

3. 우리는 9월 1일 김재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그날 청문회를 마친 뒤 나는 우리 당 동료인 정인화 의원과 김종희 의원에게 내 의견을 먼저 말하지 않고 최종 평가를 물었다. 그랬더니 두 분이 똑같은 대답이었다. ‘약간

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면 장관으로서 적합하다고 본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비로소 내 의견도 똑같다고 얘기했다. 우리 당 3인의 인사청문위원의 입장은 그러했다.

그런데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생겼다.

8월 30일 다른 야당(실제 내 발언에서는 구체적 거명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이 정도로 기록한다.) 지도부가 이런 공개 발언을 한 것이다. 여기서 지도부가 ‘김재수 후보자는 구속감이다. 인사청문회에서 떨어뜨리겠지만 만약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바로 해임건의안을 내겠다’라고 선언한 것이다. 인사청문회(9월 1일)를 열어 검증 절차를 해 보기도 전(8월 30일)에 언론에 보도된 일부 의혹을 그대로 믿은 채 낙마, 해임건의안 제출 등을 사전 예고해 버린 것이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열어 본 결과 앞서 얘기한 대로 우리 세 위원들은 적합(적격)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린 것이다.

4. 김재수에 대한 의혹은 크게 보아 어머니의 의료보험 의혹, 전세 특혜, 대출금리 특혜 세 가지였다. 우리는 그중 어머니와 전세는 충분히 소명되어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했다.

김재수의 부모님은 김재수가 어렸을 때 이혼했다. 생모(81세)는 경산시에 혼자 사시고 김재수는 지금 계모(76세)를 모시고 사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일부 언론에 어머니를 차상위계층으로 만들어 어머니의 의료보험까지 면제 혜택 받은 부도덕하고 패륜적인 자식으로 보도가 나왔었다. 우리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판단했다.

김재수의 전세(아파트,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전세 거주) 특혜 의혹은 인사청문회를 하기 전 시점에 언론에 먼저 보도되었다. 김재수가 전세 아파트의 주인 오준영으로부터 싸값에 전세 특혜를 받고 그 대가로 오준영의 동업자인 회사에 총 4000억 원의 부당 대출을 받도록 해주었다라는 의혹 제기였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 이 전세가는 혈값 특혜가 아니었다. 김재수가 전세로 들어오기 전 이 아파트의 세입자(김00)의 전세가가 1억 8000이었다. 이 세입자가 2년 살다 나간 뒤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김재수였고 김재수의 전세금은 1000만 원이 더 많은 1억 9000이었다. 그것이 그때 그 지역의 시세였던 것이다. 더군다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왜 1억 9000이라는 싸값에 전세를 주었느냐는 질문에 오준영은

‘자신의 아파트에 6억 8000만 원의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세금을 더 올려 달라고 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에서는 김재수와 오준영이 긴밀히 내통하는 관계이고 그에 따라 김재수가 오준영과 관계있는 회사에 부당 특혜 대출을 해 주었다는 의혹 제기였는데 오준영은 9월 1일 인사청문회장에서 김재수를 처음 만났다고 그 전까지는 생면부지의 관계라고 증언했다.(오준영은 광주일고 49회로 우리 당 김동철 의원과도 동기이자 절친으로 김 의원 역시 말도 안 되는 억지 추론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렇게 되면 수천억 부당 대출 특혜 의혹은 허무한 소설에 불과해져 버린다. 이 때문인지 지금 이 의혹을 제기했던 측에서는 아무 근거도 제시 못 한 채 아직도 김재수와 오준영이 특수 내통관계라는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어쨌든 우리 세 사람의 인사청문위원들은 이 부분 역시 완전하게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 김재수는 용인에 88평짜리 아파트를 싸게 구입한데다가 이 아파트 비용 전액을 농협으로부터 초저금리인 1.4%와 1.8%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 보도였다. 구입 당시 대출금은 1%대가 아니었고 1%대 대출금리는 최근에 들어서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아무튼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특혜 대출로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김재수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소결론, 위의 세 가지 의혹 중 앞의 두 가지는 충분히 해소되었다. 특히 두 번째 의혹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김재수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평가도 그만큼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한데,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인사청문회에서의 내용이 해임건의에 대한 대상이 되지 않는 데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청문 결과를 놓고 할 수 있는 권한은 딱 한 가지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청문 과정과 청문 결과에 대한 청문위원들의 평가 결과를 담아서 대통령에게 보내는 일이다.(인사청문경과보고서 내용을 대통령이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대통령의 몫이다.)

헌법에 보장된 해임건의안은 임명되어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하고 있다.(물론 이 경우에도 해임 건의를 수용하느냐 일축하느냐 하는 것은 대통령의 판단 몫으로 되어 있다.)

법과 헌법 취지(정신)에 따르자면 인사청문회에서의 문제는 해임 건의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경과보고서 채택 또는 불채택하고 나면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국회가 할 일은 법적으로 없다. 그런데 야당은 청문회를 하기도 전(8월 30일)에 해임건의안을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이를 실천했다. 이는 엄밀히 위헌적이다.”

자, 총리 여기까지 들으셨지요?

‘엄밀히 위헌적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법을 전공하셨고 지금 법조인으로 쪽 살아오셨지요? 여기에 대해서 느끼는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여러 해명을 들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검증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해소됐다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충분히 지금 그 내용에서도 내용이 그렇다면 그것은 충분히 해명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무위원이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소명들을 했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직무 수행 결과에 따라서 지적할 부분들은 지적을 하면서 보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직무를 수행하기 전부터 어떤 예단을 가지고 해임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제 기억에는 별 선례도 없는 그런 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께서 더욱 심기일전해서 주어진 국무, 일들을 잘 챙겨서 소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최대한 이 부분을 감독 또는 지도 또 조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의원** 마지막 결론 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좁혀서 해임건의안을 생각해 본다. 이 어려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이 팍팍한 민생 위기 국면에서 이치에도 현실에도 맞지 않는 해임건의안을 우리는 어찌 해야 하는 것일까?”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지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임이자 의원** 장관님, 지금 노동 개혁 관련돼 가지고는 파견법이 첩예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임이자 의원** 파견법이 DJ 정권 때 탄생해서 노무현 정권 때도 개혁을 한번 하려고 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의원** 그에 대한 배경 및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김대중 정부 시절 98년 2월에 최초의 노사정 대타협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동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파견제도를 도입하자고 해서 그 합의에 따라서 정부가 개정안을 내고 파견법이 98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그때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선진국들이 다양한 고용 형태, 근로 형태를 주는 것이 일자리를 늘리고 장기적으로 고용률을 높이는 길이다 이래서 아마 다른 독일이나 일본들도 고용 규제완화 쪽으로 추진을 했고요, 저희들도 파견 규제의 기간 제한이나 업종 제한이…… 오히려 무기계약직에서 파견을 규제하면 무기계약 쪽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효과보다는 파견의 제한과 기간 제한을 하다 보니까, 더구나 기간 제한까지를 하다 보니까 중간의 일자리가 도급이나 일용이나 더 안 좋은 일자리로, 소위 풍선효과가 더 안 좋게 나타나서 이 부분을 손질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저희가 파견제도를 선진국처럼, 현재는, 그때 초창기에는 26개 업종만 허용이 돼 있었는데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등을 제외하고는 파견을 다 풀자 그래서 업종을 전부 푸는, 소위 네거티브 형태로 제한되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푸는 쪽으로 저희들이 개정안을 냈고요.

또 파견기간도 2년으로 제약을 하다 보니까 2년 제약 끝나고 난 뒤에 정규직으로 가야 되는데 그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오히려 파견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의 불안이 커진다 그래서 고용기간도 3년으로 늘리자라고 노무현 정부 때 저희들이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고 일부 업종만 늘어나서 현재는 32개 업종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9대 때 정부 여당이 파견법 개정안을 낸 것은 노무현 정부 때 낸 것보다는 좀 약화해서 냈습니다.

○**임이자 의원** 많이 완화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일자리 창출, 일자리를 재취업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 55세 장년들에 대해서는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파견 업종을 풀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돼 있고 또 전문직들 경우는 자기 일자리를 찾아가기가, 한번 일자리에서 나오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같이 전문직 중의 일부는 현재 허용돼 있고 일부는 허용되지 않았는데 허용되지 않은 일부 전문직에 대해서 풀어주되 다만 여기는 일정소득 이상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만 풀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뿌리산업의 경우는 제조업 중에서도, 경영계에서는 모든 제조업에 선진국처럼 다 풀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노동계에서 얘기하는 파견을 많이 풀었을 때 좋은 일자리가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갈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조업 전체 일자리에 파견을 허용하는 것은 옳지 않고 단계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단계 중에 제조업 중에서 뿌리산업이 인력난이 가장 심하고 또 거기는 경영상황이 어떤 해에는 굉장히 일감이 많았다가 어떤 해에는 일감이 적고 소위 변동폭이 다른 제조업에 비해서 2배 정도 큼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뿌리산업에만 허용하는 쪽으로 해 보자 이렇게 하면서 더불어서 다중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파견을 못 하게 금지하자라는 부분도 있고 또 파견을 했을 때 그 파견 대가가 근로자들에게도 갈 수 있도록 중간에 파견사업주가 지나치게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도록 해서 파견 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을 명시하자 그런 부분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이자 의원** 시간이 없어서, 할 얘기는 많습시다마는……

파견 관련해 가지고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핵심은 저임금 일자리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 의원은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파견업체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

고 파견 업무가 없는 기간에는 훈련과 수당을 지원하는 상용형 파견제도를 도입해서 파견공화국이라 일컬어지는 안산 시화공단에 시범적으로 도입하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의원님 말씀하신 데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저는 파견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좀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시장이 제대로 규율돼서, 국민들이 바라는 경제민주화나 이런 개념을 놓고 보면 소위 부가소득, 국민소득의 일하는 분들한테 돌아가는 몫이 커지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경제민주화라고 보고 있고요.

소위 노동분배율이 높은 국가는 대부분 일하는 분의 소위 고용률이 70%를 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영국이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만 해도 고용률이 다 70%를 넘고 있습니다. 70% 이상의 고용률을 갖고 있는 나라의 경우는 파견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또 그런 파견을 규제 안 하는 나라가 과연 파견천국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들도 3%는 넘지 않고 있습니다. 일하는 근로자의 3%는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독일이 우리 노무현 정부 때와 똑같은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에 제조업에 파견을 허용하고 파견기간의 제한을 풀었습니다. 그 결과 거기는, 일본과 독일은 그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당시 약 65%에 해당되던 고용률이 현재는 73%대로 7~8%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파견제도를 그렇게 나쁜 쪽으로 볼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안 좋은 쪽,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흥·안산의 3개월 이내 임시 일용을 쓰고 있고 또 3개월을 반복해서 쓰는 또는 50명도 안 되는 조그만 사업장의 일부를 또 떼어 내서 도급을 주는 위장도급, 일용, 임시일용, 고용구조가 가장 나쁜 쪽으로 가는 쪽을 2년 정도 일하게 해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또 차별도 못 하게 하는 영역으로 끌어오는 일자리 개선효과가 저는 파견에 굉장히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에 허용했을 때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파견법의 입법 논의를 하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노사정에서 공익들이 논의할 때 그런 의견

도 있었습니다. 파견 회사에서 상용으로 해서 예를 들면 A기업에서 일정 기간이 끝나면 다른 회사로 옮겨 가고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일이 없으면 훈련을 하는 등의 어떤 고용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제도도 좀 확보해 보자 그런 제의들이 있어서 입법 논의가 되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안산이나 경기 일원에 불법파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1만 2000개 사업장에 대해서 정기 감독을 하면서 모든 차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고요. 또 안산과 이 주변에 있는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현재 약 1000여개 사업장을 감독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사법조치할 것은 사법조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더 철저히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애국가 1호는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파견법을 제정한 김대중 대통령과 파견법을 확대하려 했던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이제 박근혜 정부가 하려고 합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국민을 사랑하지 않은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 개혁은 시급한 국민적 과제이기에 여야 정쟁을 떠나서 진지하게 논의하여 노동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정세균** 임이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북구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제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제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북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제수 의원입니다.

최근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전두환 정권의 일해재단 설립과 모금을 주도했던 장세동 씨도 요

즘 정부 여당에서 하고 있는 그 비슷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세동 씨도 청문회에 나와 가지고 ‘일해재단은 강제모금한 것이 아니라 경제인들 스스로 알아서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정주영 회장이 모금의 강제성을 폭로해 버리는 바람에 장세동 씨의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르·K스포츠 재단의 재단출연금이 각출당했다라는 증언도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두환 정권의 일해재단이 일해재단 청문회 때 조작된 경리장부를 제출했다가 내부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사실로 드러난 바도 있습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설립인가 관련 서류들과 관련해서도 많은 증거와 증언들이 조작되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30년의 시간을 거꾸로 돌이켜서 5공 비리의 축소판이라고 불렸던 전두환 정권의 일해재단과 아주 유사한 일이 이 21세기 대한민국 대명천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 황교안 총리님 그리고 조윤선 문체부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대정부질문이 나흘째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감사합니다.

○전재수 의원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 총리께서 오늘까지 나흘째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짧게 짧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도 가급적이면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기승전결 논리적 완결성을 갖춘 그런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짧게 질문드릴 테니까 총리께서도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 두 재단의 설립 허가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상식적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인가 업무라고 하는 것은……

○전재수 의원 상식적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인가 업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과 절차에 합당한 프로세스를……

○전재수 의원 상식적인 거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뭐라고 말씀하신……

○전재수 의원 그러니까 상식적인 거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프로세스를……

○전재수 의원 다른 말로 상식적일 수 있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프로세스를 정상적으로 밟았다라고 들었고……

○전재수 의원 그러니까 상식적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현안에 대해서 그 현안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구나.’라고 느끼면 그것 상식적인 것이지요.

하루 만에 나온 것 상식적이지요, 다른 사례도 있으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비상식적이냐고 물으시는 것 아닙니까?

○전재수 의원 이것이 상식적이냐고 물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것은 상식, 비상식의 문제가 아니고 절차의 문제인데 절차가 맞았느냐 틀렸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겁니다.

○전재수 의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루 만에 재단 설립 허가증이 나올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겠지요. 그러면 상식적인 겁니다, 그렇지요?

좋습니다. 미르재단이 허가를 받고 바로 다음 날 허가 나올 줄 알고 미리 기다렸다는 듯이 현판식을 했습니다. 상식적인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재단 설립 전에 전경련에서, 재단을 설립하는 그런 기관입니다마는……

○전재수 의원 아니, 총리님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나흘째 지금 설명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압니다. 언론보도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미르재단이 허가를 받고 바로 다음 날 현판식을 했지 않습니까? 상식적인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의원님 말씀은 평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평가에 대한……

○전재수 의원 아니, 평가가 아니라 상식적이라는 의미를 제가 총리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현안에 대해서 그 현안을 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바로 다음 날 현판식을 했습니다. 상식적인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바로 다음 날 현판식 한 것이 다 비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전재수 의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 절차가 맞는지……

○전재수 의원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전재수 의원 총리님, 그다음에 2개의 재단, 서로 틀린 2개의 재단 창립 회의록이 거의 똑같습니다. 99% 똑같습니다. 상식적인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화면 한번 보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내용을 면밀히 잘 본 다음에 판단해야 되겠습니까마는……

○전재수 의원 상식적인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를 들면……

○전재수 의원 아니, 총리님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상식적인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설립 주체가 같은 유사한 목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비슷한 것, 앞에 만든 것을 봐서 바꿀 부분만 보완해서 이렇게 처리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재수 의원 예, 상식적이네요. 상식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재단이 회의 장소, 안전, 순서, 문구, 분량까지 같습니다. 상식적인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글썬요, 그것 자꾸 평가를 지금 들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전재수 의원 됐습니다.

총리님, 그러면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전재수 의원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총리님 제가 한번 여쭙 볼게요.

심지어……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자꾸 평가를 물으시지 말고 사실관계에 관한 것을 말씀을……

○전재수 의원 총리님, 제가 총리님께 상식적이냐 아니냐라고 묻기 전에 상식적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서 이 현안들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아, 저

정도 의혹이야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다면 상식적이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어떤 기준을 규율해서 저에게 답변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닙니다.

○전재수 의원 아니, 상식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사전적 의미로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총리님, 심지어 서로 다른 두 재단의 창립총회에 등장하는 인물 대다수가 거의 같습니다. 상식적인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문체부에서……

○전재수 의원 총리님 잠시만, 몇 개를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국무총리 황교안 문체부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 K스포츠에 출연하지도 않은 회사의 전무가 창립회의록에 등장해서 발언을 합니다. 재벌 대기업이 검증도 안 된 신생 재단에 도 대체 800억에 가까운 거금을 자발적으로 출연을 합니다. 어떻게 운영될지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전에 뭘 해 가지고 실적도 없고 검증도 안 된,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특정인의 단골 마사지 샵의 사장으로 추천되고 임명이 됩니다. 문화체육계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로, 특정 인맥들로 이사진이 구성됩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재단이 대통령 해외순방 행사에 동행을 해서 대통령 순방 행사를 치릅니다.

상식적인가요? 상식적이지 않은 것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그 두 재단에 대해서는 아마 전경련에서 재단 설립 허가 신청을 했고 또 문체부에서 인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가 과정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를 했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고 그 결과 요건에 맞아서 허가를 했다, 그 두 법인이 유사성이 있고 또 어떤 목적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해서 문체부가 결정한 것이지 이것이 비슷하면 안 되고 다르면 허가 내고 그런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재수 의원 총리님, 3일 동안 총리님의 말씀을 제가 외울 정도로 다 듣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들 다 상식에 부합한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국무총리 황교안 제 말씀을……

○전재수 의원 총리님, 나머지 몇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께서 그렇게 적절하게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의원 네 가지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신생 재단인 미르가 농식품부 사업의 공동개발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한 해 1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그동안 한식사업을 주도해 왔던 한식재단 이게 배제가 되고 미르재단이 지금 한식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영리 법인인 미르가 두 달 치 운영비로 3억 6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대통령님 사저 1km 내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연의 일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네 가지, 상식적으로 부합합니까? 상식적인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사저에는, 사저 부근에도 많은 건물들이 있을 겁니다. 같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의구심을 살 일입니까? 예를 들면……

○전재수 의원 농식품부 사업의 공동개발……

○국무총리 황교안 예를 들면……

○전재수 의원 예, 됐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구체적인 어떤 증거가 있어서 이것은 가까이 있으면서 늘 교류하면서 부적절한 일을 했다……

○전재수 의원 총리님, 짧게 상식적으로 부합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되, 가까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다 범죄자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전재수 의원 예.

○국무총리 황교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걸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자꾸 단정하고 모아서 획일적인 그런 답을 요구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전재수 의원 총리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건이…… 한 15건을 짧게 짧게 나눠서 상식적인지 아닌지 총리님께 여쭙 봤습니다. 이것 말고도 정리하자면 10건 정도가 더 있습니다.

제가 왜 상식적인지 아닌지, 모호하게 들릴지도 모르는 상식, 비상식을 가지고 총리님께 여쭙느냐 하면 지난 3일 동안 총리님께서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한 말씀을 하시면서 증거 그리고 그 증거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것으로 이루어진 결정 이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법이 상식을 넘어서는 범위에 있습니까? 어떤 법도 상식의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더더구나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지켜보고 있는 이것도 국민들은 상식적 수준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야당의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합리적 의문에 대해서 정치공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전재수도 정치공세 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정치공세 하려고 부산에서 선거 세 번 떨어져 가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공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상식적 수준에서 합리적 의문들을 가지고서 국정 전반을 총괄하시는 총리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증거와 증거 판단 그리고 그것에 의한 결론 이것이 아니라 상식적 수준에서 이 문제들을 판단해 주시기를 총리님께 간곡하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조운선 문체부장관님.

장관님, 3분 정도밖에 남지를 았았는데,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여쭙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미르재단 관련 법인 설립 허가 업무 어느 부서가 담당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운선 예? 저희 부처 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재수 의원 법인 설립 허가 업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운선 문화예술과 관련된 곳은 1차관 소관의 담당……

○전재수 의원 아니, 담당 과가 어디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운선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전재수 의원 대중문화산업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운선 예.

○전재수 의원 대중문화산업과는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저희 예술……

○전재수 의원 세종시에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예.

○전재수 의원 대중문화산업과 직원들은 어디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세종시에서 근무 하면서 필요할 때에는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 미르재단 설립 허가는 대중문화 산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여기의 직원들은 세종시 청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르재단 설립 허가 신청서는 어디서 접수가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제가 나중에 보고 받기로는 우선으로 이메일로 접수가 되었고 실질적인 서류는 직원이 서울 출장을 와 있을 때 서울에서 전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는 세종시에 있고 직원들은 세종시 청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르재단 설립 허가신청서는 광화문에 있는 문체부 서울 사무실에서 접수가 됐습니까.

상식적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사전에 이메일로 먼저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명 날인 한 서류를 받는 것을 서울에서 받았습시다.

○전재수 의원 그런 서비스를 하십니까, 문체부가? 서울까지 가서 설립 허가서를 받아 오기도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메일로 먼저 접수가 되고 담당 직원이 출장을 와 있을 때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전재수 의원 장관님, 2015년 10월 26일 담당 직원도 없는 문체부 서울 사무소에서 법인 설립 허가신청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법인 설립 허가는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해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법인 설립 허가 담당인 김 모 주무관, 10월 26일 오전 한류진흥사업 관련 업무 회의로 서울로 출장을 갔었고 마침 전경련에서 법인 설립 허가 접수를 한다고 해서 서울에서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보고받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요즘에는 원칙적으로 이메일로 신청서류를 접수를 먼저 한다고 합니다.

○전재수 의원 보고받았습니까? 이 내용 보고받으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제가 그 내용은 오늘 아침에 기사에 나온 걸 보고 어떻게 됐는지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사후보고를 받았습시다, 언론보도 이후에.

○전재수 의원 이후 과정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오후 5시경 김 주무관은 법인 설립 허가신청서를 받고 저녁 8시 7분 문체부 나루, 문서 등록 시스템이지요. 결재 기안을 올립니다. 그리고 3분 후 8시 10분 세종시 문체부 본부에 있는 담당 사무관이 결재를 하고 이어서 8시 27분 담당 과장이 결재를 진행합니다. 야근까지 해 가면서 담당 사무관과 담당 과장이 대기하고 있다가 결재가 일사불란하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

보고 게시지요? 이 일을 야근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진행할 만한 사안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세종시에서 서울로 출장 오는 직원들은 야근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 아니, 이렇게 담당 사무관, 과장…… 그러니까 담당 주무관은 문체부 서울 사무소에서 받아 가지고 결재시스템에 올리고 나머지 담당 사무관, 과장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그것도 3분, 17분 사이에 따다닥 결재하는 것 이렇게 서비스하는 것 맞습니까? 법인설립 허가와 관련된 문서의 업무 관행이 이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의원님, 제가 그렇게 구체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내부의 업무 형태나 이런 관례를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언론보도 이후에 어떻게 서류를 받았는지에 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고 그 보고를 받았습시다.

○전재수 의원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전에 출장이 있었다는 담당 김 모 주무관은 12시 57분 오송에서 KTX를 탔습시다. 오전에 회의가 있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10월 26일 당일 한류진흥사업 관련 업무회의를 주관했다고 하는데 누구와 어떤 회의를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김 주무관은 이야기합니다.

견습직원이 회의를 주관했다는 것부터가 비상식적입니다. 견습직원이 회의를 주관하는 것 문체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의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의원** 확인해 보십시오.

김 모 주무관은 오직 미르재단 설립인가를 서두르기 위해서 서울까지 출장을 갔던 겁니다. 이게 저만의 억측일까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 저 전재수가 억측을 부리고 있다라고 판단할까요? 국민들이 이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의원님, 그 부분은.....

○**전재수 의원** 잠시만요, 장관님.

전자결재 과정에서 재단법인 설립에 필수적인 창립총회 회의록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정관은 설립자 직인도 찍지 않은 문서파일로 등록이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나머지 것들은 국정감사 때 다시 한번 여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정세균** 전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박수를 하지 않으시기로 공감대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김포출신의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호 의원** 경기 김포시를 국회의원 홍철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안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제도 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 살림살이도 팍팍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순간 더없이 마음이 무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때일수록 ‘창름실즉지예절(倉廩實則知禮節)이요, 의식즉지영욕(衣食足則知榮辱)이라’ 하는 ‘창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알고, 의식이 풍족해야 영욕을 안다’고 한 춘추시대 제나라 관중의 정치철학에서 보듯이 무엇보다 국민경제의 안정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준비하고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길, 국민의

곳간을 채우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교육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교육부총리입니다.

○**홍철호 의원**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수능영어 폐지된다”, ‘HONGS TIMES’입니다.

만약에 저런 것이 사실로 정책으로 반영된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철호 의원** 답변을 좀 더 깊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입시 부담에서 벗어나서 좋아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영어교육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대외활동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철호 의원** 제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다시 질문을 좀 더 드렸거든요.

이제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작년 사교육비 총규모가 17조 8000억이고요 그리고 일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4만 4000원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정세균 의장, 박주선 부의장과 사회교대)

○**홍철호 의원** 이 중에서 3분의 1 정도인 6조 정도가 초·중·고교생 영어 사교육에 지출한 금액이거든요. 많다고 생각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홍철호 의원** 문제라고 생각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홍철호 의원** 뿐만 아니라 미취학 아동, 대학생 등 사실상 우리나라 모든 젊은이들이 영어에 매달려 살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들이 쓴 비용까지 다 합치면요 영어 사교육비는 10조가 훌쩍 넘을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사실 사교육비, 영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그러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번 18년도 수능 입시에서는 영어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영어 사교육비 시장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1000개의 영어학원이 문을 닫았다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영어교육 자체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문제풀이 위주의 영어학습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용적인 영어,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영어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육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연수계획을 세워서 연수를 하고 또 해외의 연수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홍철호 의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영어교육 정책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교육부의 의지를 제가 지금 읽을 수 있었는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홍철호 의원** 혹시요 금수저 흙수저 얘기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많이 들어……

○**홍철호 의원** 허리가 휘더라도 영어 사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부모들은요 자식들에게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부모에게 미안해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반대되는 부모들이 참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고요.

자, 이분들이 자식들에게 해 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 그 상대적 박탈감,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적이시고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철호 의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홍철호 의원** 영어 사교육비 지출은 단연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반면에 영어 구사 능력은

50년 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지금 좀 나아졌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요새 많이 나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교육에 투입하는 시간이나 비용에 비해서 효율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철호 의원**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만 해도요 우리가 영어를 12년을 배웁니다. 대학까지만약에 나온다 치면 16년을 배우거든요. 그런데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나라, 또 자기 나라 말보다 영어하는 데 더 많은 투자와 시간을 할애하는 나라, 한 해에 유학·연수 비용으로 또 4조원 이상을 지출하는 나라, 이것 정상은 아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저희 교육부에서도 그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입시 위주의 영어교육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실용적인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철호 의원** 예, 하여튼 원인은요 학교성적 위주, 입시 위주의 영어교육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아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총리하고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홍철호 의원** 이것 좀 아픈 이야기인데요, 중앙대학교 단일교지 승인과 관련한 재판 결과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홍철호 의원** 왜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지금 이제 그 감사가 끝나고 단일교지에 대한 부당성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마침 오늘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 아마 심사가 끝났을 것 같은데 아직, 제가 아침부터 국회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도권으로 이전했던 190명의 대학원 정원은 안성으로 다시 돌려보내도록 했고, 그다음에 실제 캠퍼스의 정원, 전체적인 단일교지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호 의원**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오늘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홍철호 의원** 꼭 다행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교육부가 스스로 자기 반성을 하고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호 의원** 이게 외부의 손에 내부의 문제를 맡긴다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법원에서 벌써 부당판결이 나온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오다가…… 물론 다행스럽습니다, 이제라도 됐다 하나까.

된 것으로 그러면 믿어도 될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아직 제가 심의 결과를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철호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홍철호 의원** 국무총리, 잠깐만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요, 들으신 대로 우리 영어 사교육 문제 다시 한번만 총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제는 영어, 수능에서 아예 배제시켜야 될 때 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결국은 이제 우리 국제사회에서 자기 재능을 발휘하고 또 교류를 증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국위를 선양하고 또 인재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이런 창구가 되는 것이 영어교육이었는데, 저도 올해 그 공부를 한다고 했습시다마는 그동안에 우리 영어교육이 이랬다면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없는 영어교육,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문법 위주의 공부, 시험은 잘 보지만 말은 전혀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런 공부에 많은 치중을 해 왔고, 지금은 또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과 정력을 또 비용을 여기에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입시에서 배제까지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가 영어가 국제어로 통용되고 있고 또 인터넷이 전적으로 영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년 60만 명의 수험생 또 2300여 개 고교에서 영어로 입시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쉽게 이 영어교육을 없앤다든지 이렇게 까지 가는 부분에 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또 우리 국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발전 방향도 바라보면서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것이 너무나 학생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또 실용성의 측면에서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내후년 2018년부터는 수능시험에서 영어 과목이 상대평가로 그동안 진행해 왔습시다마는 이제는 절대평가로 바뀌어서 패스·페일(pass·fail)로, 능력이, 역량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만 판단을 하면 뒤의 부분은 각자들이 자기계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일단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만 검토를 해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부담도 덜게 되고, 특별히 영어로 인한 사교육비, 지금 우리 학생들이 사교육비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결국 영어·수학인데, 많은 시간도 들여야 하지만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과연 필요한 방향으로 잘 교육이 되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우려가 있는 이 부분이 좀 슬림화돼서 부담도 줄어 들고 교육비도 줄어 들고 이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호 의원** 시간이 필요하다는 총리님 의견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했던 것은,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하게 되는 한 6년 정도 후를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지금 사교육비, 아주 이 문제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것 하나 있고요. 그리고 ‘외국어가 곧 영어다’라는 이것은 이제 깨야 됩니다. 일본어도 중요하고 중국도 중요하고 유럽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외국어는 영어다’ 이렇게 단정지어 놓고 학교 교육에서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과거에 저희는 영어 외에도, 대학 들어

갈 때도 제2외국어를 시험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부한 것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언어하고는 전혀 달라서 그 나라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고 그래서 또 글로벌 세계를 바라보는 이런 관점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단일 언어, 단일 외국어에 집중하는 이런 큰 흐름도 이제는 좀 고쳐 가 봐야 될 것이 아니냐. 물론 영어도 잘 하고, 잘 듣기도 하고 잘 말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유럽에 있는 그런 젊은 인재들을 보면, 3개 국어, 4개 국어, 5개 국어를 하는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이 좀 부러워했었는데 지금 이제 글로벌 공용어로서 영어가 그렇게 정착되어 있고 그 중요성 때문에, 이것을 과소평가하거나 준비를 덜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어에만 매이지 말고 다양한 외국어를 통해서 우리 미래 세대의 방향성을 세계로 뻗쳐 나가는 이런 노력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2외국어로 교과목 선택을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범위가 굉장히 작고 인원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점을 감안해서 다양한 언어의 학습이 되고 또 그것이 체득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철호 의원** 하여튼 현재의 문제점을 해소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강하게 지금 이 말씀을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을 드린 만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역사에서 ‘홍철호 의원이 영어를 수능에서 배제하자는 의견을 처음 냈다’ 하는 것을 꼭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쭙겠습니다.

누리과정 결정, 언제 된 것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누리과정 결정이 된 시점은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도입이 처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많은 논의들이 있었지만 여러 논의들을 거쳐서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도입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호 의원**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이니까 교부금 지원이 가능한 것은 아닌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우리 유아교육법에 보면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대통령령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 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유아교육의 대상을 교육과 보육 과정을 통합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의 하나가 하나는 유치원이고 또 하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고, 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법에도 보면 교육과 보육을 같이 하는 데 거기에 필요한 재원들을 위한 이런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른 어린이집도 역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교육을 맡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법률적으로 교육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어린이 교육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또 지원 이런 책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감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것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방침 말씀드린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철호 의원** 교육청 채무가 증가하면요 그 채무를 개별 교육청이 직접적인 상환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것도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의 지방채는 상환이, 매년 상환 시기가 돌아오니까 상환 시기가 되면 그 상환 예정인 원금 그리고 이자까지 국가가 교부금에 포함시켜 가지고 교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것을 내려보내면 그것을 가지고 개별 시·도교육청이 직접적인, 내려보낸 그 돈으로 갚는 것이고 원리금을 지방교육청에서 직접 부담을 해서 갚아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호 의원**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 관해서 정부의 입장은 지금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 것인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도입이 시작된 직후에, 2012년도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앞으로 누리과정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

가에 관한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논의가 되었고, 이런 것들이 연락이 되면서, 알려지면서 지방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이것을 잘 운용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교육청 교육감들의 신년사도 있었고 또 실무적인 그런 협의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부담하되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보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방교육청에서 담당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그래서 2012년 이후에 계속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서 부담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제들은 사실은 그 이후에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협의와 논의를 거쳐 가지고 여야간의 합의를 거쳐서 예산 책정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즉 진행해 왔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홍철호 의원** 어쨌든 이 문제는, 누리과정은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 입장이나 또 어린이집을 경영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가 지금 사회문제로 자꾸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갈등이 생기기 전에 사전적 조치를 좀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러니까 누리과정 예산을 아예 정부에서 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으면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법들에도 이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청의 법적인 의무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은 결국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서 지방에 내려보내면 지방교육청에서 그것을 집행을 해서 이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보낼 때 그런 부분을 다 설명해서 내려보내도 집행을 하는 것은 역시 지방교육청이니까 지방교육청이 이것을 법대로 잘 집행을 해 주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것을 중앙정부가 예산을 내려보내도 이것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또 문제가 자꾸 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차라리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이 예산에 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집행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 학생들을 기르는 부모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

적으로 개선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홍철호 의원**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미르재단이니 K스포츠재단이니 의혹들이 자꾸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해재단의 일해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글썄,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어떤 재단이든지……

○**홍철호 의원** 직접 비교가 되는 것은 제가 볼 때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것은 아닙니다. 일해재단은 일해재단이고 지금 이 재단은 또 이 재단입니다.

○**홍철호 의원** 일해재단은 노골적으로 그 정부의 누구를 지칭하는 거였지요. 그래서 그분이 퇴임하신 후에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해재단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고, 이미르라는 것이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무총리 황교안** 저는 그것 누군지도 모르겠고요.

○**홍철호 의원** 직접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다 이렇게 저도 봐지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법인은 법인대로 각자 만들어지고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비슷한 재단이기 때문에 비리나 불법이나 잘못도 똑같다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실이 뭐냐가 확인된 뒤에 그다음에 평가하고 판단할 일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철호 의원** 의혹에 배후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데요. 그게 사실로 지금 밝혀진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조사가 필요한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지금 이것을 주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언론에 보도된바 또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제가 들어 보면 지금 단계에서는 정말 의혹의 제기 단계이지 이게 사실이 입증되거나 뒷받침이 된 자료가 있는 그런 것이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에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룰 일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 뭐냐 이것을 먼저 확인하는, 필요하다면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함



니다.

○**홍철호 의원** 자식 공부 잘 시켜 달라고 학교 보내 놓고 선생님을 욕하고요, 은혜받으려고 교회 가서 가지고 목사님을 뒤에서 욕하고요, 또 나라 잘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대통령을 흔들고요, 이런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국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장관님들 또 국무총리께서는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자화자찬을 하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뭘 잘하고 있다 이런 말을 잘 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잘 안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도 기회가 있어서 외국에 나가거나 외국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보면 이분들이 한국이 어떻게 오늘에 이르렀느냐,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경제정책,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회정책, 복지정책, 심지어는 민주화 과정까지 이런 것들을 본받고 싶다고 하면서…… 그렇게 많은 부러움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게 5년, 1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요즘 만난 외국의 인사들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한국을 본받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아주 영 잘못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고, 이런 평가는 최근에도 여러 국제기구들의 평가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어렵지만 그래도 잘 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의존하고 기대고 ‘그러니까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마는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장점은 키워서 자긍심을 국가에 대해서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더 내일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고, 우리 부족한 점들에 관해서는 또 면밀하게 챙겨서 보완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너무 우리를 작게 보고 모자란 나라로만 평가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철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홍철호 의원** 화면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는 말입니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 각종 사업에 올해만도 2조 1112억, 저출산 예산도 21조 4000억 이렇게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 2개가 다 지금 활발히 해결되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이게 너저분하고 많고 복잡하니까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혜택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통합하는, 아우르는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직접 체감하는 일자리 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요.

저희가 금년에 2조 1000억을 쓰는데, 결국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 냅니다. 그러나 민간의 제대로 된 일자리로 가기까지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능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민간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기량을 향상할 수 있는 직업능력 개발, 직업훈련 쪽에 저희들이 많이 투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대로 된 일자리에 가기까지 취업 알선 이런 고용서비스 기능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에 갈 때는 아직 근로조건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을 장려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단기간에 대해서 일부 청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시행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질수가 많은 부분은 저희들이 중복도 줄이고 효과성이 큰 쪽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철호 의원** 본 의원이 볼 때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이나 공무원을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정책으로 늘릴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자리를 분석해 보면 공기업·대기업을 다 포함해서, 대기업의 정규직 일자리가 전체 근로자의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우리 일자리의 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정규직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57%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푸는데

10%에 해당되는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를 가지고는 절대 풀 수가 없다,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향상해서 청년들이 마음 놓고 중소·중견기업에 가게 해 줄 수 있어야 청년 고용 문제는 풀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철호 의원**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홍철호 의원** 저하고 견해가 같으신데요.

시간이 제가 많이 안 남아서요, 건너뛰어서 결론만 한번 서로 말씀을 나눠 볼까 합니다.

예컨대 젊은 부부가, 중소기업에서 부부가 같이 일을 해서 연 한 7000~8000 정도 수입, 보수가 확보될 수 있다면 좋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홍철호 의원** 저는 같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좀 더 높이는 것이 청년들 가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철호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참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서 아주 단순노동이 있습니다, 건설노동자라든지 식당 서빙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간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차치하고 정말로 건설한 중소 제조업에서 할 수 없이 쓰는 외국인 근로자를 우리 내국인 청년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월 100만 원 정도씩 고용장려금 보조를 준다면 그 청년들이 월 한 삼사백씩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현실적이고, 중소기업도 살리고 그리고 청년 일자리도 즉각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봐지는데, 아까 ‘너저분하다’고 제가 표현한 것이 좀 잘못됐지만 그런 것들을 통폐합해서 이제는 두 가지를 아울러서 하나의 정책으로 싸안을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청년들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1년에 한 6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통상 1년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간 청년들이 작년에 한 4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이 향상되도록 하는 노동시장 제도개선을 하면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청년을 채용했을 때 2년간 약 2160만 원

을 지급해서 가도록 하고 있고요.

금년 들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해 보자라고 해서 금년 7월부터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라고 해서 청년들에게 2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일하면 1200만 원 플러스알파의 저축이 될 수 있는 제도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에 가서 일할 때 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해서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고요.

지원 제도를 좀 더 효율화하는 노력들을 앞으로 지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철호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렇게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기간을 아주 짧게 정해서 단기간에 처방을 해 주는 것은 안 되고요, 이것이 시장에 아주 장기적이고도 견고하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고민해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것은 깊이 염두에 두고 하겠고요.

박근혜정부 들어서 청년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정책을 과거와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 일·학습병행제입니다. 지금 현재 약 7500개 기업이 하고 있고, 2만 3000명 정도의 청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청년당 1700만 원 정도 들여서 기업에 가서 일을 하면서 주말에나, 두세 시간씩 또 주중에 배우도록 해서 2~3년 지나면 대학을 나온 정도의 능력을 갖추게 하고 거기에 걸맞은 처우를 하도록 하는 체계를 장기적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홍철호 의원**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하고, 별도로 시간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의원님 별도로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호 의원** 실업급여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여러 방법으로 가능한 방법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진짜 시간이 짧아서요, 을지훈련의 매뉴얼에 보니까 말이지요 접경지역 주민들을 전시상황이 예견되면 버스로 해서 후방지역으로 소개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물론 전쟁 징후가 있을 때 위급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지만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또 해당 지역에서 군작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 소개 작전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무실시계획에 그 지역의 특성, 그러니까 인구수 그다음에 도로망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세부시행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사항은 비밀입니다. 의원님께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면 제가 비밀·보안규정에 의거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철호 의원** 그 비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요, 그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수도권에 있는 주민들 모두가 자가용 끌고 길바닥으로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탁상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한 번만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래서 비밀로 돼 있는 겁니다.

○**홍철호 의원** 연평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큰 도발을 받고 나니까 주민대피소를 확충해 줬거든요.

그런데 접경지역 어디나 이런 위험에 늘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데 주민대피시설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느냐 하면 정부 지원이 매칭시스템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지자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 돈을 같이 매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국고로 전액 바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의원님, 지금 접경 시설에, 서해 5개 도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연평도 포격이 있는 이후에 완전히 100% 완비가 됐는데 김포를 포함한 강원도·경기도 접경지역에는 총 483개소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168개를 완료하고, 올해도 22개를 갖다가 새로 구축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 대 50 매칭이기 때문에 상당히 돈이 적습…… 특히 접경지역이라 시·군·구의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도 저희들이 10개, 올해 10개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서 지자체에 부담이 안 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리께서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실의 역할 중에 국무조정 역할이 있는데요, 부처 간에 이견이 있을 때 그것을 조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제2외곽순환도로가 건설 중에 있는데 교량이나 터널이나 가지고 지금 갈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실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두 지자체 간에 그런 많은 논란이 있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부처의 의견도 좀 더 충분히 듣고 또 합리적인 해결방안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호 의원** 그 내용이요, 문화재청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채두루미가 좀 있다고 해서.

그런데 환경부가 정작 용역을 줘서 결과를 얻어낸 것은 그쪽은 없고요 오히려 발전이 많이 된 행주대교 쪽에 많이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현실은 다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전혀 갈등조정을 안 합니다. 관심을 꼭 가져 주셔야 됩니다.

돈도 교량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터널로 하면 2000억 이상 더 들어가거든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오래된, 그러면서도 잘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총리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걱정이 오래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철호 의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홍철호 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교육비로부터 국민들을 해방시키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살리기 위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주선** 홍철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윤소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소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부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윤소하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심은 한마디로 근심입니다. ‘대한민국은 불안민국이다’라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추석 명절에 지역 활동을 위해서 목포에 다녀왔습니다. 경주와 정반대에 있는 목포에서도 지진 공포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추석 하루 전날 밀반찬 몇 가지를 싸들고 찾아간 진도 팽목항에서는 9명의 미수습자 가족이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세 번째 추석을 맞고 있었습니다.

명절 고향에서 만난 농민들은 쌀값 대폭락에 가슴이 타들어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시작으로 해서 공공 부문 노동자들은 이 무분별한 성과연봉제로 삶의 위기 속에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자존심 싸움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 삶의 현장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어찌면 호소하는 심정으로 국민의 질문을 대신 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감사합니다.

○**윤소하 의원** 우선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공문마다 찍혀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이라는 게 있지요. 그 뜻이 무엇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정부 3.0 사업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부와 우리 사회가 나아가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 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하자는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소하 의원** 3.0은 투명성을 이야기하고 유능한 정부를 지향하고 국민을 향한 맞춤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리, 현 정부는 이 3.0의 중심 과제로 제시한 바대로 투명하게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정부 3.0을 이 정부에서 정책으로 채택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제들을 발굴해서 그 과제들을 토대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정보의 공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큰 방향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정보들을 정부만 가지고 있지 말고 민간에도 나누어주고 또 민간의 정보들도 같이 공유해 가면서 우리 사회가 투명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명한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공공…… 정부의 개혁에 관해서 제 기억으로는 작년 같습니다. EU에서도 평가해 보니 우리나라가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 투명성 평가에 관해서도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소하 의원** 좋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유능한 정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지향한다고. 지금 이 정부의 국정운영이 유능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쉽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결국 정부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역량이 모여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또 개척해 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건 자화자찬이 될 것이고, 지금 국제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그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신용평가기구들이 우리나라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금 방향을 잡아서 잘 가고 있다 이러면서 신용평가를 계속 올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금년 계속 올려 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해 전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작년, 그리고 금년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방면에서 아직 여전히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직의 역량,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량, 그리고 남아 있는 많은 젊은이들과 또 기존에 경험을 가진 분들의 힘을 모아서 우리가 정말 유능한 정부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소하 의원** 국제적 신용평가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말하는 것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국민에게 유능하나 이게 첫 번째고, 그걸 잘 하면 전체적으로 국제적 신용도도 높아진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서비스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현 정부는 결코 투명하지도, 투명은 소통을 포함합니다. 불통입니다. 유능한 것이 아니라 무능에 가깝고 국민의 맞춤형이 아니라 대통령의 입맛에 맞추는 그런 국정운영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윤소하 의원** 아니요, 그것은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총리,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의 초기 대응이 제대로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경주 지진은 그 해당 지역 국민들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게 됐던 큰 사고였습니다.

저도 지진 이야기를 듣고, 저녁에 들었습니다. 마는 바로 그다음 날 아침에 출발해서 거기에 제 기억에는 12~1시 부근에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마는 죽 둘러보니까 피해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기왓장들이 많이 떨어졌고, 물론 경주라고 하는 곳이 기와 건물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기와라고 하는 것은 구조가 지진에 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기와에 맞아서 다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을 제가 내려가면서도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부처에 잘 대처하도록 조치도 했지만 갔다 와서 더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을 공유하면서 부처가 노

력해 왔고 지금은 여러 가지로, 특별재난지역도 지정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소하 의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총리라고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마음고생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이번 정부의 지진대응을 보면서 또 다시 세월호를 떠올립니다. 박근혜정부가 안전을 이야기하지만 국민들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총리,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이 완벽하게 규명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완벽한 진상규명이라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수사기관들에서도 검찰·경찰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수사해서 위법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했고, 부적절한 조치를 한 그런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징계들을 했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해양심판원에서도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평가들을 주 했고 뭐 이런 여러 절차들을 거쳐서 진상을 밝히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소하 의원** 어제 답변에 보니까 '다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아직 멀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소하 의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만, 그렇지요?

그런데 세월호 특조위가 개최한 3차 청문회를 보면 정부와 검찰이 밝히지 못한 세월호 선내 CCTV 조작 의혹 그리고 해경 TRS 조작 의혹,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400t의 문제 등에 대한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상조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체는 인양조차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종료되면 손조차 대고 있지 못하는 이런 술한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진상을 규명한다는 말입니까? 진도 8.3의 지진 발생이 가능하다라는 연구결과를 감추고 그 위에 새로운 원전을 짓겠다고 결정한 것처럼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추진한다면 총리께서는 어떤

입장을 내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세월호 특조위에서 1년 반의 기간 동안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11가지의 조사대상을 정해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특조위에서나 또 여러 분들은 이것이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진상규명이 되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특조위에서 얘기하는 기간, 2015년 3월이든 또 8월이든 그때로부터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긴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조사도 했고 또 정부에서는 정부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를 통해서도 했고 또 해양심판원의 조사를 통해서도 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재판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도 끝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판 과정까지를 거쳐서 진상규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모든 의혹이 해소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물론 없겠지요.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조사라는 것이, 수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세월호 특조위에서 211가지 조사를 했지만 밝혔다고 하는 부분, 지금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의혹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들이 그동안에 조사·수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거나 또 검토해 보거나 또 판단해 봤거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운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검토를 했는데 지금은 남아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체를 인양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정부가 조사를 이제 할 것입니다. 당연히 할 것이고 그 결과를 보시는데 그 점에 관해서 우려가 많으시니까 그래서 특조위나 특조위 관계자들도 선체를 조사할 때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의견도 내시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는 것이지 지금 남아 있는 선체 인양 이후의 조사를 안 하겠다? 전혀 그것이 아니지요.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소하 의원** 좋습니다, 좋아요. 총리님, 지금 바쁘시더라도 팽목항에서 우선 선체 인양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지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지금 선미 쪽에 리프팅빔 하고 있지요? 대단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윤소하 의원** 그 부분에 한번 현장방문도 좀 하시려고요, 격려도 좀 하시고 상황 파악도 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윤소하 의원**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윤소하 의원** 사용자 측이 단협 개정을 요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교섭을 진행해요. 결렬되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충분히 교섭을 하고 교섭이 결렬될 수 있을 때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윤소하 의원** 그런데 왜, 8월에 노동부가 제출한 고용노동부 가이드북 아시지요? 제출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어떤 말씀이신지……

○**윤소하 의원** 거기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한성을 두는 표현을 담아서 냈다 이 말이에요. 한번 가서 살펴보고……

노동관계법 어디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말씀 잘하셨네요.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부분은 아마 조금 의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윤소하 의원** 장관, 잠깐만요. 제가 질문드릴게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윤소하 의원**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근로조건 변경절차보다 우선합니까? 노동부에 오래 계셨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취업규칙에 정해진 내용과 단체협약에 정해진 내용들이 대부분 다릅니다.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임금체계나 이런 부분들은……

○**윤소하 의원** 아니,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간단히 이야기합시다.

단협이 우선합니까, 취업규칙이 우선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법에는 단체협약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소하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효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소하 의원** 단협을 위반하는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되어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윤소하 의원** 무효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윤소하 의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이 되면 전체 인건비가 늘어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공공기관의 대부분의 경우는 임금체계에 관련된 부분들은 취업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약이 그 부분을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서 기업들이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소하 의원** 결국 비슷한 과이를 예전에는 이렇게 동일하게 나눠줬는데 이제는 이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이 사람에게는 적게 주고, 그러니까 적게 받는 사람이 생기게 될 것 아니에요?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전체적으로 미래 일자리 차원에서 일한 만큼 보상받도록 하는 것이 일자리의 질과 양을 늘릴 수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도 내가 일한 만큼 대우받고 싶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연공서열성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훨씬 강하기 때문에 임금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것은 수차례 노사정 간에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소하 의원** 결국 그 사람한테는 불이익 변경이잖아요.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부분은 의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소하 의원** 제가 질문드린 것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윤소하 의원** 사실 근본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취업규칙 개정의 문제이기 전에 임금체계라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문제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윤소하 의원** 임금체계를 송두리째 바꾸는데 단체교섭이 필요 없다? 이것은 헌법과 노동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렇지 않습니다, 의

원님. 그것은 각 기업의 임금체계를 어디에 규율할 것인가는 당사자가 이제까지 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에……

○**윤소하 의원** 그러니까 당사자 이해원칙에 근거해야 하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단체협약에 규율되어 있는 사업장은 단체협약 갱신을 통해서 하고 있고 취업규칙에 규율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는 취업규칙 갱신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금체계 개편은 불이익 변경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딱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내용이 전체 근로자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불이익이 되느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공공부문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임금 인상이 3% 이상을 하고 있고 또 다수의 근로자들이 성실하게 일하면 월급을 더 올려 받을 수 있는 체제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이익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윤소하 의원** 지금 다수의 근로자들이 불량하게 일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윤소하 의원** 성실하게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성실하면 더 대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윤소하 의원**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윤소하 의원**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관계법 이 상위법을 무시한 채 아니, 일개 행정지침으로 지금의 사태를 만드는 것이 고용노동부장관이 할 일입니까, 이것이?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의원님……

○**윤소하 의원** 아니요, 잠깐만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일개 행정지침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노사정 대타협을 할 때 원래 경영계가 입법을 통해서 취업규칙 변경을 쉽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우리는 그것은 불가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간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을 토대로 법률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좀 해 줘서 그것을 현장에서 지켜나가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의해서

준비를 했고 지금 일선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소하 의원** 장관,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렇습니다.

작년에 전문가들의 많은 연구를 통해서 금년에 지침화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의 임금체계 개편이 불이익이 아닐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불이익으로 봤습니다. 다만 불이익의 경우에도 명백히 불이익인 경우는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윤소하 의원**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윤소하 의원** 장관, 아까 어떤 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 한 10분 정도 답변을 하시던데 말씀드릴게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우리 법원에서……

○**윤소하 의원** 법원의 판결은 대단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9 대 1로 근로자의 편을 들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임금체계 개편은……

○**윤소하 의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러지 마라. 같이 이야기 좀 해라’ 할 의향 없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는 근로기준법의 취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판결의 취지를 토대로…… 임금체계 개편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정년 60세를 시행하면서 반드시 고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윤소하 의원** 근로기준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이 의무화를 현장에서 시행해 가면서 혼란이 없도록,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근로기준법과 연관된 판례도 지키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라가 아니고 저희들 지침의 취지는 모든 사든 충분히 협의를 해라, 협의에 불성실한 쪽에 불이익이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성실히 협의하지 아니하고 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이 안 되는 거고 근로자 쪽에서, 노동자 측에서 ‘나는 싫다, 협의할 수 없다’라고 버티면 그것은 동의권의 남용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회사에 맞는

체제와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도입을 하라 그것을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소하 의원** 장관, 2대 지침 폐기하시고 당장 노동계와 대화에 나서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는……

○**윤소하 의원** 그리고요, 그게 고용노동부 장관의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경영계의 요구 자꾸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차라리 대통령에게 직언해서 노동관리부로 직접 개편하자 이렇게 좀 건의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정기적으로……

○**윤소하 의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우리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게끔 명확히 해 주는 게 저희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소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정부는 30개의 공기업, 90개의 준정부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완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완료란 제가 생각할 때 법적 요건이 모두 충족돼서 실행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완료라 함은.

○**국무총리 황교안** 예,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는 것이 완료됐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것이 일단 모든 사람이 동의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절차적인 문제는 또 다른 문제겠습시다라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소하 의원**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20개 기관 중 절반 가까운 기관에서 도입 과정의 불법과 탈법성이 문제가 되고 있고 고발된 기관만 30곳이 넘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등은 아니, 이사 개인을 찾아다니면서 사인을 받고 모 공공기관 이사회에서는 아침 7시에 무슨 죄가 많아서 호텔에 모여서 승인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고발하라고 하는 것은 고발권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고발을 하는 것은



좋지만 고발을 했다고 그래서 그 상대방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잘못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고발에 대해서는 처리 결과를 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이렇게 회의를 해서 그렇게 했다, 그게 적절하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것은 각 사업장별로 또 근로여건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윤소하 의원** 아니 이사회에……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윤소하 의원** 회사의 사무실이 아닌 호텔에 가서 이사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것들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회의를 여기서도 할 수 있고 또 뭐 여러 곳에서도 할 수 있는데……

○**윤소하 의원** 국회도 나가서 식당에서 회의하면 그게 다 성립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법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느냐 하는 것인데 의원님 자꾸 말씀을 여러 번 하시니까 제가……

소위 이 문제의 출발점은 연공서열제, 호봉제에 의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느슨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같이 일 열심히 하는 이런 분들은 좀 더 평가를 해 주고 또 조금 부족한 분들은 어떻게 보면 독려를 해서 같이 공직사회가 잘 나가자, 시간만 지나면 직급도 올라가고 월급도 많아지는 것, 이것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또 성과에 따라서 평가받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어도 공직사회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자 이것이 정부의 생각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물론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을 잘 밟아서 법에 정한 절차대로 진행을 해 가도록 지도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했는데 현장에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툼이 있지만 그 부분은 또 절차에 따라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공직사회 먼저 그냥 앉아만 있기만 하면 계급 올라가고 돈 많이 받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노력하고 애쓰는 공무원들이 더 평가받는 이런 조직으로 만들어 가자,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일을 하고 싶은데도 좀 역량이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 그냥 차고 나가자 이런 것

이 아니고 그런 분들에게는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다시 재도약할 수 있게 이렇게 해 가자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넓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소하 의원** 그러면 대통령이 국무위원부터 성과연봉제 적용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각 부처별로 서로 잘하게 하려면.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그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소하 의원** 성과연봉제 말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저만 해도 우리 기관들을 쭉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인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소하 의원** 총리, 병원과 같은 의료현장에서 성과연봉제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성과연봉제는 기본적으로 나만 잘 되자, 내가 월급 많이 받겠다 이런 측면보다 우리 사회가 지금 선진국가 지향하거나다 와 있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는 우리의 서비스들을 민이든 관이든 품질을 높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우리 미래를 준비해 가자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료현장에서도 좀 더 최선을 다하고 또 더 많이 노력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도, 어느 사회나 사실은 우리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해서 품격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소하 의원** 양질의 서비스, 좋습니다.

보훈병원 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알고 있습니다.

○**윤소하 의원**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를 진료하는 특수목적 공공병원입니다. 작년에 메르스 사태 이후에 보훈병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보훈병원에 시달한 공문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봐 보세요.

저기 중앙병원에 ‘주기적 단순 투약 처방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 및 검진을 활성화하라’ ‘8월 실적보다 월 21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훈병원에서.

결국 진료 건수 늘리고 국가의 의료기기 많이

쓰고 불필요한 검사 많이 해서, 처방 많이 하고 해서 수익을 많이 내라는 것인데 과잉진료, 과잉 검사 해서 수익을 많이 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정상적인지, 보훈병원에서?

○국무총리 황교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보훈병원은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 아닙니까?

저도 보훈병원에 몇 번 가 봤습니다. 챙겨 보고 또 격려해야 될 분들도 있으니까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병원의 수입을 많이 올려야 되는 그런 병원은 아닙니다, 정부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볼 때는 보훈병원 소속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소하 의원 지금 당장이요 성과연봉제 멈추시고 총리께서 나서서 가지고 대화부터 해야 됩니다. 이게 뭐니까, 이것이?

그리고 각 공공기관에 ‘아니, 제발 좀 성실히 교섭해라. 총리의 이야기다. 국민 불안하게 하지 마라. 노동자가 된 죄 있냐?’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성실하게 교섭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법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교섭을 통해서 이런 절차들을 만들어 가도록,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지나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조속하게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우리 공직부터가 먼저 일하는 조직이 되도록 하자, 이것은 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노력이지요. 이런 것들을 더 모아 가자 이것이 큰 방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소하 의원 부의장님, 답변 시간이 제 부분에 계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박주선 예?

○윤소하 의원 답변 시간이 제 시간에 계속 계산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시간을 더 달라는 말씀입니다.

○부의장 박주선 그랬어요?

○윤소하 의원 예.

○부의장 박주선 얼마나 그랬어요?

○윤소하 의원 한 30초 정도 그랬습니다.

○부의장 박주선 알았습니다.

○윤소하 의원 좀 더 주십시오.

아까 같이 잘하자는 뜻이잖아요. 저는 국회 안에 공공부문의 바람직한 임금체계 및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협조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화면 한번 보시지요.

백남기 청문회 증인인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웃음 뒤에 어찌먼 얼마 뒤 남편을 보내야 하는 부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마디 사과는커녕 무고한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국민적 피의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취할 모습입니까, 저게? 대한민국의 서글픈 모습입니다.

어제 총리는 동료 의원 질의에 답하면서 ‘특조위 활동 끝났다’ 했습니다.

저는 ‘세월호 대한민국’에서 벗어나는 길은 조속한 선체 인양,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조위 기간 연장해야 됩니다. 이는 국민들의 요구다 말씀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정부와 새누리당에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검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월호는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3차 세월호 청문회 말미에 한 유가족의 말이 생각납니다. ‘지금 국민이 정부에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에게 도전하고 있다’ 이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20대 국회, 여기에 답하고 행동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주선 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초 더 드렸습니다.

○윤소하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주선 지금 우리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들께서 저녁식사를 거른 채 대정부질문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의사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저녁식사를 거르시더라도 이 대정부질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 양산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양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입니다.

얼마 전 정부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전수조사로 우리나라 인구의 규모나 그 분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평균수명 연장과 저출산의 영향으로 본격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시작됐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중위연령은 불과 5년 만에 3세가 늘어나 41세를 넘어섰고,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2%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고령화 정도가 아니라 그 속도입니다.

한 해에 90만 명 이상이 태어났던 1955년생부터 1974년생까지, 제1차 베이비부머와 제2차 베이비부머들이 65세를 맞게 되는 2020년부터는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20년간은 고령인구 비율이 거의 매년 1%씩 올라가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되고 2040년에는 인구 3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사회가 오게 됩니다.

고령인구 비율 7%인 고령화사회에서 20%인 초고령사회로 바뀌는 데 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100년이 넘게 걸렸고 일본도 36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26년으로 그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원래 장수한다는 것은, 오래 산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오랜 꿈이었고 그래서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까운 주위에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절반의 노인들이 빈곤층에 속해 있으며, 노인 자살률은 비교할 다른 나라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개인의 노후 준비나 국가의 노년생활 보장이 제대로 안 되어 노년을 맞은 당사자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전 국민이 다가올 노후 걱정으로 하루하루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노인 빈곤과 노후 불안의 원인

은 무엇일까요?

노동시장이 불안정하고 사회보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보장 정책이 불충분할 뿐 아니라 서로 보조를 맞추고 있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정년까지 노동시장에 머물다가 퇴직하면 공적연금으로 바로 은퇴생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노인 빈곤이나 노후 걱정이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이 불안정하여 퇴직 시기는 빨라지고 사회보장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은퇴 시기가 늦어져 퇴직과 은퇴 사이의 중간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50대 전반에 생애의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70대 초반까지 은퇴하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생애의 주된 일자리는 그만두었지만 노후 소득이나 사회보장이 부족해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하는 새로운 계층, 직장에서는 밀려났지만 은퇴도 할 수 없는 세대, 이전에도 없었고 다른 나라에도 없는 퇴직 후 은퇴 전 세대, 즉 ‘잉여 세대’가 우리 사회에 나타났습니다.

대략 55세부터 74세까지의 이 새로운 세대, 있던 데서 쫓겨났지만 마땅히 갈 데가 없는 세대, ‘잉여 세대’ ‘난민 세대’가 출현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세대의 규모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잠시 봐 주십시오.

이번 인구총조사 결과 55세부터 74세까지 인구는 1050만 명에 달하고 전체 인구의 21%를 차지합니다. 15년 전 2000년 조사에서는 600만 명에 불과했는데 그사이 450만 명이 늘었습니다.

다시 15년 후인 2030년 추계를 보면 이 세대의 인구는 1600만 명에 육박하여 전체 인구의 30%를 넘어서고 그 숫자에서 청년층이나 장년층을 증가하게 됩니다. 1년에 40만 명 가까이, 하루에 1000명 이상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는 이 세대가 현재의 빈곤과 불안을 벗어나 경제적·문화적 생활의 안정을 찾고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주선 부의장, 정세균 의장과 사회교대)

총리님, 정부는 우리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됐다 그래서 경제활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계

신 것 같습니다.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려고 사업자가 근로자를 좀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노동 개혁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근로자를 쉽게 해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내가 해고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도 제시해서 결국 안정적으로 직장에 근무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노동 개혁 과제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형수 의원** 총리,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사실 이것은 통계로 잡아서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국제적인 평가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자료를 하나 갖고 있는데 노동시장의 효율성 비교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140개국 중에서 83위다 이런 평가가 있기도 하고 또 월드뱅크에서 기업환경지수 통계를 낸 것 보면 우리나라의 해고환경은 183개국 중에서 150위다 이런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의하면 우리 노동시장이 대체적으로 좀 경직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이 부분을 유연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수 의원** 그런데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보면 우리나라 근로자는 법률로 정한 정년인 60세보다 10년 이상 빠른 49세에 주된 일자리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15년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는 OECD 등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근속기간도 매우 짧고 퇴직연령도 빠르는데 어떤 근거에서 우리 노동시장이 그렇게 경직되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하나하나가 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인데 지나친 제한들, 예를 들면 파견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규제라든지 또 연공급 임금체계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존의 법이나 제도 또 관행 이런 것들이 우리 노동시장의 합리성, 운영 유연성을 풀어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작용이 되지 않는가, 물론 근로시간의 문제도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종합적인 대책들을 정부가 같이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는 그 과정을 노동 개혁이라고 하는 과제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서형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50대에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주변 노동시장에서 70대까지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세대, 벌써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앞으로 1600만 명에 이를, 아까 제가 잉여 세대, 난민 세대라고 불렀던 퇴직 후 은퇴 전 세대의 등장이 우리나라의 특별한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국무총리 황교안** 우리가 지금 고령화사회로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일자리는 많지 않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긴 합니다. 지금 이런 현상들이……

기업의 고용 관행이 그동안 연공급 임금체계,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보수도 오르고 직급도 올라가는 경직된 인사관리 시스템 이런 것 때문에 좀 굳어져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풀고 이를테면 은퇴세대들도, 은퇴 이후에 퇴직하지 못한 이런 분들도 좀 더 다양한 영역에서, 옛날만큼은 보수 수준이 유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하면서 노후를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가자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향입니다.

○**서형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직장을 그만두면 결국 밑을 데는 연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5세부터 79세까지 인구 중 연금을 받은 사람은 44%에 지나지 않습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도 월평균 수령액이 51만 원, 그중에서 공적연금은 34만 원입니다. 그중 절반은 월 25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적연금이나 공적연금이 노후생활 보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개선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제도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노후소득 수준이 많이

낮은 편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노후소득 보장의 강화를 위해서 재작년 7월, 종전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개선해서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종전의 기초노령연금에 비하면 거의 2배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도입했습니다.

그 외에도 어르신 일자리를 매년 5000개 이상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고 또 주택이나 농지연금 활성화 등을 통해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마련하는 이런 방안들을 정책적으로 준비해 가면서 보다 더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나이 때문에 직장에서 밀려나도 우리나라 대부분 고령층은 은퇴를 하지 못하고 경제활동에 참가하게 됩니다. 특히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은퇴했을 나이인 65세부터 79세까지도 40% 정도가 노동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고령층의 노동조건이 열악하기 그지없다는 겁니다. 영세자영업 아니면 단순노무직과 비정규직이 대부분이고 절반가량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개선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걱정을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장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충분하지는 못하다는 이런 판단하에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예산들을 더 확보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장년층에 대해서 취업지원서비스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만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퇴직 이후의 그다음 준비를 한 바가 없는 분이 대부분이어서 다시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장년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아카데미를 만들기도 하고 또 장년인턴, 요즘 우리 '인턴' 그러면 청년인턴만 생각합니다마는 장년인턴제도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공급이 아닌 직무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로

개편을 해서 장년층 근로자의 계속근무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장년들에게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 기회를 조금이라도 더 드리기 위해서 파견법, 파견법에 대해서 많은 그런 반론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결국……

○서형수 의원 아까 그 말씀 많이 하셨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자리가 아니면 그다음으로라도 할 만한 자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파견법 등 노동 개혁 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법안들 통과가 되면 정부가 노력하는 것들이 좀 더 축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중장년층의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형수 의원 감사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고 교육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이모작 세대' 말씀 들어 보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서형수 의원 퇴직 후 은퇴 전 세대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학령인구, 학생들에 대한 교육만으로 앞으로 미래사회를 대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현재 직종의 70% 이상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런 것에 대비해서 연령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수요가 계속 팽창하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창업이나 또는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 향상 교육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수 의원 그런데 금년 교육부 예산 중에는 평생직업교육 그쪽에 401억 정도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충분치는 않니다마는 모든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책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401억인데 2017년 예산에는 126억을 증액해서 527억 원……

○서형수 의원 대부분 대학에 들어가는, 평생단과대학에 들어가는 돈이지요, 증액되는 부분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아닙니다. 평생단

과대학만 포함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평생교육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성인 문자 해득이라든지 직업능력 향상 그다음에 시민참여교육 이런 등등을 포함한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형수 의원 그런데 전체 교육부 예산이 얼마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전체 교육부 예산이 약 60조 가까이 됩니다.

○서형수 의원 60조 중에 400억을 쓴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사실상 60조 중에서 교부금으로 지방교육에 투입이 되는 부분이 40조 이상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현안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더 확대하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생각만큼 그렇게 충분히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재정 당국과 좀 협의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수 의원 최근에는 교육부보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들이 평생교육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서형수 의원 이들을 좀 지원하고 이들과 연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당연히 저희 교육부에서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직업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하고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나서야 될 일이 아니고 민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산업계에서도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사내에서라도 퇴직이 예상되는 분들에 대한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형수 의원 감사합니다.

교육부장관 들어가시고 보건복지부차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복지부차관입니다.

○서형수 의원 차관님, 복지부가 적용하고 있는 노인 연령기준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무슨 법령에 노인 기

준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에, 노인 지원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노인을 관행적으로 보고 있는데 통상 65세로 하고, 이런 것은 유엔이나 OECD 경우에도 통상 법령으로 이렇게 노인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게 통계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수 의원 일용의 기준은 65세로 지금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많은 사업이 65세를 기준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수 의원 그런데 얼마 전에 노인의 연령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에 대해 복지부 입장은 어떤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굉장히 많은 노인 지원 사업들이 65세 연령을 기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우대 또 지하철 교통비 지원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고 기초연금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또 다양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수 의원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 연간 참여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일자리 사업 정부가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은 올해 기준으로 39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3만 개를 또 증액을 해 주셔서 42만 개가 되겠습니다.

○서형수 의원 42만 명이면 전체 우리 노인 인구의 몇 %가 참여하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전체 노인 인구가 690만이니깐 약 한 6% 정도 되는데 실제로 690만 노인 중에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으신 분들은 아니고 고용 의사가 있고 그러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한 125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5만 명 기준으로 보면 한 3분의 1 정도, 33% 정도가 지금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형수 의원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그래서 매년 이것을 거의 5만 개씩 늘려 가고 있고요 17년도 예산에도 지금 44만 개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서형수 의원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월평균 보

수 얼마 됩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지금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통 5개월부터 9개월까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9개월을 기준으로 볼 때는 2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것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125만 명이 구직 의사가 있으신 노인인데 그중에 한 33% 정도를 저희가 재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소위 말하는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한 3분의 2가 대기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가를 더 높여드릴 건지 아니면 일자리 개수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거냐라는 선택을 가지고 대한노인회하고도 계속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래도 노인들께서……

이게 하루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것은 아니고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자리를 좀 더 넓히는 쪽의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우선 일자리 수 확대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수 의원**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면서 30만 원, 4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하셨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수당도……

○**서형수 의원** 그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그래서 우선은 일자리 개수를 늘리고 재정 여력을 봐 가면서 지원하는 단가도 올려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형수 의원**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서형수 의원** 오늘 너무 길게 답변하시는데 힘들지 않으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괜찮습니다.

○**서형수 의원** 지금 고용정책을 대상 연령층을 나눠서 시행하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좀 특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서형수 의원** 지금 제일 역점을 두고 있는 연령층은 어디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특별히 어느 연령층에 꼭 역점이라기보다도 청년, 여성, 장년 각 특성에

맞게끔 특화된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수 의원** 그런데 금년 청년 일자리 사업에 2조 이상을 쓰고 있지요? 2조 1000억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서형수 의원** 5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 사업에 얼마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 전체 15조 8000억 정도가 정부 일자리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서형수 의원** 고용보험 제외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포함해서입니다.

○**서형수 의원** 고용보험 제외하시면 얼마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포함해서 15조 800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사업에는 연령하고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취업성공패키지 이 부분이 전체 훈련까지 하면 한 600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게 주 대상이 소위 장년층, 저소득층, 청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연령으로 구별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형수 의원** 내년 예산계획을 보니까 통합재정사업 평가 결과 ‘성과 미흡’ 등으로 지적받아서 5개 사업의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그중에서 3개 사업이 중장년 고용사업과 관련된 사업이더라고요.

이는 고용부가 청년 고용사업에만 매달려서 중장년을 포함한 고령층 고용사업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이 일자리를 통합해서, 가짓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부터는 법적으로 정년 60세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세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는 법으로 정년이 60세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제도가 필요 없는 부분도 있고, 특히 중장년 취업 지원하는 부분은 전체 실업자 훈련하고 통합하는 그런 과정에서 빠졌지 장년층의 예산이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형수 의원** 어차피 평가가 지금 5개 중에서 3개가 유독 중장년층 고용사업이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나라가 가장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은 1년에 0.3~0.4년씩 은퇴 연령이 높아진다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그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현재의 일자리, 원래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장년의 기본대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은 노사정 간에 여러 번 임금체계 개편을 합의한 이유도 연공서열로 하다 보니까 50세 되면 명퇴시키니까 가급적이면 임금체계를 바꿔서 오래 일하도록 하자, 또 임금피크제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들입니다.

임금피크제를 했던 사업장을 보면 안 한 사업장에 비해서 장년 고용률이 높아서……

○서형수 의원 예, 말씀이 너무 또 길어지시니까 그렇게 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하면서 장년들에 대한 취업 지원이랄지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수 의원 자, 들어가시고 국무총리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순서가 4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리님.

금년부터 5년간 적용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작년 말에 정부가 발표하셨는데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서형수 의원 주요 내용이 어떤 건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동안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당면 과제로 인식을 하고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그게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을 평가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추진성과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종합해 가지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보면 이것은 세 가지입니다, 크게 말하면.

물론 다른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고용의 문제, 그리고 주거의 문제, 살 자리가 없

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의 문제, 앞으로 애를 낳거나 이래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어린이집도 부족하다고 그러고 유치원은 더 부족하고 이런 점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장애가 된다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정책을 기본 방향으로 해서 제3차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령사회 대책 관련해서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 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하나의 큰 방향으로 잡았고, 또 노인들 일자리를 늘려가는 문제 그리고 의원님도 걱정하시는 공적연금 내실화 방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득을 보장하는 그런 데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세웠습니다.

정부는 제3차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세우고 나서 발표가 되고 또 벌써 지난 9개월 정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특히 저출산 대책 같은 것은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고 통계적으로도 그것이 또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관해서 아마 범정부적인 토의를 통해서 보완책들을 마련해 가지고, 얼마 전에 또 저출산에 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구조 개혁의 큰 틀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형수 의원 예.

제3차 기본계획을 보면 매년 20조 이상의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만 배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총리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대책 말고 다른 대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그 대책 발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있고 또 외국의 사례들도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정부의 걱정은 그런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을 효율화하고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지금도 여전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3차 기본계획의 보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마는 그 보완 대책을 또 보완해 가는…… 그건 결국은 전문가들의 영역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들, 그러니까 결혼을 앞둔 사람, 결혼을 한 직후의 사람들, 앞으로 좀 만혼, 나이가 많았지만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만혼자들, 여러 영역의 사람들



의 얘기를 들어 가면서 보완책들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서형수 의원 예.

고령층은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의 자화상입니다. 현재 고령층이 겪고 있는 빈곤과 불안을 그들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안전한 길만 찾고 인생의 모험을 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정된 직장을 선호하고 결혼과 출산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고령층의 생활 안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노인 빈곤율이 거의 반 가까이 됩니다. 사십칠점몇 % 이렇게 되는데 정부는 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시다마는 기초연금을 개혁했습니다. 재작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저도 현장들을 많이 다녀 보면 좀 어려웠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어르신 일자리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시다마는 지금 정부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매년 5만 개의 자리들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는데 정부는 앞으로도 공적연금을 좀 더 내실화하면서 또 의료비 부담 같은 것을 좀 경감을 하는 방안들을 고려하는 등 종합적인 시각에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민간 분야와 함께, 물론 경제인들도 같이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생애의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 한계 노동시장에서 인생의 후반기를 보내고 있는 퇴직 후 은퇴 전 세대들이 고용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 소득 사각지대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사회에 짐이 되는 잉여 세대, 난민 세대가 아니라 이 사회에 힘이 되는 주력 세대, 구조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개인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사회의 품격도 올라가고 국가의 진정한 경쟁력이 살아나 우리 청년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정부도 5년 임기라는 시간 제약을 벗어나 이 나라와 우리 후손들의 장래를 위해서 긴 안목으로 고령사회의 문제, 특히 퇴직과 은퇴의 중간영역에 있는 새로운 고령층 문제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가 전체 인구의 30%가 된다는 것은 그들이 전체 유권자의 40% 가까이, 그리고 전체 투표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따라 이 나라의 장래와 후손들의 미래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 세대들이 세대 이기주의를 넘어서서 공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으려면 이들이 처한 빈곤과 불안을 지금부터 줄여 나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서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경주 출신의 김석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지금 국무위원들 식사를 못 하고 있어요. 의장님은 밖에 나가 식사하고 오시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계속 여기 있고…… 아니, 식사도 한 시간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알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국무위원들을……

(장내 소란)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그리고 사회권을 왜 우리 부의장한테 안 주는 거예요?)

(「의장님 식사했어요? 의장 식사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도시락 드시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자, 여러분들께서……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이것 정말 이러셔도 됩니까? 아니, 의장이 자기만 밥 먹고 오고 뭐 하는 거냐고. 그리고 왜 사회권을 부의장한테 넘겨주지 않느냐고요?)

(「왜 의장님은 식사하고, 부의장은 교대로 하고 말이야, 총리하고 저 부처 장관들은 식사도 못 하고 말이야,」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의

장님은 밖에 나가서까지 식사하고 왔잖아요.)  
들어가세요. 어서 들어가세요.

김석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우상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이 근처로 오시면 선진화법 위반이에요, 올라오시면. 아시지요?)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잡아가, 잡아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의장님이 질서 지키고 의장님이 모범을 보이셔야지」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이건 인간적으로 좀 심하게 한 거야. 한 시간이라도 좀 주세요.)

오늘 의사일정이 너무 복잡해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뭐가 복잡해요? 2시 반부터 했어요, 2시 반부터」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 말씀 잘 알아들어요.

(「국무위원은 사람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배를 쭈쭈 굶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의총 하느라고 못 먹고……)

(「예의도 없어요, 예의도! 예의도 없어요, 의장은!」 하는 의원 있음)

(「새누리당이 참여 안 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자, 자리로 들어가세요.

김석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의장님은 식사하시고 이것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저도 말 좀 합시다.

(「국무위원들은 뭐 먹을까?」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시간 주세요. 시간을 줘야지 말이야, 새누리당 부의장은……」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우리도 밥 못 먹었어요. 아니, 김밥 먹을 시간이라도 줘야지.)

아니, 김밥 돌아가면서 드시면 되지요.

(「국무위원들은 뭐 먹어요?」 하는 의원 있음)

자,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거나 저나 똑같이 국무위원들 걱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일정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석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의장, 식사했잖아. 왜 어쩔 수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나를 끌어내세요, 그러면 나를.)

(「빨리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여기 속기사 직원들도 식사해야 되고 다 식사해야 돼요」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이걸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저도 국무위원들 걱정해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뭐가 어쩔 수가 없어요. 차수 변경하면 되잖아요, 차수 변경」 하는 의원 있음)

오늘 새누리당 의총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이걸 독립된 국회의 오랜 관례와 전통을 갖다가 완전히 짓밟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적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나오세요.

(「의장님 배불러요? 의장님 배부릅니까?」 하는 의원 있음)

(「빨리 해야지, 이 시간에 뭐 하는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루 종일 말이야 국무위원들을……)

(「사회권 넘기세요」 하는 의원 있음)

(○김도읍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도 굶어 가면서 사회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뭘 알아서 합니까?)

좌우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들어가세요.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양심이 있어야지. 하루 종일 굶기고 말이야, 국무위원들을. 그러면 의장님도 식사를 하지 마셨어야지요. 의장은 밖에 나가서 식사하고 오고 말이야,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내가 밖에 나가는 것 봤어요?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식사하고 오셨잖아요, 식사하고.)

왜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 밖에 나갔어요?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여

기 회의장 밖에 나가서 식사했잖아요.)  
 회의장 밖에 안 나간 의원 누가 있어요?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왜 의장님은 식사하고 국무위원들은 굶집니까?)  
 자, 김석기 의원 질문하세요.  
 (「국무위원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사회권 넘겨」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더 안 돼요, 더는 안 돼.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회의 이렇게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오늘 회의 이렇게 늦어진 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잘 하시면서 그러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누구 때문이라니, 의장님이 허락하신 문제입니다. 의장님이 허락하셨어요, 2시에 개의하는 건.)  
 회의 진행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합니다.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2시에 의장님이 개의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식사하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당신이나 걱정하세요.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30분 만이라도 시간을……)  
 회의 진행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김밥 먹을 시간은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제가 걱정한다니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저는 왜 걱정하면 안 됩니까?)  
 아니, 됐어요, 됐어.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사회권 조금만 주시고……)  
 자,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저분들은 인격이 없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2시간 반이나 늦어졌잖아요?  
 (「밤새워도 돼요, 밤새워」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저분들이 무슨 죄수예요? 국무위원들은 식사할 권리도 없어요?)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국회가 이

런 오점을 남기면 안 되지요. 국회가 이런 오점을 남기면 안 됩니다.)  
 (「의사일정 방해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공정하게 사회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총리랑 국무위원들을 하루 종일 굶기는 국회가 어디 있느냐고요? 30분만 달라는데 그걸 안 줘! 식사할 시간은 줘야 될 것 아니냐고, 자기만 밖에 나가서 먹고 오고 국무위원들은 하루 종일 굶기고…… 국회에 오점을 남기지 마세요. 양심이 있어야지!)  
 (「지금 오점 남기고 있구면, 빨리 들어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자신 있으면 끌어내 봐, 자신 있으면 끌어내 봐!)  
 (「주머니에 손 넣고 뭐 하시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자신 있으면 끌어내 봐!)  
 (「손 빼세요, 손!」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대표님, 왜 반말하십니까? 말 조심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30분만 줘요.)  
 자, 그만하세요.  
 어서 가세요, 어서.  
 빨리 합시다, 빨리.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빨리 뭘 해요?)  
 (「못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공정하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국무위원님들, 식사하셨어요? 식사 안 했답니다.)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사회권 조금만 넘겨주시든지……)  
 (「의장님,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할 권한이 있지만 국무위원은 필리버스터 할 권한이 없어요.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국무위원 필리버스터 한 적 없어요.)  
 (「국무위원 누가 필리버스터를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누가 필리

버스터 해요?)  
 왜 이러세요?  
 (「답변 기회를 줘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답변 기회를 줘야지, 답변 기회를……」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사회권도 안 넘기고 식사할 시간도 안 주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소리 마세요.  
 왜 이런 상황이 초래됐는지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의장,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2시 개의는 의장님이 합의해 준 사항이에요, 의총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의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이치에 맞게 행동하세요. 잘 아시면서 그러세요?  
 (「30분만 시간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식사할 시간 주세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때문에 그랬지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빨리 들어가세요.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저녁식사 정회 주세요.)  
 (○박완주 의원 발언대 옆에서 — 2시 반 누구 때문에 기다렸습니까? 바로 여당 여러분 때문에 기다렸어요. 뭘 소리 하고 있어요? 반론 있으면 나오세요, 제발!)  
 (장내 소란)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식사시간 30분만 주세요.)  
 (○우상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이것 지금 정진석 대표가 의장석을 점거해서 의사진행 방해하는 거예요.)  
 (○박완주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선진화법 다 위반이에요.)  
 (○우상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사진행 방해는 선진화법 위반이에요. 항의하셨으면 이제 들어가셔야지.)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30분만 주세요, 30분만. 30분만 식사할 시간 주십시오.)  
 (「밥 먹어야지, 밥」 하는 의원 있음)  
 (○박완주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쉬셨잖아?)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나한테도 사회권을 넘겨주세요, 줘.)  
 (「30분 해요, 30분」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김밥 먹을 시간 30분만 달라는데…… 30분만 달라는데 왜 안 줘? 국무위원들을 하루 종일 굶기고 말이야!)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건데요?」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누구 때문이라니? 2시 개의는 의장이 양해해 줘서 의장이 결정하신 사항이에요, 여러분.)  
 (「여당이 자처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사회권을 야당 부의장한테만 넘기고 여당 부의장한테는 사회권을 안 줘, 이런 대정부질문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고?)  
 (○우상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원내대표가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봤어요, 헌정 사상? 뭐 하는 거야, 지금?)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체포해. 체포해라, 체포.)  
 (○우상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뭐 하는 거야, 지금.)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체포해.)  
 (○우상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뭐 해? 정당하게 어필하는 거야.)  
 (○우상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왜 의사진행을 방해해요, 지금?)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정당하게 어필하는 거야.)  
 (○우상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대정부질의 끝나고 어필하세요. 왜 대정부질의를 방해하세요?)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이건 어필 아니냐고?)  
 (「식사 안 해요, 식사. 국무위원 식사 안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우상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하고 오시라고. 모시고 가세요, 그렇게 걱정되시면.)

(○박완주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지금 사회권 넘겨받고 싶다고 솔직히 얘기해요.)

김석기 의원, 질문 안 하시겠습니까?

김석기 의원……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만약에 김석기 의원 질문 안 하시면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장내 소란)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완전히 의회 독재야, 의회 독재! 아니, 질문권을 박탈하겠대! 의회 독재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 헌정사에 이런 적이 없었어! 해 볼 테면 해 보세요! 실컷 한번 해 보시지요. 아니, 대정부질문…… 헌법기관이에요, 헌법기관. 의장이 맘대로 박탈할 수가 없어요.)

김석기 의원, 어서 질문하세요.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헌정사에 이런 적이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30분만 시간 주세요.)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진정하세요.

(「헌정사에 이런 적이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똑바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국회를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진정하세요.

시시비비를, 이치를 잘 따져 보세요.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최소한도 의회 양심이 있어야지요.)

누가 이런 상황을 초래했는지 잘 따져 보시라고요.

(「의장님이 이치를 잘 따지란 말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자,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답변하지 않겠어요.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사회권 넘겨주시고 순리대로 하세요.)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이 공정하게 사회를 봐야지, 공정하게. 아니, 이렇게 편파적인 국회의장이 세상 어느 천지에 있냐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내려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여러분들 식사했어요?)

(「안 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식사하셨어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이것 봐. 자기들은 다 먹었어. 우리 식사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식사할 시간을 줘야지요. 우리도 개개인이 헌법기관입니다. 저녁도 굶고, 이렇게 우리를 학대합니까? 의장이 이렇게 우리의 식사할 권리마저 빼앗으면서 학대할 권한이 없어요.)

(「이것은 학대입니다, 학대!」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이것은 인격권에 대한 침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원 총회를 했고 다른 당도 했고, 2시에 하자는 것 양해해서 의장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우리 때문에 늦어진 거예요?)

(「항의하지 말고 빨리 진행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여당 부의장님한테도 공평한 사회 기회를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한테 사회권 넘기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경호권 발동해서 저를 끌어내실 겁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정진석 대표님, 이 시간에 빨리 진행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저한테도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경호권 발동해서 날 끌어낼 건가? 의장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1시간만 시간을 주세요. 시간을 주십시오.)

(「30분 줘요, 30분」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식사시간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30분도 안 돼요, 30분?」 하는 의원 있음)

(「좀 창피해집니다.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식사했어요? 의장, 식사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조금만 쉬시고 저한테 사회 좀 넘겨주시고 그러세요.)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사회권 넘

겨주세요. 아니, 이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야당끼리만 사회를 봅니까?)  
 (「사회권을 공정하게 주셔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결의안은 나중에 마지막에 하시면 되잖아요.)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야당끼리만 사회를 본 경우가 있었어요? 부의장이 2명인데 왜 한 사람한테만 계속 사회권을 주냐고. 아니, 이런 독재가 어디 있어? 이런 의회독재가 어디 있냐고, 도대체. 의회민주주의가 이렇게 파괴돼도 되는 겁니까?)  
 (○우상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식사하고 오세요.)  
 (「국무위원 식사시간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밥 먹고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독재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사회권을 어떻게 야당 부의장한테만 주냐고.)  
 (「이런 법이 어디 있어!」 하는 의원 있음)  
 (「공정하게 하십시오, 국회의장!」 하는 의원 있음)  
 (「30분만 시간 달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여당 부의장한테 사회권 주세요. 평상시에는 한두 시간이면 넘기더니, 의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우상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우리는 조용히 합시다. 이 모습을 국민들이 다 보시니까 조용히 합시다. 창피한 줄 알아야지. 빨리 가서 앉아요.)  
 (「뭐가 창피하기는 창피해!」 하는 의원 있음)  
 (「식사시간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요건도 안 되는 해임건의안을 낸 사람은 창피하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여당 부의장님한테도 공정하게 사회권을 나누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숫자가 많다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저한테도 한 번은 기회를 주세요.)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한 번은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편파적인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공정하게 사회권을 주시는 게 맞지요!」 하는 의원 있음)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빨리 들어가세요.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이것은 탄핵사유예요, 탄핵사유라고. 의장님 저를 그렇게 다루지 마십시오!)

어서 들어가세요.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저도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입니다, 의장님. 저도 4선 의원입니다. 원내대표입니다, 의장님.)

(「국무위원 밥도 안 먹이는 게 상식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저도 16대 때부터 국회의원 했습니다, 의장님!)

(○우상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그러면 국무위원들 돌아가면서 식사하고 오시게 하겠습니까.)

예, 그건 좋지.

(「의장님, 우리 부의장님한테 사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지금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국무위원이 돌아가면서 식사가 가능합니까? 말이 안 되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우상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이 시간이 더 배고파, 이렇게 오래 끌면.)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인간적으로 삼사십 분이더라도 식사할 시간 주세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회의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돌아가면서 드시라고 그러잖아요.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국무위원이 돌아가면서 먹으면 질문자는 밖에 나가서 질문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말 씀이세요.)

(○김도읍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국무총리는 누가 대신합니까, 국무총리 자리는? 돌아가면서 한다고 해도.)

(「우리 여당 부의장님한테도 공정하게 사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우리 부의장님 나와서 서 계시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드시게 하세요.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잠깐 30분 만이라도 나가서 드시게 하고 와야지 어떻게 교대로 먹습니까? 국무총리 없으면 누가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교대로 먹기는 뭘 교대로 먹어요. 우리는 지금 식사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면서 밥을 먹어요? 말도 안 되지」 하는 의원 있음)

(「양심껏 얘기하세요. 식사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회의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 정도 아량도 없습니까? 국회의장님, 그 정도 아량도 없습니까? 그렇게 속이 좁아요?」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조금만이라도 기회를 주십시오.)

(○김도읍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부의장님께서 단상 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의장님, 우리 새누리당 부의장님한테도 사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들어주세요, 어서 들어가시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의진행을 결과적으로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우리는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확립된 국회의 전통과 관례에 따라서 우리가 왜 식사를 못 하고 이렇게 합니까?)

의논해 보세요, 그러면 좀. 일단 김석기 의원 발언하시고 의논해 보세요.

김석기 의원.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사회권도 조금은 넘겨주세요.)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아니요. 안 돼요. 그건 안 되지. 그러면 정회를 하세요.)

의논하시라니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잠깐 정회를 하면 우리가 할 테니까, 식사하고 30분 만에 속개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의논하세요, 의논하세요. 어서 의논하세요. 그러지 말고 의논하세요, 의논하시라고. 의논하세요.

박지원 대표님, 어디 가셨어.

(「대한민국 국회는 정말 창피해!」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30분만 정

회해 주세요. 30분만 정회하자고.)

(○우상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가서 의논해요.)

(「어떻게 회의진행을 이렇게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의논하세요, 어서. 지금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제가 집권여당의 원내 사령탑입니다. 저 16대부터 국회의원 했습니다, 의장님. 이렇게 저를 다루시면 안 되지요. 최소한도 인격권을 보장해 줘야지, 인격권을!)

(○우상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원내대표간에 회담을 하자니까 왜 회담을 거부해요. 이게 뭐야, 집권당 태도가 이게 뭐야!)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마지막 결의안 하실 때는 하더라도 한 번은 주세요.)

(「사회권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어서 가시라고. 빨리 하시게 하고 의논하세요, 의사일정을.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그러니까 30분만 정회해서 식사할 시간 주세요. 제가 1시간 달라는 것도 아니고.)

(「30분만 정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우상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정회를 하더라도 질문은 하면서 정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행하면서 정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시간을 자꾸 없애세요. 지금 벌써 시간이 얼마가 낭비됐습니까?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마지막 결의안은 직접 하시더라도 저한테도 한번 주십시오.)

(「정세균 의장님, 정말 요즘 정세균 의장님 옛날 정세균 의장님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의장님 좀 상식적으로 합시다, 상식적으로!」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 의총 하시느라고 2시간 반 없었지요. 또 국무위원들이 길게 답변하셨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정회하고 식사하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의장은 오늘 주어진 의사일정을 제대로 잘 처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해요, 밤새도록」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국무위원들이 답변하는 것 잘 보셨지요, 어떻게 하셨는지?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국무위원들이 소상하게 답변한 것을 필리버스터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런 착오가, 이런 오류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국무위원들 생각하면 빨리 끝내고 편하게 식사하시라고 빨리 보내 줘야 될 것 아니야!」 하는 의원 있음)

(○우상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본회의는 진행을 하면서 정회 여부를 의논하게 해 달라니까 왜 막아요? 이게 맞잖아요. 정회 여부도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해야지.)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마지막 결의안은 직접 하시더라도 그 전에 한 번은 기회를 주세요.)

(「도저히 그것 안 됩니다. 30분만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우상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왜 안 돼요? 모든 것은 여야 원내대표가 의논했잖아. 의논합시다!)

(「의장님은 어느 당도 아니잖아요. 당 소속이 안 돼 있잖아요. 공평하게 하셔야지!」 하는 의원 있음)

(「일단 정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정 대표, 박지원 대표도 오셨으니까 세 분이 의논 좀 하세요. 세 분이 의논 좀 하시라니까. 세 분이 의논 좀 하세요.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내가 의장님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를 비울 수가 없어요, 어필하러 나왔는데.)

오늘 내가 정진석 대표의 인격을 믿는데 오늘 2시간 반 의총 하셨잖아요.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답변 길게 하셨잖아요. 우리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원래……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그런데 국무위원들 답변 길게 들으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책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하는데 그걸 고마워해야지 그걸 의장이 문제 삼습니까?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정도가 있어야지요, 정도가 있어야지요.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정도가 있

다니요? 진지하게 토론을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지만 제가 국무위원들 답변하는 것 제지하지 않잖아요.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지금 필리버스터라고 얘기하잖아요, 필리버스터라고! 필리버스터라는 말 입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속기록에 있어요, 속기록에.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보세요.

(○우상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말꼬리 잡지 말고……)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말꼬리라니? 아니, 의장이 필리버스터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했어」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내가 다 들었어.)

(「나도 들었어」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지금은 또 안 하셨대. 한 바 없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부의장님한테도 사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박완주 의원 발언대 옆에서 — 3당이 할 테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따로 얘기합시다. 우리 수석끼리 얘기할게요. 정회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우리가 할 테니까……)

정 대표, 정 대표! 박 대표하고 같이 의논 좀 하셔. 의논 좀 하세요. 가서 의논 좀 하시라니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의장님 성질내실 일이 아니에요, 이게.)

가서 의논 좀 하세요.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제가 원내대표인데……)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저한테도 사회권을 좀 주세요.)

가서 의논 좀 하시고, 오늘 의사진행을 하는 것은 내 책임으로 하는 거예요.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러저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아니, 책임을 똑바로 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이것은 심대하게 의회의 관례를 깬 것이기 때문에 어



필하러 제가 나온 겁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다른 것도 아니고 식사할 시간 30분 달라는데 이걸 갖다가 의장님이 안 주실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완전히 인격권에 대한 훼손이라고.)

(「아니, 여당 대표가 왜 앞에서 자꾸 방해를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우상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김석기 의원이 안 하시면 우리 당 의원하고 질의 순서를 바꿔 주십시오.)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그게 맘대로 되나?)

(○우상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사진행 방해인데……)

(「질의 순서를 왜 바꿔요. 그대로 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사진행 방해가 아니라 김석기 의원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아니, 의논을 좀 하시라니까, 박 대표 오셨으니까. 저쪽에 가서 의논 좀 하세요.

(「못 내려가요. 정진석 대표 못 내려가요!」 하는 의원 있음)

정 대표, 어지간히 좀 하세요. 가서 의논 좀 하세요.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그러면 방호원을 불러서 끌어내시든가!)

자, 가서 의논 좀 하세요.

(「의장 결정하세요. 못 내려가요!」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나를 한번 끌어내 보세요!)

가서 의논 좀 하세요.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2시부터 예정돼 있었던 게 제가 사회권도 있었잖아요. 한 번을 주시면 되잖아요!)

(「못 내려가요, 못 내려가. 우리가 못 내려가게 할 거야!」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이런 식의 국회를 나는 눈 뜨고 본 적이 없어!)

정 대표.

(「아니, 한 시간도 아니고 30분만 하면 되는데……」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너무 잔인

합니다, 의장님.)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서 될 것 같습니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이런 식이라니요? 의장님은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제가 말해 볼까요? 의장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우상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앉으세요.)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그러면 안 돼요, 의장님.)

(○우상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건데 앉아 계세요.)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이야말로 정치적 의도를 버리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라고.

(○우상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사진행을 방해하려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집권당 소속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려고 이러면 되겠어요?)

(「밥 좀 먹읍시다, 밥 좀!」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무소속 국회 의장은 편향돼야 됩니까, 공정해야 됩니까?)

(「공정해야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공정해야 됩니까?)

(「공정해야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상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여기서 이렇게 정치집회 하면 돼요? 저도 한번 연설해 볼까요?)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연설해. 연설 한번 해!)

(「우 대표도 한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한번 하세요, 한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우상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나가서 얘기해요. 박지원 대표랑 같이 얘기하자고.)

(「못 내려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왜 그렇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못 내려와요, 못 내려와!」 하는 의원 있음)

(○우상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3당 원내대표 회담을 해서 정리해야지 이렇게 위력으로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못 내려와요. 우리 정 대표 못 내려와요!」 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방해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해!」 하는 의원 있음)

(○우상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정회를 하더라도 3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야 될 것 아니야?)

(「아니, 지금 의장이 결정하면 되지!」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도대체 30분 밥 먹고 하자는데 이게 안 돼?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이게 어느 법입니까, 우 대표님?」 하는 의원 있음)

(○우상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이렇게 한다고 안 될 것 같으세요? 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끌어 본 여당은 없어요. 어떻게 의사진행 방해하면서 시간을 끌 생각을 하세요. 그것밖에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래?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아니, 빌미도 어떻게 국무위원 식사 때문에 의사진행을 방해하세요!)

(「의장님 식사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식사가 아니라 여당 부의장한테 사회권 넘기라는 얘기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 대표 내려오시면 안 돼요!」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이것은 의회 독재야. 어떻게 대정부질문 역사상 한 분의 부의장에게만 사회권 준 적이 있나!)

(○우상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논을 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정치집회 식으로 하면 어떻게 의논을 해.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잖아!)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한 번은 주십시오.)

(「공평하게 하세요, 공평하게!」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2시부터 예정돼 있었잖아요.)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정회를 하고 해!)

(○우상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진행을 하면서 해!)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정회를 하고……)

(○우상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명백히 의사진행 방해예요, 이걸!)

(「부의장님한테도 사회권을 한번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정회하세요, 정회!」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정회하십시오, 지금 상황에서!)

(「아니, 국회부의장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 어떻게 해!」 하는 의원 있음)

(「회의 진행을 공평하게 해 주셔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정회 잠깐 해 주세요, 의장님. 저희들도 밥 좀 먹어야겠어요, 30분만이라도!)

(「정 대표 내려오면 안 돼요!」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끌고 내려가려면 끌고 내려가 봐, 한번!)

(○우상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담해서 정회할게.)

(「정세균 의장님, 역대 어느 의장님보다 이렇게 편파적인 의장님이 정세균 의장님 말고 없었어요!」 하는 의원 있음)

(「다 있었습시다, 우리도!」 하는 의원 있음)

(○우상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우리 야당 때도 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안 했어요, 한 번도. 끝나고 가서 의장실에 가서 항의를 했지 이렇게 의장 단상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방해 안 했어요.)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사회권 한번만이라도 주세요.)

(「방해하지 말고 빨리 내려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정 대표 내려오면 안 돼요!」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사회권 한번 주십시오.)

(「식사는 다 하고 들어와서 국무위원 챙기는 척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원래 2시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좀 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주셔야지요.)

(「정진석 원내대표님 단상 점거하지 마세요. 내려오세요, 이제. 의사진행 방해하는 겁니다. 내려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이러시면 최악의 의장님으로 남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미 최악 됐는데, 뭘!」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무위원들 잠깐 식사할 시간만 주세요.)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한 번의 기회는 주십시오.)

(「대정부질문의 계속하세요. 시간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우리가 의총 때문에 2시에 개의하는 걸 의장이 그렇게 양해하고 결정을 해 주신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고요.)

(「심재철 부의장님 한 말씀 하이소!」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원래는 제가 2시부터 사회를 보기로 했었는데 아침에 좀 미뤄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려니 하고 했는데, 이제는 지금은 그래도 한 번의 기회는 좀 주셔야지요.)

(「의장님, 부의장님한테 사회권을 넘기시고 대정부질문을 그대로 계속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사회권을 넘기려면 여당 부의장한테 먼저 넘겨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사회권을 좀 넘기세요. 이게 뭐니까, 이게!」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마지막 결의안은 여차피 의장님께서 하실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아량이 없습니까, 국회의장께서? 아량을 가지십시오, 아량을.」 하는 의원 있음)

(○우상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그 정도 했으면 충분했습니다. 앉으세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 대표님!」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우리 부의장님한테도 사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한 번 주시고 대정부질문을 속개하시지요, 그대로요!」 하는 의원 있음)

(「얼마나 무시합니까,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사회권 넘기세요!」 하는 의원 있음)

(「무시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숫자가 많다고 그렇게 횡포 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대정부질문 하고 있는데 막는 게 어디 있어!」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총리 무시하지 마시고 식사시간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가서 밥 먹고 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정회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식사하고 오세요, 가서!」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결의안은 의장께서 직접 처리하시더라도 그 전에 대정부질문 사회권은 한 번은 좀 주십시오. ‘한 번쯤이라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안 받아들이시니까 참 답답하지요. 여차피 마지막 결의안은 의장님께서 하실 것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하십시오.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중요한 법안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는 의원 있음)

(「역사에 길이길이 남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깐 정회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합리적으로 하십시오. 여당 부의장에게도 사회권을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한 번의 기회는 주십시오, 오늘은.)

(「여당 부의장한테 사회권 넘기세요. 야당을 뒀으면 여당한테 넘겨야지요. 그리고 교대는 여당과 먼저 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단상 점거 그만하시고 내려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직도 대정부질문 많이 남아 있잖아요.)

(「국회의장님,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우리 심 부의장님한테도 사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처리 안 한다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사람이 창피한 줄 아셔야지!」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중립 지키세요, 어른스럽게!」 하는 의원 있음)

(「국회의장이 어른스럽게 하십시오, 어른스럽지 않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아직도 4명이나 남아 있는데 한 30분만이라도 주세요.)

(「여당 부의장에게도 사회권을 넘기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방해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단상 점거 그만하세요, 이제!」 하는 의원 있음)

(「대정부질의 계속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직 대정부질문이 네 분이나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결의안은 의장님께서 처리하시기 때문에 중간에 대정부질문 한 30분만이라도 주십시오’ 했더니 그것도 못 주시겠다고 이러는데 조금 심하셨잖아요.)

(「사회권 넘기세요, 사회권 넘기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부의장이 의장한테 사회권 내놓으라고 그러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한쪽만 주니까 그렇지, 한쪽만!」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원래 오늘 2시부터 3시까지가 제 순서였어요.)

(「예의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는 의원 있음)

(「여당 부의장부터 먼저 쥐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예의가 아니지, 예의가!」 하는 의원 있음)

(「국회의 관례를 파기하는 국회의장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원래 2시부터 3시까지 제 시간이었어요. 저한테 예정됐던 시간인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주십사 하는 거예요.)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30분만 정회해 주세요.)

우상호 대표님, 정 대표님하고 박지원 대표님하고 의논해서 빨리 원만하게…… 이게 부끄럽게 됩니까? 도대체 국민들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의논 좀 하세요, 빨리 해야지……

(「국회의장이 부끄럽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상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점거하는 게 목적이지 대화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30분만 달라고 요구하는데……)

그래도 빨리 의논 좀 하라니까.

가서 의논 좀 하세요.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이런 관례가 없습니다, 의장님.)

가서 의논 좀 하시라고, 관례 다 있고 내가……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없어요, 없어. 제가 다 찾아봤어요.)

과거 전부 다 내가 조사해서 하는 거니까 나중에 문제 있으면 따지시고 가서 의논하세요.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여당 부의장한테 사회권을 안 준 관례가 단 한 차례가 없어요.)

아니, 그런 소리 말고.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없습니다, 없고. 국무위원들한테 식사시간도 안 주고 밤새도록 잡아 놓은 전례가 없어요, 의장님. 이건 국회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는 거예요!)

(「내려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독재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우리가 부끄러운 오점을 남길 수 없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우리가 절제력이 있어야지 국회가 이런 식으로 일탈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탈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그만하세요, 대표님!」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장관 해 보셨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정회해요!」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다수 의석을 가졌더라도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회는 오랫동안 확립된 전통과 관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존중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내려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국회의장은 지금 국회의 관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심재철 부의장님을 이렇게 오래 서 계시게 하면 안 됩니다. 사회권을 드려야 됩니다!)

(「내려오세요, 의사진행 방해하지 말고!」 하는 의원 있음)

(「내려오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러면 의장님 진행 안 시켜야 돼!

의장님, 내려가면 안 돼요, 내려가면」 하는 의원 있음)

(「정세균 의장, 거기에서 내려오지 마!」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내려가면 안 돼요!」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내려가시오! 단상 점거는 현행범이야!」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사회 한번 기회를 주세요.)

(「여당 부의장님은 부의장님이 아십니까? 왜 의사진행권도 야당에만 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한테도 사회권 줘야 돼요!」 하는 의원 있음)

(「정상적으로만 하셔어도 안 이렇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상식대로 합시다. 상식을 지킵시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우리 심 부의장님도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정 대표, 오늘 의안을 처리할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냥 맡겨 놓는 게 의장이 아니야. 의회를 운영할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저희 식사 30분에 할 테니까……)

(○우상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심상정 대표가 30분 정회는 동의했습니다. 정회해 주십시오.)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그러니까 우리 부의장한테 사회권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8시 25분이기 때문에……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그것도 그러면 양해받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아 니, 왜…… 이것은 정당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정 대표!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어떻게 심재철 부의장한테 사회권을 안 줘요!)

어허! 그것은 내 고유권한이에요.

(「사회권 넘기세요!」 하는 의원 있음)

(「심 부의장님에게도 사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3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이 8시 26분인데,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9시에 정식 개의하겠습니다.

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7분 회의중지)

(2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님들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충분한 시간도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 경주 출신의 김석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천년 고도 경주 출신 새누리당 김석기 의원입니다.

이번 지진 이후 박근혜 대통령님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님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와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황교안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께서도 직접 경주 피해 현장을 방문해서 많은 관심 표명과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어제 경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서 26만 경주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감사합니다.

○김석기 의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미르와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총리님, 논란이 되고 있는 두 재단을 두고 청와대 비호설, 최순실 씨 개입설 등을 계속 주장

하고 있는데, 이런 논란이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국가적으로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혹에 대해서 근거가 있고 또 뒷받침할 만한 이야기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국회가 아닙니까? 그리고 질의할 때나 또 답변하는 저희 공식 입장에서도 그게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맞지 않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증거 얘기를 하고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쪽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오늘, 이번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 전에는 들어 보지 못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질의가 나오시고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보도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근거가 있다는 그런 것이 전혀 나오지를 않았습시다.

관련된 부처에서는, 문체부에서는 나온 쟁점들마다 점검해 보면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서 재단 설립 과정에 의혹이 있다 하는 그런 부분도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한 것이고 또 그게 하루 만에 됐다 하는 그 부분도 제가 그래서 달리 알아보니까 하루 만에 재단 설립허가가 난 것들도 있고 또 이틀 만에 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요건에 갖춰지고 충실한 것이냐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리 길게 되었어도 부정할 것 같으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아무리 짧게 되었어도 정확하게 다 절차도 갖추어지고 내용도 충실하다면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단기간 내에 많은 돈을 모았다 하는 이런 부분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예를 들면 전경련에서 사전에 이런 기업들 사이에 공감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장내 소란)

(「짧게 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너무 길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국무총리가」 하

는 의원 있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가면서……

(「기록에 다 남아요, 기록에」 하는 의원 있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면서 그러면서 협의를 해왔었기 때문에 기업들 사이에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이 쟁점들이 계속 반복되어 오고 있어서 그것을 제가 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이원욱 의원 의석에서 — 총리님, 시간 끌어도 차수 변경해 가지고 김재수 해임건의안 내일이라도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짧게 짧게 하세요.)

의혹을 제기로, 의혹을 근거로 해서 그런 것을 확산시키는 것은 근거가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전반에 관해서 실제로 진행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이렇게 선불리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신중하게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석기 의원** 이 두 재단을 설립할 때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전경련 관계자가 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청와대로부터 사전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사회 공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되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자발적인 공헌 활동도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서 어제 그 내용들을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단을 설립한 경위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계로부터 오래전부터 기업들이 한류 덕을 보면서 문화 사업에 기여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기업들이 준비를 했던 그런 것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재단 설립이나 또 기금 모금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런 자세한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모금 과정에 대해서도 사회적 필요성이 공감되고 또 논의 과정만 마무리되면 모금에 참여하겠다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이지만 많이, 적지 않게 그렇게 모금이 되

었다는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체부 허가라든지 또 최 아무개 씨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되는 최 아무개, 2대 이사장인 모양인데 그 선임 과정에 개입했다는 그런 주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 당사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국회에서의 이런 불필요한 논의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석기 의원**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재단을 두고 박 대통령의 퇴임 후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정부 초기부터 박 대통령님과 일을 함께해 오신 총리께서 보실 때 대통령께서 퇴임 후까지 대비해서 재단을 만들 그런 분으로 보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퇴임 후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돈이 과연 필요한가…… 저도 사실은 공직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했고, 변호사를 하면서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 수 없는 적지 않은 변호사 수입이 있었다 해 가지고 지적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중의 일부를 또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것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불법까지 저질러 가면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대통령께서 공개하신 재산이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제가 3년 7개월을…… 저는 그 전에는 전혀 몰랐던 분입니다. 그런데 장관으로 들어와서부터 시작해서 3년 7개월을 업무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접촉을 많이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과정을 비추어 보면 정말 부적절한 일을, 그분이 조금이라도 연루가 될 분이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계속 저에게도 우리 공직자들, 특별히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공정한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이런 의혹과 관련된 이런 것에 연루될 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잘 알겠습니다.

국론을 하나로 합쳐도 지금 나라가 어려운 때입니다.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해서 국론을 분열하고 정쟁으로 가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체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은 경주 지역 지진과 관련해서, 420여 차례의 여진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주는 원전만큼 걱정되는 게 바로 경주의 문화재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문화재의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제가 경주에 내려갔을 때 문화재…… 그 당시에는 60여 건의 크고 작은 문화재의 손상이 있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 정밀검사를 하면서 조금 더 숫자는 늘어난 것으로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석기 의원** 문화재의 경우에는 한 번 훼손이 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세심한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제가 내려갔을 때에는 불국사 대웅전 기와의 한쪽이 죽 쏠려 내려와 있었었고, 특히 다보탑의 경우에는 부러졌던 난간석이, 고여져 있는 곳이 진동에 의해서 미끄러져 내려와서 있었었고, 또 전에 언론보도에는 미처 되지 않았지만 석가탑의 일부 구석 부분의 돌조각이 떨어져 있었었고요. 또 오릉의 경우에는 담장의 기와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안에 전시된 유물의 경우에는 건물 전체의 내진 설계와는 별도로 유물 하나 하나의 밑에 면진 장치를 하지 않으면 유물을 보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것은 좀 이따 제가 화면으로 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큰 지진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문화재에 대한 지진재난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진을 직접 겪으면서 보니까 매뉴얼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었고, 특히나 지진 당시의 보고 체계를 좀 더 정비해야 될 문제들, 그리고 문화재의 경우에는 정밀한 현지조사단을 구성·운영해야 되는 초기 대응이 매뉴얼상에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들을 다 보완해서 문화재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 초기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매

뉴얼의 작동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문화재의 이런 지진 이외에도 재난 발생 시에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할 인력이 필요한데 사실은 권역별로 잘 완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기동보수단 등의 인력을 거점별로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잘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국민안전처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 이후에 누구보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마는 이번에 안전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난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다’ 또 ‘늦게 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조속하게 CBS 재난 문자방송 그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런데 이번에 경주시가 주민 피난 문자를 발송하려고 국민안전처에 승인을 요청했는데 반려했다는 보고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것 할 때 저희들이 문자를 경주시를 포함해서 경북·경남, 울산 그다음에 부산 등 관련 지역에, 저희들이 전송하는 지역에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경주에서 요청을 해서 그것은 반려가 됐습니다. 그 대신 9월 19일부터 여진 때 그때는 경주시에서 세 번 그다음에 경북에서 한번, 이때는 다 발송 저걸 갖다가 위임을 했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런데 이 상황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9월 12일 날 진도 5.8의 본진이 경주에 왔습니다. 그래서 경주시에서 국민안전처에 이 CBS 시스템을 이용해서 신속히 주민들에게 대피를 촉구하는 문자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아시는 거지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CBS는 지금은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60자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요령을 보낼 수 있는 용량이 되지 않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때 안전처에서 담당자가 ‘안전처에서 이미 1차 지진 시에 문자를 발송했기 때문에 발송할 필요가 없다’ 이런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의 경우에는 2차 본진이 와서 시민들을 빨리 대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대피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데, 안전처에서는 1차 지진 때 단순히 지진이 발생했다는 안내문자가 나갔기 때문에 더 보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지난번에도 제가 첫날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훈련을 해서 했는데…… CBS는 전국적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실제 상황이 대부분이고, 각 개인 휴대폰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문제점도 생기고.

또 홈페이지도 그렇게 많은 양을 보낼 수가 없었기 때문, 접촉이 되는 것을 시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것은 조속하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시험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석기 의원** 지금 화면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화면이 당시 휴대폰 긴급재난문자방송 시스템상의 화면입니다.

장관님, 중앙부처 상황실에서는 사실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급박한 상황을 감으로 느끼기가 현장만큼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긴급한 상황에서 현장의 판단도 상당히 중요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이 발생해서 긴급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시스템상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해서 반영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지금 시급하니까 적어도 안전처의 승인 없이도 현장 상황을 보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주민 대피 문자를 즉각 발송할 수 있는 식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긴급재난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지진뿐만 아니라, 지진이 지난번에 울산에서 있을 때하고 이번에 보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CBS에



서 보낼 그럴 대상은 태풍, 비—호우, 폭염, 가뭄 모든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야 됩니다, 안개 이런 것을.

태풍이 오는 것을 지자체에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태풍이 발생하기 전부터 TD, 저기압 그때부터 저희들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그리고 안개 끼는 것도 그게 낄 때만 알지 어디까지 끼는지는 모르시잖아요, 지자체에서.

제가 이번에 이 사항들을 어디가 문제가 있는 것을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느끼고. 그래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유념해서 CBS 그 발송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임하는 것 이런 것은 잘못하면 더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재난의 경우마다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전에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잘 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체부장관님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우선 화면의 영상을 한번 봐 주십시오.

다수의 국보와 보물을 전시 중인 국립경주박물관입니다.

다행히 이번 지진에서 역사관 외부 유리창이 깨지고 외벽 타일이 떨어지는 것 외에는 사실 특별한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만약 이번 지진에 이런 보물들이 넘어져서 깨져버렸다면 그것은 정말 아무리 돈을 들여도 복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박물관 전체 건물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내진설계 강화와 더불어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진동을 줄일 수 있는 면진·제진 기술을 박물관 등에 폭넓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바로 그 점이 당시 경주에 피해상황을 보러 대통령께서 내려가셨다가 문화재 피해상황 보고를 받으시고 지시를 하셨던 사항과 일치합니다.

박물관 내부의 흔들려서 쓰러졌던 유물들이 다행히 손상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국립박물관의 내진성능은 2005년을 기점으로 해서 내진의 강도가 변화가 있습니다. 2005년 이전에 세운 건축물은 규모 5.5 내외를 버틸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고, 2005년 이후에 건립된 박물관은 규모 6.5 내외를 견딜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감안하면 내진성능이 떨어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리노베이션할 때 제진장치를 보장하는 등 내진능력을 향상하는 방안하고 또 개별 유물의 밑에 면진설비를 도입해서, 중요한 문화재를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장관님, 화면 영상을 한 번만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일본에서 소개된 면진기술 테스트 영상입니다. 보시다시피 면진설비가 없는 경우와 또 면진설비를 작동시켜서 하는 경우 흔들림에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소중한 문화재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예, 의원님이 방금 보여 주신 그런 면진설비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천사지 10층석탑에는 그 밑에 면진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전국의 주요 박물관의 중요 문화재부터 면진설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경주지역에 사상 초유의 강진이 왔지만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께서 초기에 경주에 직접 방문해 주셨는데 경주에 초유의 강진에 의한 지진피해를 보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지만, 지금과 같은 그런 강진이 쉽게 오는 것이 아니었고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었는데 일본이나 이런 주변국에서 생기는 이런 지진만이 지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더라고 하는 것을 말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들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많이, 아마 민간시설까지 말하면 10% 이내고 공공시설 해도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설계가 되어 있고, 더

더구나 문화재들에 관해서는 과거에 지은 것들도 있고 중간에 보완이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지역에 따라서 지진이 굉장히 큰 피해로 이어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제가 과거에, 지난 5월 27일 날 지진대응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자료들이나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 초부터 안전처나 관계부처들과 함께 이 지진대책을 마련해 가자, 저희가 안전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서 여러 안전 상황들을 점검하고 있었는데 아이টে으로 잡아서 5월 27일 날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마련한 지진대책들이 저희들로서는 많이 보강한다고 했지만 보강계획 단계에서도 예산적인 문제가 있어서 원하는 만큼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주 등의 지진을 보면 이것은 미룰 일이 아니고 정말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투자해서 내진설계도 하고 또 재난통보시스템, 그게 저희는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준비만 해도 벌써 몇 년이 걸리는 그런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예산도 많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게 대처해 가야 되겠다, 현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김석기 의원** 생각보다 경주의 피해상황은 지금 심각합니다. 기왓장이 떨어지고 벽이 무너지고 벽에 금이 가고, 거기다 옆친 데 덮친 격으로 비가 많이 와서 집으로 비가 새고 금이 간 벽면에 빗물이 들어가서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주는 관광도시이지 않습니까?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수학여행을 취소하고 관광객의 숙박업소 예약 취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당·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계가 결정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에 소재한 많은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 역시 지진 진동에 의해서 정밀·자동 기기가 손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의 가동을 멈추고 있고 수리하는 이런 기업의 피해도 지금 상당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시민들의 정신적 충격이 대단히 큼니다.

이 여진으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많은 시민들이 정신과 치료,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고 또 청심환 판매가 10배나 늘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여진으로 시민 모두가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또 노약자, 임산부 이런 분들은 여진의 불안감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아예 피신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 총리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재산상의 피해나 문화재들도 많은 손상이 있어서 그런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정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문제는 트라우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건은 망가진 것을 보완하면 되지만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는 외부적인 노력으로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현장에 지원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누구든지 와서 상담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연결이 되면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까지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과 치유 프로그램으로 치료해 가는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트라우마에 관해서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폐해를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큰 상처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감사합니다.

총리님께서 단순한 지진 피해 복구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천년고도이자 대표적인 관광지인 경주시가 이번 지진으로 입은 유무형의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말 이 어려움을 딛고 잘 일어설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최근에 범정부 그리고 민간까지 같이 한 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했고 또 범정부적인 차원의 지원들을 함께 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지역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들까지 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또는 심리적인 제반 지원들을 아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제가 외교관 신분으로 일본에서 다년간 근무하면서 지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마는

그때 진원지의 지진 규모가 9.0이었고 384km가 떨어진 동경에서도 느끼는 진도가 6.0이었습니다. 이때 혹시 동경의 피해가 어땠는지 총리님 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굉장히 큰 피해라고 듣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제가 현장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마는 도시 전체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등 모든 통신수단이 다 마비가 됐습니다.

384km라는 것은 서울에서 부산 정도의 거리이지 않습니까? 통신수단이 마비되고 모든 교통수단이…… 지하철, 육상 교통, 공항까지 모든 교통수단이 다 올 스톱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가족 간에 서로 안부도 물을 수 없고 누구와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집에 갈 수도 없고 어디 가려면 목적지까지 모두가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와중에서 유일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던 수단이 TV 방송이었습니다.

총리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 수도권에서 발생한다면, TV 밖에 안 남는데 그러면 북한에서나 테러분자들이 이 방송시설을 파괴해 버리면 모든 것이 다 먹통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당시에 들었습니다.

총리님,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오프라인상의 테러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또 그런 대책들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온라인상의 그런 테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오프라인을 합한 복합테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재난안전망이나 또 TV 방송망 이런 것들이 차단이 되거나 또는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불편을 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의 경우에 TV 방송도 사실은 뒤늦게 방송이 됐다고 그래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신속하게 재난 정보들이 방송에도 알려지고, 또 방송에서도 유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재난 상황을 알리고, 또 아까 안전처장관 말씀드

린 것처럼 재난안전문자는 사실 글자가 많지 않습니다. 제한돼 있어서 그것 늘려 봐도 많은 자세한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TV 방송을 통해서 지진 상황에 대해서 내용도 알려 드리지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지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정보도 자세하게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보완책이 필요한데, 그냥 지진만으로도 이런 부분에 통신장애가 생길 수 있는데 더더구나 테러공격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더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특단의 노력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전문가들과 함께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95년도에 고베 대지진이 났을 때 제가 오사카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바로 고베 현장에 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고베에 7.3 진도의 지진이 발생해서 64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중에 제일 한국인도 안타깝게 120여분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왜 지진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이런 큰 피해가 났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연구를 하지는 않았습시다. 이번 지진을 토대로 해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진에 대해서 그동안 특별히, 우리나라나 뭐 일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심도 깊은 연구를 하지 않았습시다.

우리나라도 지진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도 아직 많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이번 지진사태가 나니까 많은 분들이 외국의 지진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들도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들이 부족했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심각한 지진을 몇 차례 겪으면서 많은 보완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들도 많아서 지진 대비 행동요령들도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의 좋은 지진 대응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도 신속한 시간 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석기 의원 고베 지진의 피해가 컸던 이유는 당시 고베는 일본열도에서 지진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그 지역은 지진보험 가입률도 가장 낮았고 또 내진 적용 건물비율도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진이 엄습을 하니까 엄청나게 피해가 커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역시 지진은 어디에 올지 모른다,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유비무환의 태세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한 이상 우리는 이제 더 큰 지진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 전 지역이 이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일본 고베를 지진 안전지대로 오판해서 심각한 피해를 당한 고베 지진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도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지진을 통해서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어떠한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김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이상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입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자 중앙일보 1면 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87%가, 무려 87%가 검찰 권한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관께서는 오늘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은 사법체계의 근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즉 지금처럼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께서는 여당의 입장에서 전에는 없이 강력한 검찰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거기에도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소중히 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장관은 이러한 당시 박근혜 대통령후보의 공약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당시 대선공약을 토대로 검경의 합리적 역할 정립을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삼고 그런 국정과제에 따라서 2013년부터 매년 검경이 2012년에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변화된 수사환경에서의 수사실태를 분석하고 검경 간 협의체를 통해 그 결과를 논의하는 등 어떠한 국가 수사 시스템이 국민편익의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돈 의원 그러나 장관께서도 바로 두 시간 전에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이임하면서 수사권 독립을 주장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 공약은 이 정권 내에서 이행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공약은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 그러한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검찰이지만 국정원 앞에서는 굉장히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정권 초기에 있었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에서도 그랬고 이른바 서울시 직원 간첩 사건에서, 그 사건도 검찰이 국정원 앞에서 담당하지 못함을 저는 보여 줬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유우성 씨 사건을 잘 아시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돈 의원 서울시 직원으로 일하던 유우성이라는 탈북인을 간첩으로 지목해서 대한민국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맞는 이야기이지요?

국정원은 유우성 씨의 여동생을 장기 감금한 끝에 얻어낸 진술을 토대로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진실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국정원은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서 항소심에 제출했고 검사들은 그것도 모르고 법원의 재판에 임했습니다. 중국 현지를 조사한 변호사들의 활약에 힘입어서 그 문서가 가짜임이 밝혀졌고 2심 재판부 역시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작년 10월 달에 최종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은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장관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검사가 국정원이 주는 증거를 그대로 들고 법원에 가서 이런 망신을 당합니까? 한번 솔직한

평가를 내려 보시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당시 그 사건에 제출된 증거서류 중의 일부가 결과적으로 위조되었다는 것으로 밝혀졌고 검사가 그 위조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증거로 제출한 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돈 의원** 중국 공문서를 위조한 국정원 직원이 기소되었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장관도 인정하다시피 이 공문서 위조를 밝혀낸 사람은 대한민국 검사가 아니라 피고인을 변호한 인권변호사였습니다. 이거 너무 창피한 것 아닌가요? 전과 같으면 아마 김영삼 정부나 김대중 정부에서는 장관이 물러났을 것입니다.

유우성 씨 사건이 생기게 된 것은 유 씨의 여동생을 장기 감금하고 허위 진술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런 국정원 직원들을 수사한 적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말씀하신 그 유가려에 대해서는 유가려의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심급 간에도 판단이 달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돈 의원** 여하튼 간에 진술의 임의성이 없이 장기 감금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검찰은 해당 국정원 직원들은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간첩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기소된 유우성 씨는 세 번 무죄 판결을 받고 비로소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무죄 판결을 세 번 받고서 비로소 무죄가 판정된 사람은 유우성 씨만이 아닙니다. 멀쩡한 골뱅이 통조림에 포르말린이 들었다고 해서 기소한 사건,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한 관료를 배임죄로 기소한 사건 등등에서 피고인들은 세 번 무죄 판결 끝에 비로소 무죄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세 번 무죄 판결을 받아야 했다는 데 대해서 정말 절망했다고 그러합니다.

장관은 이런 사건에서 자신이 피고인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무죄를 받았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무죄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일괄해서 어떻게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상돈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검찰은 본 의원이 볼 때는 특히 검찰 스스로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오면 끝까지 항소하고 상고합니다. 그들에

게 무고한 피고인의 인권은 별로 관심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항소권 남용은 매우 심각합니다. 저는 우리도 미국처럼 이중위험 금지의 원칙을 도입해서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검찰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항소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우리 헌법상 형사재판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3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의 군사재판의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단심제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1심에서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상급심에서 실체적 진실이 발견이 되어서 유죄로 결론이 바뀌는 사건들이 현재 상당수 존재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중위험 금지의 원칙은 영미법에 있어서의 특이한 제도인데 독일 일본 등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무죄 판결에 대해서 검사의 상소제도를 불허하는 그런 입법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돈 의원** 물론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 검찰만큼 항소권을 이렇게 남용하는 나라는 선진국에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무고한 정치인도 세 번 무죄 판결을 받고 비로소 무죄가 된 경우를 아실 겁니다. 더 이상 그것은 그걸로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어버이연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대해서 돈을 댔음이 확인됐지요? 문제는 그사이에 청와대의 어떤 행정관이 개입됐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의혹 수준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지금 전경련의 자금 지원 동기·경위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일체의 어떤 고려 없이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돈 의원** 장관은 어버이연합이 언제 생겼는지 아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돈 의원** 노무현 정권 말기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연합이 내건 시위는 방송에서 보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기계적 대칭 보도를 위해서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여론이 상당히 왜곡됐다고 보는 것이지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몇몇 주간지는 국정원 전직 직원의 말을 인용해서 이명박 정권 당시에 국정원이 어버이연합에 돈을 냈고 관리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전직 국정원 직원의 익명의 제보를 복수로서 인용했습니다. 어버이연합이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을 규탄했던 그 많은 시위에 국정원이 사실상 돈을 냈다는 그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 정권 들어서 전경련이 과거에 국정원이 했던 역할, 말하자면 돈줄 역할을 한 것은 아닐까요? 장관은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돈대 줄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런 의혹에 대해서, 또 경위·과정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돈 의원** 어버이연합은 현재 밝혀진 바대로 전경련과 또 이런 기사에 나온 대로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것 외에도 특정 몇몇 대기업으로부터 시위와 관계해서 돈을 받았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어버이연합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설 무렵인 2008년 4월 한남동 삼성특검 사무실 앞에서 치열한 시위를 했습니다. 삼성특검을 반대하는 시위였습니다. 왜 삼성 앞에서 시위를 했을까요? 짐작이 가십니까?

바로 저거지요, 삼성 특검 반대하는 거지요. 그 당시는 이건희 회장이 법정 출두를 앞두고 계실 때입니다. 이 단체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 삼성이 상당한 돈을 어버이연합에 전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삼성이 주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단체가 어떤 수고비조로 요구하지 않았겠는가를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어버이연합은 현 정권 들어서인 2013년 5월 CJ그룹 앞에서 극렬한 구호를 내걸고 시위를 합니다. CJ그룹이 좌편향 영화를 만든다면서 중북기업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익명의 CJ 관계자는 그룹 차원에서 어버이연합에 돈을 건네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이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한 돈이 시위를 중단하는 조건으

로 어버이연합에 전달됐다는 그런 소문이 많이 있고 그런 증언도 있습니다.

장관은 이런 행태가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포함해서 어버이연합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돈 의원** 현 정권뿐 아니라 전 정권, 특히 CJ그룹에 대한 시위에 대해서는 5년이라는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확실하게 수사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돈 의원** 실제로 CJ그룹은 이 시위 이후에 ‘국제시장’ ‘인천상륙작전’ 같은 과거에 CJ그룹이 만들었던 영화와는 다른 성향의 영화를 제작하고 배급했습니다. 어버이연합이 CJ그룹의 경영, 말하자면 문화적인 경영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어버이연합은 단순한 시위 정도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국기를 흔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검찰이 이 문제를 철저히 수사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진정한 법치국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가 어버이연합에 대해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여는 등 보다 확실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일단의 시위를 방송이 과대해서 광고하고 그래서 언론이 그걸 또 증폭시켜서 여론을 오도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절에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총리 나오시겠습니까?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리께서 어제 이른바 미르재단 그리고 K스포츠험비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상당히 제가 느끼나 또는 많은 의원들이 느끼기에 너무 그냥, 뭐라 그럴까요, 판박이식의 천편일률적인 답변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발언이 있습니다.

동료인 이연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경제적 이익들이 기업들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확실하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활동을 할 때는 경제적 이익을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사회 환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검토들을 같이 하겠지요.

○**이상돈 의원** 그리고 동료 윤상직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문체부가 절차에 따라서 승인을 했고 또 전경련이 필요에 의해서 이 재단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총리께서도 전경련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발언하셨고 또 전경련의 이승철 전무가 이 두 재단은 전경련이 만들었다고 확인한 것 맞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까지 상황에서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상돈 의원** 이렇게 되면, 총리의 두 발언을 조합해서 보면 전경련이 이 공익재단을 만드는 데는 경제적 이익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만든 것 아닙니까, 총리의 발언에 의해서 보게 되면?

○**국무총리 황교안** 경제단체가 기본적으로 경제를 지향하는 그런 단체이기는 하지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경제적 이익과 연결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적인 활동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경제적 이익만 바라보고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만 그 과정에서 확보한 재산적 이익을 가지고서 또 사회에 환원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해 나가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제단체가 하는 것은 모두 다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넓은 이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돈 의원** 여하튼 간에 총리께서는 ‘경제적 이익들이 기업들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맞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경제단체는 경제를 기본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상돈 의원** 그리고 솔직히 공익재단을 만들면서 그것 만드는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기대했다는 말은 저는 처음 들어 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아니, 기본적으로 경제단체들은 또 회사들은, 기업들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재단 자체가 공익재단 아닙니까? 그것은 기업들이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얻은 수익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재단

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단체는 경제가 기본적인 동기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이런 사회 기여 활동도 하고 있는 것을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지 단편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돈 의원** 제가 느끼기에는 총리 발언 속에서 답이 상당히 있지 않은가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원께서 말씀하시기에 이 재단에 참여한 두 기업은 바로 그 시점에, 오비이락인지는 모르지만 면세점 면허를 신청한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대기업, 특히 전경련이나 이런 대기업 집단 소속 그런 회사들은 계열사도 많이 있고 하는 사업이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큰 사업의 대부분에 관여가 되어 있고, 그렇게 말한다고 치면 사실은 관련 안 돼 있는 대기업들이 별로 많지 않지요. 그러니까 관련돼 있다 그래서 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볼 일은 아니고 과연 사업 관리가 적정하게 잘 돼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잘 판단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돈 의원** 그리고 조운선 장관은 발언에서 문체부에서는, 본인께서는 그다지 아는 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이 재단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변을 하셨고 ‘스태프를 통해서 문체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총리한테 보고를 한 스태프가 정확히 누구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총리실에는 양 차장이 있습니다. 양 차장이 있고 그 차장들이 정부 각 부처와 협력하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담당 국장들이 다 있고 담당하는 과장들이 있어서 현안들이 있을 때는…… 모든 부처의 일들을 다 케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안이라든지 부처 갈등 문제라든지 또 국민들의 관심이 큰 쟁점 같으면 부처들과 소통하고 연락하면서 필요한 지원과 대책들을 같이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돈 의원** 들어가시지요.

우리나라는 지금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하나의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를 현재 맞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법치주의가 잘 서기 위해서는 저는 무엇보다도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됩니다. 검찰 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제는 좀 분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방 이후에 경찰을 믿지 못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이상돈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주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훈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소병훈입니다.

공자께서 세상을 둘다가 60이 다 돼서 고향에 돌아갑니다. 노나라 근처 태산에 올랐는데 한 말씀 하셨지요. ‘등태산하니 소천하하다’ 태산에 올랐더니 세상이 작아 보이는구나,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60이 넘어서, 60에 등초선 했습니다. 초선의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 아까 식사 때문에, 밥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문득 광화문에 계신 세월호 유가족들을 생각했습니다. 한 50일째 단식 중인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등태산소천하를 생각하면서 ‘아, 내가 아직도 우물 안 개구리구나’……

(○정유섭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밥 먹지 말고 질의하세요. 밥 먹고 질의하지 마세요.)

정유섭 의원님이신가요?

처음 뵙네.

어디세요, 지역구가?

올해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97주년이 되는 때입니다.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을 넘어 6·10 항쟁으로 민주화 체제가 형성되기 시작된 지 29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피와 땀으로 이룩한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단지 5년의 임기만을 위임받았을 뿐인 현 정부는 독립과 민주화 그리고 국가 발전에 헌신했던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심을 짓밟으며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

화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광복 후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던 통한의 역사는 오늘날 대한민국 임시정부마저 부정하는 세력들을 활개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반민족적 행위를 은폐시키기 위한 역사관이 담긴 건국절 주장은 친일파들에게 어찌면 뜨거운 사막 위에 오아시스와도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노동권리지수는 이란과 캄보디아·파키스탄 등과 함께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는 끊임없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사무치는 슬픔과 역사적 진실을 외면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능력도 없으면서 수년 연속 안전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비교하는 주요한 척도 중 하나인 IMD의 2016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는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태국보다 뒤쳐진 29위로 추락했습니다.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후보가 제시했던 경제민주화를 포함한 수많은 공약들은 정말 그대로만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을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바꿀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게도 환영받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합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우리 국회가 여당과 야당이 모두 합심하여 대통령의 공약 이행상황을 분석하고 중점추진 공약을 점검해서 남은 임기 동안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가칭 ‘공약이행촉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웁치지 않고 여기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좀 듣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부장관님도 듣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처장관님께도 부탁드리고, 교육부장관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시간이 되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제동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인 노동자는 150만, 군인·군속 30만 그리고 강제동원의 마지막 유형은 최악의 전쟁범죄인 여성동원인데 여성 노동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로의 강제동원에 따른 성의 착취입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국



무장관일 때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냈습니다, '성적 노예'. 저희는 점잖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라고 부르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노예입니다, 성적 노예.

지난 12월 28일 12·28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상식으로 합의라 함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두 사람의 의견이 합치되는 선에서 서로 동의하는 걸 합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28 합의에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는 있었지만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없었습니다.

마침 제 지역구가 경기도 광주여서 나눔의 집에 자주 다니는 편인데 그 할머니들이 가장 섭섭했던 건 자신들의 얘기를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자신들에게 뭔가 물었다면 할 얘기가 있었을 텐데 전혀 없이 나라에서 덜컥 합의라는 걸 해 놓고 그리고 그걸 따라 주기를 바란다……

그분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정부에서 주는 만 원짜리 상품권이나 일본에서 출연금도 아닌 거출금으로 규정한 10억 엔이나 이런 정도의 돈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와 그에 따른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원하지도 않습니다.

만날 때마다 강일출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똑 같습니다.

(○이철우 의원 의석에서 — 그런 것은 대표 발의 한번 해 주시지요.)

고맙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이철우 의원 의석에서 — 여성가족부장관이 새겨들어 놓으세요.)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기록, 난중일기, 새마을운동 기록물, 이런 것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입니다.

인류 모두의 소유물인 세계기록유산이 미래 세대에 전수될 수 있도록 이를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총 348건의 기록유산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세계기록유산에는 훈민정음처럼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기록이 있는 반면 5·18 민주화운동 기록처럼 잊지 말아야 할 아픈 사연들도 있습니다.

문체부장관께서는 지난 여성가족부장관이실 때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을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으로 신청할 계

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저는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가부는 2014년부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해 왔는데 올해에는 책정된 예산조차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7년 예산에는 기념사업 예산을 모두 빼 버렸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책정된 예산만이라도 올해 써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총리께 잠깐 한 말씀 묻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 나오기 전에 뉴스를 보다가 이석수 특감 사표 수리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총리님도 들으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저도 들었습니다.

○소병훈 의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수리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것이 청와대의 방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갑자기 수리를 하셨습니다.

혹시 왜 그 방침대로 앓고 수리를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 사유까지는, 보도된 내용은 봤는데 그 사유는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에서도 '왜 사표 수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리고 이제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수사가 시작됐으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병훈 의원 우병우 수석도 사표 수리하려고…… 아니, 사직시키라고 여러 차례 국회에서도 얘기했는데 우병우 수석은 사직시키지 않고 이석수 특감……

(웃음소리)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많은 요구도 있었고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판단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병훈 의원 제가 알기로는 법사위 기관증인으로 출두하기로 어제 아마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석수 특감께서.

그래서 제 좁은 생각이지만 대기업 기부금 출연을 내사해 왔다고,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보

도가 됐고 내사해 왔다는 그분이 국회 증언대에서 쓰는 것이 좀 꺼림칙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 중에 총리님 개인적인 생각을 듣고 싶은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그 기록유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등재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민간단체에서 등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훈 의원 아니, 예산까지 세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도 정부에서……

○국무총리 황교안 초기단계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에 초기단계에 여가부에서 지원을 했는데 이게 민간단체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 지금 단계는 이제 기본적으로 민간단체의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훈 의원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어느 게 좋을지 총리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물었습니다. 등재되는 게 좋습니까, 등재되지 않는 게 좋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 개인적인 얘기보다는……

○소병훈 의원 예, 개인적인 생각.

○국무총리 황교안 객관적인 사실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병훈 의원 개인적인 그런 것을 듣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반성해야 할 노동의 양극화 문제, 그리고 건국절 논란, 지진대책,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망각한 안전불감증 등의 난제들을 저도 묻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처음 올라와서 시간조절을 못 해 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 선왕이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주나라 문왕은 사방 70리에 이르는 동산을 가졌는데 백성들이 오히려 이를 작다고 하더라. 내 동산은 단지 40리밖에 되지 않는데도 백성들이 크다고 여긴다. 이유가 무엇인가?’, 백성들이 불평만 한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한 것입니

다. 이에 맹자가 대답합니다. ‘주나라 문왕의 동산에는 백성들이 마음대로 들어와 나무도 베어내고 토끼나 꿩도 잡아갈 수 있습니다. 동산을 백성들과 함께 나눴으니 백성들이 작다고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맹자가 이어서 말합니다. ‘신이 제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들으니 나라에 큰 금기사항이 있는데 관문 안 사방 40리 되는 동산에서는 사슴을 죽이는 자를 살인죄와 동급으로 다스린다고 합니다. 이는 나라 안에 40리짜리 함정을 파놓고 백성들을 기다리는 것과 다름없으니 백성들이 크다고 여기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여민동락(與民同樂), 백성들이 왕과 더불어 즐거움을 나누는 것을 정치의 이상으로 삼았던 맹자의 가르침입니다. 2500년 전의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6년, 우리 국민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꽃다운 청춘을 일제에 유린당한 아픔, 생때같은 자식을 차디찬 바닷속에 담아두고 있는 슬픔, 하나뿐인 인생을 저임금과 빈곤에 저당잡힌 두려움, 그 무엇 하나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은 도대체 누구 때문입니까? 불순세력이라 몰아붙이며 40리짜리 함정 파기에 몰두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2016년 대한민국에서 여민동락의 세상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진정 저뿐입니까?

고맙습니다.

(박수)

○의장 정세균 박수는 꼭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 마지막입니다.

경기 용인갑 출신의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용인갑 출신 이우현 국회의원입니다.

(장내 소란)

(「조용히 좀 하세요. 시끄럽네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세균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의원** 시끄러워서 못 해요.

(「자꾸 늦춰 봐야 소용없어. 빨리 해」 하는 의원 있음)

반말 하지 마세요. 왜 반말 해요?

(「빨리 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밤늦게까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법적인 하자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특별한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은 있었지만 법적인 문제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거둬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실이 전제가 되고 그 사실에 따른 증거들이 뒷받침되고 그 증거들이 과연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보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사실이 확정된 뒤에 그것을 어떤 법에 해당된다고 볼 것인가 해당이 안 된다고 볼 것인가 이런 프로세스들이 필요할 텐데 그저 지금 단계에서는 의혹만 제기돼 있는 단계로 보여 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의혹에 비춰 보면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우현 의원** 저는 체육인 출신입니다.

우리 체육인들이 1명의 선수를 배출하기 위해서 1000여 명의 희생자가 따릅니다. 기업인들이 그동안 많은 기금 출연했습니다. 세월호 때도 많은 기금 출연했고 또 천안함 사태 때도 많은 기금 출연했고 또 연말만 되면 많은 기금 출연한 것입니다.

기업인들이 체육인들과 문화예술인들 때문에 기업 광고해서 돈 많이 벌어서 문화·복지·체육 시설 만드는데 잘못됐습니까, 잘못 안 됐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기업은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또 사회로 다시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그런 수익활동을 하는 데에는 그 기업의 활동뿐만 아니고 관련되는 우리 사회 제반 영역들이 함께 힘을 보태기 때문에 경제 수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기업들이 그동안 사회에 환원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분야에 관한 사회 환원 활동을 했지만 그중에 특별히 스포츠나 이런 문화예술 부분에 관

해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의혹이 있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좀 정리를 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 체육계 비리에 대해서 많은 수사를 한 것을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의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실제로 입건되고 처벌이 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들이 많은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의혹이 제기된 이런 것하고 실제로 그런 잘못된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 부분은 현실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특별히 이 영역에서 활동하고 또 국가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 체육인들, 문화인들에게 꼭 우리가 챙겨 드려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우현 의원** 문화·예술·체육인에게 우리 기업인들이 전경련에서 만든 겁니다. 기업인들이 그동안 체육인들과 문화인들, 예술인들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출연금 내서 더 어려운, 복지재단 만들고 많은 국민들에게 체육시설 만드는 게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듯이 기업은 이 사회의 여러 영역의 조력에 의해서 기업 활동을 하고 또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또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국에도 나가 보면 거기에 많은 우리 교민들이 있는데 특별히 경제단체, 한인회를 중심으로는 우리 한국의 유명한 예술가 그다음에 체육인, 올림픽 나가서 상 받은 사람, 김연아, 이런 사람들 좀 보내 달라, 보내 주면 이 지역에서는 우리 한국 체육인·문화인들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업을 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도움을 주고받고……

그런 도움이 부정적인 또는 불합리한, 불법적인 이런 도움이 되면 안 되겠지요. 그것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인데, 합리적이고 그리고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조장하고 격려해야 될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우현 의원** 지금 대통령께서 이것과 관련해

서 퇴임 후에 이 자리에 가서 운동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데 가서 일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국가를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특정 재단 또 어떤 특정 단체 그런 데서 활동을 하거나 이러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우현 의원** 역대 대통령들 가족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금까지 가족들이 금전적인 거나 청탁이나 이런 데 개입된 사실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히려 가족들과의 교류나 접촉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현 의원** 대통령 되신 후에 조카나 동생들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청와대 안에서?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직접 여쭙 보지는 않았습시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오가는 가족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외에도 그렇게 가족들과 만나서 어떤 사적인 자리를 갖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현 의원** 누구보다 깨끗한 정부, 깨끗한 사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는 대통령한테 미르재단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이런 전반적인 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런 것은 오히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우현 의원** 역대 대통령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일해재단을 만들었고 김대중 대통령은 아태재단을 만들어서 후원금을 받았고 대통령마다 다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하는 의원 있음)

(「대북 송금도 하고 다 했잖아!」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조용하세요! 여기 와 질문하세요! 사실을 하는데 왜 떠들어요?

나가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알고 얘기하라고!」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세균** 자, 의원님 여러분, 냉정을 되찾아 주시고 우리 질문하시는 이우현 의원님께서서는 질문을 계속해 주시고 의원님들은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의원** 대통령의 그런 것을 남겼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미르재단하고 또 K스포츠재단에 개입하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아까도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3년 7개월 동안, 그 이전에는 물론 전혀 몰랐던 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제가 겪고 또 느낀 바로는 그런 어떤 특정 재단에 연루가 되고 관여해서, 더더구나 그것으로 은퇴 이후를 대비한다든지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분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우현 의원** 총리께서 법무부장관 시절에 이석기 사건 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우현 의원** 지금 이석기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처음부터 과정을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국무총리 황교안** 본래 통진당……

○**이우현 의원** 웃지 마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통진당 아닙니까?

○**이우현 의원** 예.

○**국무총리 황교안** 그게 민노당으로부터 시작돼서 오래 진행되어 온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민노당의 당의 강령이나 이런 것들을, 또 민노당 소속 의원들의 활동들을 제가 검사로 근무하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보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하고 또 북한에서 얘기하는 대로 활동하고 행동하고 그런 것들이 사건이 되어 가지고 처벌이 되고 입건되고 구속돼서 장기 복역을 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이 정당의 위법성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중에 정당의 당명을 바꿨습니다. 통진당으로 바꿨는데 일부 과거에, 종전에 많이 지적이 되던 아주 극단적인 표현들은 정강에서 정리가 된 것으로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체는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크게

실체가 변화된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소위 국가보안법 위반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 당에 연루돼서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인데 마침 이석기 사건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석기 사건이 생기면서…… 그동안 통진당이, 공안을 오래 했던 사람들은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에 반하는 반헌법 정당이다, 위헌 정당이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던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 보면 위헌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활동이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에 반하거나 아니면 목적이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에 반하는 그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만 반해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여건상으로는 그렇게 되면 또 자꾸 뭘 만들었니, 조작했니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공안 당국에서는 신중하게 신중하게 이 대처를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활동까지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관심 사항이었는데 이석기 사건을 조사하면서, 수사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명백한 활동들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석기 등 통진당 관계자들을 기소도 하고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초기에 우리가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헌재에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문제가, 소위 제소가 되면서 법무부에 이 대응을 위한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 또 이 사건의 공판에 관여했던 검사들 이런 검사들의 의견을 쭉 들어서 그동안의 자료를 쭉 모았습니다.

자료를 모아서, 소위 통진당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입증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모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량들이 모여졌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17만 쪽에 해당하는 자료들이 그동안 확보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단발 사건사건별로 수사하고 자료를 모아서 소위 공소유지를 위한 노력을 해 왔던 것인데 이런 자료들이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과정에서 다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다 모여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우리 TF팀에서 스테디하고, 또 그 과정에서도 이제……

(「짧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검찰이나 TF팀이 스스로만 생각하고 하다 보면 넓은 의미의 어떤 판단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보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폭넓게 의견을 들으면서 토론을 했는데 그 결과는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자료를 모으면 모을수록 ‘이 정당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허용해서는 안 되는 정당이다’ 그런 판단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자료들이 오히려 더 모여졌고 이런 것을 헌재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번의……

(「답변 시간 제한합니다. 답변 시간 제한!」

하는 의원 있음)

여러 번의 심리를……

(「답변 짧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 조용!」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우현 의원 답변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여러 번의 심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뭐 하는 것이야, 이게」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 필리버스터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사실은 오래된 경험이 필요했고……

(「답변 짧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헌법재판소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제가 헌재에 가서……

(「내일 새벽까지 해!」 하는 의원 있음)

왜 우리가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했는가 이유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심리를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 결심 할 때도 제가 다시 또 가서 그동안의 심리 결과 제가 판단한 것들을 헌재에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모아져 가지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목적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위헌 정당이다, 그리고 활동을 보더라도 우리 헌법

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관이 모두 아홉 분이 계십니다. 그중의 여덟 분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논란 없이 정리가 됐고 지금 위헌 정당 판결이 난 것입니다. 확정된 것입니다.

(「내일까지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우현 의원 그런데 수원구치소에 지금 있는데 그 주변에 와서 데모하는데, ‘이석기 석방해라’ 그러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한데 왜 그런 것 방치하고 계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위헌 정당 여부와 그리고 개개의 행위가 국가보안법인지 여부 이것은 또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석기 등이 소속돼 있던 통진당은 위헌 정당으로 판정이 돼서 해산이 됐습니다마는 이석기 씨는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형법상의 내란음모죄에 의해서 기소가 되고 유죄 확정이 돼서 지금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모의를 하던 이런 분들도 내란 모의로 같이 복역돼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명백하게 현재에서 위헌 정당이라고 판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일반 법원에서 형법 내란음모죄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내서 내 기억으로는 맨 처음에 12년 그다음에 9년으로 아마 한 것 같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9년으로 확정돼서 지금 복역 중에 있습니다.

명백하게 우리 헌법질서에 반하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지금 석방을 요구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무슨 이유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과정들이 정말 국민들이 모두 다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우리 관계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살펴서 의원님 걱정처럼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인 부분이 생기면 그것은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우현 의원 북한에서 핵실험, 미사일실험 많이 했지요? 지금 김대중·노무현·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에 간첩을 한 명이라도 잡았습니까? 공안검사 하셔서 잘 아실 텐데……

○국무총리 황교안 뭐 전혀 안 잡은 것은 아니고……

○이우현 의원 잡은 사람 좀 다 밝혀 보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일부 기소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소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게 기소가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우리 사회에 범사회적인 소위 대공의식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으로서는 강정구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또 혐의가 인정된다면 신병을 구속할 거냐, 불구속할 거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수사팀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이 된다. 그리고 신병은 그동안의 사례로 봐서는 구속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주장을 냈었는데 그것이 잘 처리가 되지 않았습시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구속의견을 내고,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법무부에서는 ‘이건 구속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우리 검찰 사상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이 발동됐습시다.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검찰총장에게 구체적으로 수사지휘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인데 제가 알기로는 역사가 없었습니다. 처음 그런 것이 내려져서 불구속으로 기소가 됐습시다. 물론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을 해서 다 유죄로, 제 기억으로는 다 유죄가 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된 일도 있지만 이런 것은 정말 아주 희소한 예이고 정말 어려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처리가 된 것이고, 전반적으로는 소위 종북 세력이랄까 간첩·준간첩들에 대한 조치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고, 지금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을 이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우현 의원 국민이 바라고 19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서비스산업발전법안 잘 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잘은 몰라도 큰 골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우현 의원 그것이 통과가 되면 얼마나, 일자리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총리께서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관계부처 장관에게, 노동부장관이나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도 어렵지만 세계도 다 어렵습니다. 그나마도 조금 길이 열리고 있고 여전히 수요가 있는 부분이 서비스산업 부분입니다. 이 서비스산업 부분은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고 그리고 민생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이런 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고 거창한 이런 사업은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체감도가 높은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수출과 여러 가지 중공업들에 많이 치중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려울 때 돌파구는 서비스산업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서비스산업을 촉진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발의했고, 그것이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빨리 통과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국회에서 처리가 돼서 경제가 어려울 때, 민생이 힘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우현 의원 어제 존경하는 함진규 의원님께서 수도권 규제 완화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이우현 의원 수도권 규제, 왜 지금 현실화 못합니까? 대한민국이 두 시간만 타면 전국을 다 가는데 수도권·비수도권이 어디 있고 또 지금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수도권에 와 다 사는데 이게 수도권·비수도권 30년 이상 이렇게 묶어서 안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과감한 그런 정책 대통령이나 각 부처에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수도권 규제정비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오랫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좁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별로 우리가 어려우니까 이쪽을 먼저 풀어라, 이쪽은 보전해야 되겠다, 이런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소위 중앙과 지방이 균형 있게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좁은 땅에서 전국을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막고 개발을 제한한다면 그러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뭔가? 이런 측면에서 소위 국가경쟁력 이야기가 논의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국토의 발전은 균형발전과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국가경쟁력 강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의 규제를 풀면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고 입지가 수월하고, 입지도 그렇지만 사람을 구하기가 인력을 구하기가 아무래도 용이하니까 그리고 우수 인력들이 많이 모여들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측면에서 수도권 발전되면 국가경쟁력 올려 가고 또 경제를 진작하는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마는 국가를 키우는 문제는 수도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과 함께 해야 결국 우리가 지속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수도권 규제 그냥 묶고 갈 것이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봐서 불합리하거나 장기적으로 규제가 묶여 있지만 앞으로 크게 짧은 시간 안에 개발되지 않을, 개발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는 이런 지역에 관해서는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규제를 풀고 앞으로 풀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서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한쪽을 보면 꼭 필요한 것이고 지금 바로 해 달라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 반면 또 다른 쪽에 정반대의 주장도 있기 때문에 그 조화가 쉽지 않아서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균형발전 또 경쟁력 강화 그러면서도 지역에 맞는 지역 맞춤형 규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이우현 의원 세종시로 공직자들도 다 내려갔고요, 공기업 다 내려갔어요. 지금 수도권에 와 사시는 분들은…… 수도권, 경기도 용인, 서울, 인천 토박이들은요 10%도 안 돼요. 이것이 무슨 수도권·비수도권입니까?

이제 과감히 수도권 규제 완화하는 데 총리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은 규제 하나라도 수도권 규제를 풀 때는 그러니까 많은 반발들, 반대 여론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좀 통합하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 부득이하다 그런 측면에서 오랫동안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차근차근 합리적인 규제개혁들을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우현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부장관 나오십시오.

○**환경부장관 조경규** 환경부장관입니다.

○**이우현 의원** 장관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이우현 의원** 그동안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환경정책하고 장관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환경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또 왜 웃으세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국민들이 걱정돼서 물어보는데? 지루하면 나가세요.

답변하십시오.

답변하지 마세요. 떠들지 않을 때까지 답변하지 마세요. 떠들면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하십시오.

○**환경부장관 조경규**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환경에 대한 국민 관심과 국민들의 기대가 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막중한 중책을 맡게 되어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다 아시다시피 지금 가습기살균제 문제, 미세먼지 그리고 4대강 물 문제, 녹조 문제 또 폭스바겐 사태 등등 이번 상반기에 또 지난여름에 많은 환경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또 의원님 여러분들한테도 많은 질책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취임한 지 약 2주밖에 안 됐습니다. 마는 열심히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현안을 가장 슬기롭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것이며 지난 2013년부터 새롭게 환경 분야에 많은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라든지 오염부담금제도 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등등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 박근혜정부에서 시도한 정책들이 이제, 어떤 정책들은 금년 1월부터 시작이 됐고 어떤 정책들은 17년 1월부터 시작이 되고 어떤 정책들은 18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를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체감하실 수 있을 때까지 발전시키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우현 의원** 지금 팔당수계의 9개 시·군이 규제받고 있지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이우현 의원** 거기서 지금 물부담금이나 토지

매입한 게 1조 400억이 넘지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이우현 의원** 그 토지 활용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조경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수계기금을 통해서 물이용부담금을 t당 170원씩 받아 가지고 한강수계에서 연간 약 4500억 정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농지라든지 음식점 등 수질오염 유발 토지들이나 건축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물 사용자가 낸 그런 부담금을 활용해 가지고 매수를 해서 상수원 수질을 조금 더 잘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5년에도 792억 원의 토지매수가 있었고요, 지금까지 약 13.2km<sup>2</sup> 정도를 해 가지고……

○**이우현 의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13.2km<sup>2</sup>면?

○**환경부장관 조경규**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여의도 면적의 약 4.2배 정도 됩니다.

○**이우현 의원** 몇 배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4.2배입니다.

그래서 한강수계 토지를 매수해서 한강 수질보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우현 의원** 지금 그 땅에 나무만 심었는데 나무가 너무 커서 아파트 옆이 아주 위험해요.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부 책임질 수 있어요, 거기서 살인사건 나면? 환경부 책임질 수 있어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원래 그 땅은 저희가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은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또 지정된 것을 오염원 차단을 위해서 토지를 매수해서 주로 수변생태벨트로 조성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태벨트 조성 자체만 돼 있고 그게 또 일부 지역은 관리도 부실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체육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러면 또 다른 오염시설로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녹지, 생태하천 등 수질 개선과 관련된 사업 위주로 하면서 지금 말씀하



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현 의원** 9개 시·군에서 규제해서 돈 받아다가 땅 샀으면 그 시에다 돌려줘야 되고 시민들이 생활체육시설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세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지금 말씀하신 관련 지자체 일고여덟 군데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요구를 많이 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 수변구역 매수 토지의 목적 자체가 수변에 생태벨트를 조성해서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생활체육시설이나 주차장 이런 걸 하면 혹시 원래 했던 그 목적을 좀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에 했던 녹지나 생태하천이나 수질개선과 관련된 사업 그것을 충분히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없는지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현 의원** 다음에 다시 말씀할게요.

들어가십시오.

행자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3.0 주요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한데 그 성과에 대해서 지금 추진상황하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감사합니다.

정부3.0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아주 역점을 두고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마는 많은 측면에서 아직도 국민들이 체감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가지고 감사드리고, 기본적으로 정부3.0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우현 의원** 길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국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알겠습니다.

정부3.0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 정보나 데이터를 개방해서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또 특히 부처 간에 있는 각종 칸막이나 이런 것을 제거함으로써, 소통·협력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정부3.0의 핵심 내용이고 어떤 면에서는 디지털 시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3.0은 기본적으로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이라는 네 가지 핵심가치를 토대

로 서비스 정부,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이 3개를 추진전략으로 저희가 2013년부터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게 되면, 먼저 서비스 정부 차원에서 보게 되면 국민 맞춤형, 국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일단은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출생신고시에 양육수당이라든가 출산장려금이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수수료 감면, 각종 공과금 감면 등 여러 가지 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각 자치단체별로 약 10개에서 30가지가 되는데 그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종래에는 온라인에서…… 각 기관을 다 방문해서 이걸 처리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부터 행복출산서비스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주민센터에 가서 또는 때에 따라서는 앞으로 온라인으로 신고만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모든 정부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함께 통합해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함께 또한 만일 사망할 경우에는 사망자가 가지고 있는 각종 금융이라든가 토지, 세금, 채무 이와 같은 모든 재산관계를 한꺼번에 조회해 가지고 해 주는 안심속서비스를 이미 저희가 지난해부터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생애주기별 서비스에 대해서 최근에 아주 많은 국민들이 이용도가 폭증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이와 함께 특히 요즘 말하면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민과 관이 함께 가지고 있는 각종 일자리 정보 사이트를 통합했습니다. 이것을 서로 연계·통합해 가지고 한 200여 개의 사이트를 워크넷이라는 하나의 사이트로 통합해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함께 제공함으로써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그 외에도 아마도 가장 많은 혜택이,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약 1600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께서 이것을 활용하고 있음에 따라서 많은 서비스를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 개방을 저희가 적극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가 중점 데이터가, 저희가 현재까지 36대 분야를 일단 선정해서 그중에서도 고가치 대용량 데이터를 조기 개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상반기까지 총 21대 분야를 이미 개방해서 공공 데이터를 활용

한 민간 부분의 창업이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창업과 함께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성과를 저희가 거두고 있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민간, 정부의 데이터를 국민으로부터 수요를 받아 가지고 또는 기업도 수요를 받아 가지고 추가 개방하는 문제도 저희가 지금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OECD에서는 세계적으로 볼 때, 데이터 개방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한국이 세계 1위로 평가받는 그와 같은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 외에도 저희들이 보니까, 데이터를 개방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반 민간 부분에서는 개방된 데이터들이 품질이 좀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개방된 데이터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저희가 지금 경주하고 있고, 특히 앞으로는 개방할 때는 오픈 플랫폼에서의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여러 가지 법령을 위반한 어린이집 명단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에 대해서도 사전 정보를 공표하는 제도도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성과를 보니까 이에 따라서 데이터 이용의 활성화 정도가 2013년 대비해서 약 100배가 넘는 그런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주로 종래에는 각 부처별로 칸막이가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정부 운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기본적으로 협업 중심의 정부 운영을 통해서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저희가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고용복지 플러스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장소에서 고용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시너지를 내는 그런 내용이 되었고, 지금 현재 처음에 2014년에 10개소를 개소했는데 내년까지, 2017년까지 100개소를 목표로 현재 저희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그 외에도 종래 있었던

화학재난에 대해서 저희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저희 부랑해 가지고 이와 같은 센터를, 협업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과학적 행정을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렇게 좋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해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조용히!」 하는 의원 있음)

(「너무해요!」 하는 의원 있음)

○**이우현 의원** 계속하세요.

그런데 조용할 때까지 안 하겠습니까, 조용할 때까지.

(「대정부질문입니다. 개인의 호기심을 묻는 곳이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 초선 의원님들 많이 오셨는데 공부 좀 하세요.

○**의장 정세균** 질문하시는 의원은 질문을 계속해 주세요.

○**이우현 의원** 그런데 국민들이 체감을 잘 못 느껴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희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 점이 되겠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장관도!」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 하는 의원 있음)

지금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마도 상당한 체감도에 대해서는 저희도 미흡한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금년 초에 이제 정부3.0 생활화 추진전략을 마련해 가지고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실제로 좋은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과 시책들을 잘 이해하고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사업이 지난 6월 달에,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 있는 코엑스에서 정부3.0 체험마당을 저희가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약 7만 명이 넘는 많은 우리 국민들이 오서 가지고 실제로 전시라든가 참여하면서 정부3.0의 실제 내용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고 갔습니다.

(「의장님, 국회를 우롱하는 국무위원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장관님 천천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국회를 완전히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의장님, 지적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와 함께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정부3.0 토론회를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하고 있고, 제가 이틀 전에는 또 제주에 가 가지고 정부3.0 현장토론회를 하면서 그쪽에 있는 여러 가지 모범사례, 아주 좋은 사례들을 같이 토의하고 그것을 많은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이와 같은 체험마당이라든가 토론회 외에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이 정부3.0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3.0 서비스 알리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난 8월 달에 앱마켓에 출시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서면으로!」 하는 의원 있음)

(「밤새도록 해!」 하는 의원 있음)

출시했고, 앞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바로 모바일에서 정부의 많은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우현 의원** 앞으로 3.0 발전 방향에 대해서 우리 박근혜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석** 제가 모두 말씀드렸다시피 3.0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자정부의 발전 기반하고, 특히 민간 부문에 있는 ICT 인프라 이것이 기반이 돼 가지고 저희가 정부3.0을 추진하고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도 각종, 저희들이 빅 데이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최근에 발전된 여러 가지 ICT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것을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위기가정이라든가 또 때에 따라서는 취약가정의 아이,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아동 침해의 우려에 대해서도 미리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부 혁신모델인 정부3.0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이와 같은 정부3.0의 성과를 많은 국가들하고 함께 공유하기 위한 글로벌 확산 전략도 저희가 함께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뭔가 하면 저희가 항상 일하다 보면 ICT 인프라가 발전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자정부라든가 이것이 성과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또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는, 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정부3.0의 성과를 제대로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디바이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어려운 분들은 정부3.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갭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저희가 계속 보완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우현 의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9대 때 우리 야당 의원님들 필리버스터 하면서 일주일 동안 해서, 10시간 하신 분도 있어요, 야당 의원님들.

(「의원이 하는 거지 장관이 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국민들이 듣고 있으니까, 제 발언 시간이니까 조용해 주세요.

노동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이우현 의원** 지금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가 안 되어서 우리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되면 어떤 부분이 경제활성화가 되고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우리나라 경제가 과거의 고도성장기에는 성장 자체만으로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중성장 기조에 들어와 있고 따라서 우리 고용구조가 기업들이 직접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노동시장의 경직성 또 불공정성·불확실성 때문에 직접 채용을 하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주거나 비정규직을 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IMF 직전인 1997년만 해도 한국은행에서 동일한 직종의 일자리 중 평균임금 이상이 되는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보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계층이 여럿 있습니다라는 학력 기준으로 전문대 이상을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수요로 봤을 때 97년만 해도 양질의 일자리 수가 30만 개 정도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 이때 와서는 양질의 일자리 수와 현재 대한민국의 전문대졸 이상 나온 현재 일자리 있거나 졸업해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수요 측면에서 보면 양질의 일자리 수가 한 400만 개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우리 성장률을 옛날처럼 높

일 수가 없다면 1% 성장했을 때 늘어날 수 있는 경제일자리 창출력을 높이는 게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동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법과 제도, 관행이 불확실하고 불공정하고 지나치게 연공서열적으로 되어 있는 임금체계 자체를 바꾸어 줌으로써 탄력도를 높일 수 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미래에 맞게끔 우리가 운용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과거에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경직적인 요소들 또 탄력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고 또 격차를 줄이는 쪽으로 가자고 해서 19대 때 저희들이 노사정 대타협을 토대로 5법을 국회에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제출한 바 있고 다시 20대에 들어서 4법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장에서는 임금을 둘러싸고,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들도 미래산업 저성장 기조랄지 4차 산업에 따른 노동시장의 혼란은 저희하고 마찬가지로 안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자는 게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째는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을 개정하자는 데 취지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자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을 노사정 합의대로 4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줄이면…… 또 일을 하면서도 근로시간에 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들이 있습니다. 이 특례업종에 종사하는 분들도 근로시간 적용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근로시간이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 제출된 법안대로 개정이 된다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15만 개 정도 될 수 있고 또 적용받지 않는 업종에 적용되기 때문에 약 286만 명 정도가 근로시간이 단축되어서 저녁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미래 사회에는 노동의 이동이 잦기 때문에 사회 안전장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위 실업급여를 높이고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늘리는 법 개정도 들어 있고.

또한 이제까지는 우리가 일하다가 다쳤을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국가가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의 경우는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다 다치면 그것은 사업장 내 시설로 봐서 업무상 재해로 봐주는데 중소기업은 그러지 못해서 모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로 인정하는 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장년들의 경우에는 대개 50세 전후에서 자기 원래의 일자리에서 퇴직을 합니다.

(「국회법을 지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실제 일자리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연령은 남성은 73세, 여성은 71세 정도에서 평균 잡아서 일자리를 은퇴합니다. 이 연령은 초고령사회라 할 수 있는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가 훨씬 늦습니다.

그래서 50세 정도에 은퇴를 해서 다른 일자리를 찾을 때 약 29.6% 정도만 상용직 일자리를 갖고 있고 44%는 임시일용직 그다음에 24%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아 가는 과정에서 원래 소득의 3분의 1 수준으로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에게 좀 안정된 일자리를 갖게 해 주는 것은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파견제도를 좀 확산해 주는 게 필요하다……

(「장관님 잘 알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파견제도를 55세 이상 또 전문직은 저희들이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우상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장관에 의한 고의적인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이렇게……)

(「장관은 국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이우현 의원 장관, 답변 중단해 주세요.

뭐예요, 이게! 아니, 왜 남 질의하는 데 와서 그래요!

○의장 정세균 이우현 의원 어서 질문하세요.

○이우현 의원 왜 예의가 없어?

○의장 정세균 어서 질문하세요.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이렇게 질의를 방해받고 있으면 장내 정리를 해 주셔야지요. 왜 야유를 하는데 한마디 제지도 안 하고 계십니까?)

정 대표가 하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우현 의원** 듣기 싫은 의원님들은 가세요!  
왜 떠들어요, 내 질문에?

○**의장 정세균** 어서 질문하세요.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공정하게  
장내 정리를 하셔야지, 왜 제지를 안 하십  
니까?)

○**이우현 의원** 피곤하면 가세요! 저녁 잘 먹고,  
우리는 김밥 먹고……

(「질의나 하시라고!」 하는 의원 있음)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정세균** 자, 의원님 여러분, 질서를 지켜  
주세요.

○**이우현 의원** 국민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궁금  
해하고 있어요, 알고 싶어 하고요.

○**의장 정세균** 질문을 잘 할 수 있도록 의원님  
들께서는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 계속 질문하세요.

○**이우현 의원** 말씀하세요.

(「고의적인 의사 방해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기간제법의 경우는 원  
래 입법을 할 때 기간제로 2년을 쓰게 되면 2년  
을 쓴 후에 가급적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입법  
을 2년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기간제 2년 이후에 정  
규직 전환 비율이 20% 미만입니다. 그러면서  
도 특히 35세에서 55세 중년층의 경우에는 그 정  
규직 전환 비율이 9%대입니다. 그리고 그분들한  
테 물어보면 기간 제한을 늘려 주거나 철폐해 달  
라고 80%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간 제한을 늘리고, 기간 제한을 늘린 후에도  
만약에 기업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아니하면  
이직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해서 격차는 해소  
하고 고용안정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간제법  
개정안까지 제출했던 겁니다.

○**이우현 의원** 지금 민주노총에 우리 공기업에  
관련된 파업신고된 것 몇 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지금 이번에 양 노총  
의 금융·공공 약 6만 명 정도 앞으로 파업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우현 의원** 그분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업종별로 다 다릅니다  
마는 이번에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이나 금  
융 또 현재 하고 있는 자동차, 저희들이 대기업

의 여섯 직종을 우리나라 국민소득, 1인당 국민  
소득 대비 임금 수준하고 일본의 동일 업종의,  
예를 들면 은행·자동차의 일본 국민소득 대비  
그 업종의 종사자의 임금 수준을 대비를 해 봤습  
니다.

저희 나라의 경우는 금융·공공 그다음에 자동  
차·철강·조선·경유 이 6개 업종을 해 보면 우  
리나라 국민소득의 2.5에서 3.3배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동일 업종이 1.5에서  
2.5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과 우리를 비교하면 국민소득  
대비 그 6개 대기업들의 임금이 일본에 비해서  
저희들이 국민소득에 비해서 더 높다 이렇게 나  
와서 저희들이 대타협을 할 때 우리나라 청년들  
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상위 10%  
와 중소기업의 90%의 격차가 너무 커졌기 때문  
에 대기업의 임금 수준을 좀 자제를 하고 그 부  
분이 청년 채용과 그다음에 중소기업 근로조건  
향상으로 가도록 하자 그런 합의를 했던 것입니  
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하나는 소위 말해서 임  
금인상률을 자제를 하고 그것으로 청년을 채용하  
거나 중소기업 근로조건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가  
고, 두 번째는 장년의 고용불안이나 또 청년……

(「장관님,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단답  
형으로」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봐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청년을 직접 채용하지 않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우리 연공서열식 임금체계가기 때문에  
하나는 임금체계를 고치자 그렇게 합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으로  
바꾸자는 것은 지난 9월 15일 대타협뿐만이 아니  
고 그전에도 노사정 간에 수차례 합의를 했던 것  
입니다.

(「질의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창피한 줄 알  
아요!」 하는 의원 있음)

따라서 그 부분을 금년에 정년 60세를 시행을  
하면서 함께 고쳐서, 임금체계가 고쳐지면 장년  
들도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청년들도 더 많이 채  
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금피크제가 도입  
된 사업장과 도입되지 않은 사업장을 비교를 해  
봤을 때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장년이 훨씬 퇴직률이 낮습니다. 없는 사업장의  
40%밖에 퇴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임금피크제

가 도입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도입되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서 청년 채용률이 16%가 높습니다.

(「차수 변경하는데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나고!」 하는 의원 있음)

그런 청년과 장년의 상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을 저희들이 하자라고 합의를 했고 그것이 금년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우현 의원** 지금 보면 연평균 8000만 원 받는 우리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받는 계약직 근로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차이도 많은데, 이런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장관의 소신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웃음소리)

(「짧게」 하는 의원 있음)

(「잘한다!」 하는 의원 있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최근에 금융·공공 부문의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면서 파업하는 것에 대해서 경제단체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의 59%가 파업에 반대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웃고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관님, 짧게 하세요, 짧게!」 하는 의원 있음)

저는 대한민국의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10%하고 우리 중소기업 간에 100 대 50인데, 선진국은 100 대 75에서 100대 85 정도 됩니다. 100 대 75, 85를 가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딸들한테 중소기업 가서 일하랴? 누구도 안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점은 상위 10% 하는 대기업이 물가상승률만 올리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매년 10% 이상의 임금 인상을 해도 100 대 60이 되는 데 앞으로 10년이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선진국처럼 가려면, 100 대 75 내지 85 가려면 훨씬 더 중소기업을 많이 올리고 대기업은 더 자제를 해야만, 그리고 더 기간을 짧게 해야 10년 정도 되어서 100 대 70이 된다고 합니다.

(「장관님부터 자제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년 안에는 우리 청년들 문제를 어떻

게 풀 것이냐 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정년 60세가 시행되면서 현재도 우리 청년 취업애로계층이 115만에서 120만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정년 60세가 시행되면서 30만 정도의 청년 취업애로계층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에코 세대로 인해서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서 거기에서 또 청년 취업애로계층이 10만 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2~3년 내에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청년 취업애로계층이 150만 명, 160만 명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견뎌 내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상위 대기업들의 임금체계를 고치고 그런 것들이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향상으로 이어져서 중소기업에 우리 청년들이 가게 해 주는 것이 정답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의하세요, 답변 짧게 하고」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이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대정부질의 하세요, 질의!」 하는 의원 있음)

대정부질문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궁금한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아시는 의원님들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 발언 시간입니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조용히 해!」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있어라!」 하는 의원 있음)

(「반말 하지 마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 하는 의원 있음)

(「반말 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복지부차관입니다.

**○이우현 의원** 의장님,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질의야, 질의는!」 하는 의원 있음)

차관님, 지금 국가가 복지 예산에 너무나 많은……

(○이재정 의원 발언대기석에서 — 의원님, 법률 한번 읽어 보고 대정부질문에 충실하세요! 초선인데, 선배님이 부끄럽습니다.)

왜 떠들어요? 내 발언 시간인데 왜 떠들어요?

(○이재정 의원 발언대기석에서 — 국회법을

읽어 드릴게요.)

국회법 나도 알아요.

(「읽어 달라 그래」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세균 대정부질문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대정부질문은 질문하는 의원과 국무위원이 하는 것이니까 의원 여러분들, 대정부질문을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방해해요? 누가 방해하냐고,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자리까지 바꿔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것?」 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공정해야지 말이야. 하나도 제지도 안 하고 말이야!」 하는 의원 있음)

(「편파적으로 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시라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우현 의원, 어서 질문하세요.

○이우현 의원 시끄럽잖아요.

○의장 정세균 어서 질문하세요.

(「자리까지 바꿔 앉았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시라고 하세요. 자리로 돌아가시라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우현 의원 돌아가세요. 자리로 들어가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본인의 자리로 가세요. 갈 때까지 안 합니다.

(○이재정 의원 발언대기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진행하십시오. 제가 발언하면 얘기하십시오.)

(「하지 말고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장 정세균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이어서 질문하세요.

(「지금 시간을 계속 끌어가야……」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하세요.

○이우현 의원 지금 국가 예산이 복지에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국민들이 너무 궁핍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우현 의원님, 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시간 좀 많이 끌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복지에 대해서 몇 %를 국가 예산을 쓰고, 지금 영유아부터 노인복지기금까지 모든 지금의 복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저희 복지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예산에 대비해서 저희가 30%가 넘는 예산을 복지예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해서 비교를 해 보면, 저희가 GDP 대비해서 약 한 10% 정도의 예산을 복지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한 20% 정도 돼서 아직 저희가 갈 길이 멀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88년도에 국민연금이 시작됐고, 89년도에 시작이 됐고 10년 뒤인 99년도에 국민연금이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88년에 시작이 될 때 20년을 납부하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제도로 도입이 됐습니다. 또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그게 발전되면서 그 납부하는 의무기간을 10년으로 당겨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고 있기로는 그 연금이 성숙이 되는 그 단계에 따라서, 만약에 99년도에 20년짜리 연금을 부으신 분이 20년이 되게 돼서 만약에 연금을 타게 되는 때가 된다 그러면 그렇게 연금 수령한 부분이 복지예산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복지예산에 잡히게 돼서 2030년 전후 되면 저희가 한 18%, 19%까지 서구, 서유럽 수준의 복지지출까지 근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공부하세요, 평상시에」 하는 의원 있음)

(「다 아는 내용이니깐 짧게 답변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나중에 이우현 의원님한테 따로 가서 설명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우현 의원 아니, 지금 노인복지도 얼마가 나가고 우리 영유아에서는 얼마가 나가고, 지금 복지 총예산은 얼마고 국가 예산은 얼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소상하게 좀 알려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복지예산이 올해 기준으로 123조 정도 되는데, 약 400조 기준으로 해서 123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예산이, 약 한 12조 정도의 예산이 기초연금에 들어가구요.

○이우현 의원 기초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세요, 국민들 궁금하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기초연금이……

「그 부분은 이우현 의원님한테 나중에 따로 가서 설명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우현 의원**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조용하세요.

대답해 주세요.

「차관님, 이것 기록에 다 남습니다. 창피해요」 하는 의원 있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아무래도 연금이, 연금제도가……

(장내 소란)

○**의장 정세균** 의원님들, 조용히 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복지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14년도에 저희가 기초노령연금으로 받고 있는 수급액을 2배 올려서 20만 원 수준의 액수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좀 크게 하세요. 여기 안 들립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노인에게 지급되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기초연금 외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또 노인요양보험에서 노인 쪽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현 의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보다 굉장히 합리적이시네요, 차관님」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각료분 중에도 합리적인 분이 있으시니까 취지에 충실하시겠지요」 하는 의원 있음

「복지부차관이 제일 낫다. 총리나 장관보다 복지부차관이 제일 낫다」 하는 의원 있음

「복지부차관님 괜찮네」 하는 의원 있음

「복지부차관이 제일 나왔어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좀」 하는 의원 있음

우리 장관님, 8·15 사면 하셨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그렇습니다.

○**이우현 의원** 어떤 배경에서 몇 명, 또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문을 하시라니까요, 질문을. 대정부 질의를 하시라고」 하는 의원 있음

「신문에 다 나왔어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는 의원 있음)

○**법무부장관 김현웅** 이번 박근혜정부에서는 사면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생계형 범죄 또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면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강력범죄나 또 비리사범 이런 데서는 사면에서 제외를 하고, 순수한 생계형 범죄 또는 경제사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뒀서 사면을 실시했습니다.

○**이우현 의원** 몇 명 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면에는 순수한 형법상의 형벌사면이 있고 또 각종 행정제재에 대한 것도, 제한을 해제하는 것도 일종의 사면으로 포함되어서 해 왔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우현 의원** 20대 총선의 선거사범, 조사하는 인원 지금 몇 명이고 기소를 대강 몇 명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구체적인 사건의 숫자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지금 선거사범의 약 70% 정도를 처리를 했습니다. 한 68.5% 정도를 처리를 했고, 선거사범은 선거일로부터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이번 10월 13일로 공소시효가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우현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길게 좀 하시지, 너무 짧았어요」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교육부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좀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자유학기제, 부총리님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이우현 의원** 자유학기제의 취지나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자유학기제의 취지는 우리 아이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과 성적 위주의 어떤 평가로 인해서 서열화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학교 교육에 대한 흥미를 잃고 학교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는 3년 전에 시범학교에서부



터 시작을 해서 올해는 모든, 전국의 3213개 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는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미 많은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생·교사·학부모가 모두 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유학기제에서 시행하는 내용들은 중학교 1학년 때 한 학기 동안에 교과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서 진로체험 학습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그다음에 프로젝트 수업 그리고 예체능 수업 등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하세요, 조금만」 하는 의원 있음)

이러한 것들이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진로체험 학습 위주로 추진이 되었지만 자유학기제 학습을 통해서 일반 교과수업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동안의 단순한 어떤 지식 주입 교육에서부터 벗어나서 학생들이 직접 수업에 참여하는 토론 수업이라든지 거꾸로 수업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고 수업 내용 방식도 다양한 흥미를 위주로 하는 그러한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가 굉장히 높고 이전처럼 잠을 자는 학생이라든지 수업시간에 다른 행동을 하는 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전혀 없어지고 교실이 완전히 살아나고 왁자지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여러 현장을 다녀 봤습니다마는 그 학생들의 수업 형태가 보통 중학교의 학생수가 25명에서 30명 정도 되는데 그룹별로 5~6명씩 팀을 짜서 수업이 주로 진행이 되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고 교사는 거기에 따라서 조언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융합 수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수학시간인데 기존처럼 수학 문제풀이를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유명한 수학자의 이름을 주고 ‘그 수학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라’ 하는 과제를 주면 그 그룹별로 대여섯 명씩 모여 있는 학생들이 열심히 인터넷을 찾아서 그 수학자의 일대기를 공부를 하고, 그 수학자가 수학이론을 어떤 계기에 의해서 도출해 냈고 그러한 수학 이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수학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 인터넷을 서치를 잘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 것들을 모아서

글로 쓰는 학생이 있고 또 이것을 PPT 자료를 만들어서 밖에 나가서 발표를 하는 학생이 있고 이런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각자의 가지고 있는 재능이 파악이 되고 어울려서 뭔가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서로가 느끼게 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수학시간이기는 하지만 인문학도 되고 또 발표하는 능력을 기르는 수업이 되고 해서 이런 것들이 확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제가 한없이 들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해서……

(장내 소란)

(「계속해요」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우현 의원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예만 들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잘하고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래서 자유학기제는……

(「학생들 보기에 창피하지 않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해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그러나 올해 자유학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하는 것들은 농산어촌이라든지 도서벽지 학생들에 대한 체험처를 얼마나 좋은 양질의 체험처를 제공하는가 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통계도 좀 얘기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구체적으로 통계도 좀 얘기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우현 의원 왜 남의 답변 하세요!

(웃음소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죄송합니다.

(「그냥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우현 의원 하세요.

(「이우현 의원님 지적 잘 하셨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래서 현재 8만여 개 이상의 체험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냥 체험처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

나라 얼마만한 양질의 체험처를 확보해 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벽지나 농어촌 학생들을 위해서 주로 대학과 MOU를 체결해서……

(「장관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우현 의원님만 보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상당수의 거점 대학들이 자유학기제에 참여를 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제에 있는 금구중학교에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들러리 서시는 것 좋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 근처의 군산대학교에서 체험버스에다가 컴퓨터 20여 대, 그다음에 3D프린터 대여섯 대를 싣고 학교로 직접 와서……

(「여기도 한번 봐 줘요!」 하는 의원 있음)

그 학교에서 컴퓨터를 설치하고 3D프린터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러한 체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형태로 해서 모 대학교는 자기네 대학이 방학이 좀 일찍 끝나지 않습니까? 6월 중순이면 끝나고 중학교는 7월 중순까지, 하순까지 가기 때문에 그 한 달 동안에 기숙사가 비게 됩니다. 그래서 도서벽지에 있는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 동안 기숙사에 머물게 하면서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체험 리소스를 제공해 주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올해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장관님한테도 모욕적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체험처는 미리 계획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체험처가 단순한 견학 형태로 이루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장관님, 5분일지라도 합리적인 요약을 해서 답변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저희가 직접 체험처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체험처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체험처 인증제도를 ‘꿈길’이라는 사이트에 설치를 해서 교사—선생님들이 그러한 양질의 체험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유학기제가 추진되면서 교사—선생님들의 학습에 대한 준비를 위한 부담은 훨씬 더 커졌지만, 오히려 학생들이 정말로 교실이 살아나는 데 대한 아주 큰 보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교사연구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이 자유학기제에 학생들에게 융합적인 수업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발표회도 갖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러한 좋은 교과내용들을 공유하는 그런 축제도 저희가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학기제라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의 교과 성적 위주의 어떤 평가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을 끄집어내고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 더군다나 이제 지능정보사회 그리고 4차 산업혁명사회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과학적인 창의성 그리고 인문학적인 통찰력 그리고 도전정신, 인성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학기제가 잘 정착이 되고 중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이 학생들이 이제 진학을 함에 따라서 고등학교에서도 그러한 교육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장관님한테도 모욕적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대학에서 대학입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들러리서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요약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이우현 의원 얘기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여튼 그 자유학기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방해할 것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국회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당당하게」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이우현 의원 학부모님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거든요. 학부모님들 우려를 해소해야 되는데 정부의 노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해부터 전면 실시하는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처음에 실시할 동

안에는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이 오후에 교과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학력이 떨어질까 하는 우려를 많이 나타내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기 전하고 자유학기제를 시작한 후의 학생들의 교과 성적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확실하게 줄고 그다음에 성적 우수자의 숫자가 훨씬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에 있는 동부중학교를 제가 가봤었는데 거기에서는 수학 우수, 그러니까 학력 미달자는 전혀 없어지고 수학 우수자가 13%에서 33%까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학부모님들한테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못 기다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으로 모욕스럽습니다. 이게 뭐니까? 코미디도 아니고!」 하는 의원 있음)

(「조용!」 하는 의원 있음)

(「저는 국회의원이 이런 거라고 배우지 않아 가지고 초선으로서 모욕스러워서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스무 번에 걸쳐서 학생들에 대한, 학부모님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정말 간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우현 의원** 바쁘면 들어가세요!

(「바쁘지 않습니다. 시간은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요! 왜 남 질문에 떠들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대정부질문 그대로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궁금한 것 질문하시고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청드립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우현 의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은 무엇이에요?

(「교육자 출신으로서 참 창피한 줄 아셔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일개 장관에 질문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답변하세요!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잠깐만.)

(「야당이 소란피우는데……」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교육자이시라면서요」 하는 의원 있음) 왜 떠들어요!

(「주의 좀 주세요, 주의 좀!」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민주당은 제지도 안 해! 여기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면 가만히 있어.)

○**의장 정세균** 정 대표!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도대체?)

눈이 없습니까? 내가 제지하는 것 보셨잖아요?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무슨 제지를 합니까? 공평하게 회의를 운영하세요, 공평하게.)

그런다고 해서 그게 되나?

(장내 소란)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도대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휘방을 놓는데도 가만히 있고 말이지요. 공정하게 회의 좀 진행하세요!)

원내대표가 대정부질문을 방해하지 마세요.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저도 지금 참다 참다 나온 겁니다!)

그것 옳지 않은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누가 부끄러운 줄 알아요?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말이야! 의장이 공정해야지!)

(「왜 반말 하고 그러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이런 의장이 어디 있어요? 편향적으로, 편파적으로 말이야!)

(「의원님, 원칙대로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상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원님……)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나도 참다 참다 나온 거 아니냐고!)

(○우상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같이 떠들잖아. 여기 떠들잖아, 봐.)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여기서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여기서 하니까! 아니, 내가 협조를 하고 있는데 말이야.)

(「그리고 장관을 모욕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초선인데 이렇게 배우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교육부장관 말고 다른 장관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교육부장관님 좀 당당하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모욕적이지 않아요」 하는 의원 있음)

(「장관님한테 죄송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상호 의원 단하에서 — 어차피 다 같이 떠들고 있구먼, 뭘 뭐라고 그래? 자, 조용히 합시다, 이제! 조용히 합시다!)

(「장관님, 혼자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우상호 의원 단하에서 — 저것 봐, 떠드네. 저기 떠드네.)

여야 의원 여러분, 대정부질문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의원 단하에서 —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조용해지면 하세요, 조용해지면」 하는 의원 있음)

○이우현 의원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조용히 해주세요.

교육개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교육부에서는 행복교육, 창의적 인재양성이라는 비전하에 6대 교육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대 교육개혁 과제는 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 일·학습 병행, 선취업·후진학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 개혁, 마지막으로 사회 맞춤형 인력양성 등이 되겠습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학습 병행, 선취업·후진학 이런 것들은 같이 연계되어서 진행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그동안에 대학진학률이 70%를 상회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선진국에 비해서, 선진국은 50%를 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인력수요에 대한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졸 취업을 더욱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고졸 취업을 통해서 우선 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고등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그러한 선취업·후진학 제도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학습 병행과 관련해서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의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진학률이 한 19% 정도 됩니다. 이것을 2022년까지 한 30%로 끌어올릴 계획을 갖고 있

습니다.

유럽의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미 한 40%에서 50% 사이의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시스템을 도입해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시스템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학생이 일주일 동안에 3일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이들은 직접 기업 현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면서 수업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취업에 연계되기 때문에, 취업이 된 상태에서 그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미 취업에 대한 불안 없이 안정적인 수업을 할 수 있고 또 회사는 회사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이 학생이 졸업하면 별도의 어떤 기업에서의 교육이 필요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과 기업이 모두 다 만족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에 60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에는 200개로 늘려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선취업·후진학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미래에 직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미래 직업 수요에 대한 대비를 하고, 노후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고령화사회에 접어드는 것에 비추어서 매우 사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은 주로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의 어떤 구조 개혁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많습니까마는, PRIME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PRIME 사업은 일반적으로 단순히 이공계 인력의 정원을 늘리고 인문사회계 정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분야들이 서로 학문적으로 융합해서 어떤 새로운 미래 학문분야를 창출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PRIME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PRIME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에는 문화콘텐츠라든지 미디어 같은 그러한 것으로 특화된 PRIME 사업단들도 있습니다, 물론 예체능 관련된 PRIME 사업도 있고. 이런 것들이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전적인 대비라고 생

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6개,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 개혁은 저희가 지방교육재정 알리미 사이트를 개설하고 지방교육의 재정이 낭비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불용이나 이월을 줄여 나가는 그러한 것으로, 국민들께서 직접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우리 교육재정이, 국민들께서 내신 세금이 교육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이고 있는가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현 의원** 장관께서 예체능과 실업계 고등학교 또 마이스터 고등학교 더 확대하고 기숙사도 좀 만들어 주고 그래서 직업을 많이 갖는, 그래서 인문계 비율이 높은 것을…… 아까 유럽은 40%라고 그랬는데 그 정도까지는 우리나라가 가야 우리 젊은이들의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현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가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입니다.

○**이우현 의원** 장관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한일 간에 위안부, 잘 약정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이우현 의원** 지금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뭔가 내용을 잘 몰라요. 지금 위안부 한일 관계 협약한 거라든지 친안 방향의 동산에 추모비라든지 이런 진행사항 같은 게 있을 텐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의원님도 과거에 들으신 바가 있으시겠지만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최초의 증언을……

○**이우현 의원** 마이크 좀 바짝 대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최초의 증언 이후 24년이라는 지난한 시간이 걸렸고 한일 합의가 작년에 완료됐습니다. 합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이나 또 국민들께서 찬반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하지만 사실 일본군 위안부 관련해서 93년 고노담화에 이어서 95년 무라야마 담화 이후까지 실제로 일본은 담화를 통해서 발표는 했지만 실질적인 책임이행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습시다.

다만 95년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서 아시아여성기금이라는 걸 집행할 수 있는 재단이 설립되었지만 실제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물론 이후에 부족한 부분을 일본 정부가 충원은 했지만 실제로 민간의 모금을 통해서 아시아여성기금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6년에 이러한 한일 합의,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 양국 간에 제대로 실천을 하지 않는다, 위안부 피해자 관련 구체적인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기본권 침해가 헌법을 위배한다는 위안부 관련 단체들의 헌법재판소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2011년 8월 30일 현재 판결에서는 정부가 작위를 하지 않으면 위안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 위배가 된다고 했고 또 피해자 연령이 고령인 점은 매우 절박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일 양국의 위안부 관련한 피해에 대한 협상 요구가 위안부 관련한 단체와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2011년부터 양국의 협상이 다소 이루어지기는, 이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양국에서 일부 논의는 되었지만 결국 2011년에는 일본 노다 총리와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2012년에 일본 외무성 차관 사사에 겐이치로가 협상안을 들고 왔지만 그마저 결렬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현재 판결 이후 현 정부 들어서도 2013년부터 관련 단체의 지속적인 해결 노력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2014년부터는 한일 양국 간에 국장급 회담이 열리고 그 이후로 10여 차례 동안 한일 양국이 꾸준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피해자에 대한 의견청취가 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20여 차례 피해자의 의견을 물었고 관련 단체의 의견도 청취해서 공통적인 부분에 대한 제반 여건을 도출한 배경을 가지고 이 한일 합의는 상대가 있는 제약된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피해 할머니들께서 이 합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또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면담을 해 보면 상당히 더 많은 분들이 이 합의가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서……

○**의장 정세균** 여성부장관, 마무리해 주세요.

(「의장님, 앉으세요. 답변하는데」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앉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이우현 의원 하세요.

○의장 정세균 지금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마는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장내 소란)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날치기하지 말라고! 날치기하지 마! 국회법을 지켜. 안 돼!)

(「합의가 안 됐잖아, 합의가!」 하는 의원 있음)

따라서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차수를 변경하여 바로 본회의를 개의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협의를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날치기하지 마세요! 안 돼! 날치기하지 마세요!)

(「왜 할 때마다 날치기 해, 지금!」 하는 의원 있음)

(「협의를 하세요, 협의!」 하는 의원 있음)

의원들께서는 자정이 넘더라도 이석하지 마시고 의식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의원, 발언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법대로 하시면 돼요, 법대로」 하는 의원 있음)

(「공평하게 하세요, 공평하게」 하는 의원 있음)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하는 의원 있음)

(「할 때마다 날치기야, 그냥!」 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중립을 지켜야지!」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누가 협의를 했어요, 의장님? 의장님, 잠깐만요. 국회법 77조에 교섭단체 협의하게 돼 있어요, 의장님. 국회법 77조 갖고 와 봐. 갖고 와 보시고, 나는 통보받은 바가 없어요.)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의장이 이딴 식으로 직권으로 날치기해서 개의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어요! 우리는 협의 통보도 못 받았고, 독재 날치기예요!)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부끄러운

줄 알아!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왜 이렇게 날치기를 하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정진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치욕적인 줄 아시라고! 헌정사에 치욕적인 오점을 남겼어요! 국회법도 여기는 의장이, 국회법도 여기는 줄 모르고 헌정사에 치욕적인 오점을 남기는 의회주의를 말살시키는 독재자, 날치기 의장입니다!)

(장내 소란)

(「정세균은 독재자다!」 하는 의원 있음)

(「법대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정세균은 독재자다!」 하는 의원 있음)

(「독재자 물러나라!」 하는 의원 있음)

(「협의를 해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24시 경과로 자동 산회되었음)

○출석 의원(289인)

강 병 원	강 석 진	강 석 호	강 창 일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석 창	권 성 동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수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광 수	김 규 환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부 겸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선 동	김 성 수
김 성 식	김 성 원	김 성 태	金 成 泰
김 세 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춘
김 영 호	김 재 경	김 정 우	김 정 훈
김 중 대	김 중 민	김 중 석	김 중 인
김 중 태	김 중 회	김 중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대 흠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미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도 중 환	문 미 옥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 병 두	민 홍 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범 계	박 병 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영선 하태경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하태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주선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황희  
 박찬우 박홍근 배덕광 백승주 ○개의 시 재석 의원(122인)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서형수 백설 훈성일 소병훈 권미혁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손금주 손혜원 송기석 송기현 김경수 김경협 김광수 김동철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상희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용현 김성수 김성식 김수민 김영주  
 신창현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김영진 김영춘 김정우 김종민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김중회 김중로 김철민 김태년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엄용수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여상규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문미옥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박남춘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희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정현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종필 손혜원 송기석 송기현 송영길  
 윤영일 윤재옥 윤후덕 이개호 이명수 이양수 이은권 이종구  
 윤한홍 이동섭 이만희 이석현 이양주 이용주 이진복 이원욱  
 이균현 이상민 이석득 이원욱 이재정 이종구 이철우 이학영  
 이상돈 이완영 이원욱 이은권 이재정 이종구 이철우 이학영  
 이언주 이완영 이원욱 이은권 이재정 이종구 이철우 이학영  
 이용호 이우현 이장우 이종걸 이진복 이철우 이학영  
 이은재 이인영 이종걸 이주영 이철규 이태규 이현재 임이자  
 이정미 이정현 이종배 이주영 이철규 이태규 이현재 임이자  
 이종명 이종배 이채익 이철규 이태규 이현재 임이자  
 이찬열 이춘석 이태규 이현승 임이자 장제원 장혜숙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현승 임이자 장제원 장혜숙  
 이학재 이해찬 인재근 장정숙 장제원 장혜숙  
 이혜훈 이훈 장병완 장정숙 장제원 장혜숙  
 임종성 장병완 장정숙 장제원 장혜숙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정동영 정병국 정용기  
 전희경 정갑윤 정양석 정인화 정인화  
 정성호 정세균 정유섭 정진석 정춘숙 조배숙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진석 정춘숙 조배숙  
 정재호 정종섭 조경태 조배숙 조정식  
 조승래 조원진 조응천 조정식 주호영  
 조훈현 주광덕 채이배 천정배 최도자  
 진선미 진영 최교일 최인호 표창원  
 최경환(새) 최경환(국)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최명길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표창원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개의 시 재석 의원(122인)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광수 김동철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상희  
 김성수 김성식 김수민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정우 김종민  
 김중회 김중로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문미옥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남춘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정현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형수 송영길  
 손혜원 송기석 송기현 신용현  
 송옥주 신경민 심상정 안규백  
 신창현 안철수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오세정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위성곤 유동수 유성엽  
 유기준 유승희 윤종오 윤호중  
 윤관석 윤영석 윤종필 이개호  
 이명수 이양수 이용주 이진복  
 이원욱 이재정 이종구 이철우  
 이석현 이언주 이철회 인재근  
 이인영 이재정 이철회 이훈  
 이태규 이학영 이현재 정성호  
 장병완 전해철 조배숙 조승래  
 정재호 제윤경 조정식 진선미  
 조응천 조정식 진선미 최경환(국)  
 최도자 최명길 최운열 최인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한정애  
 홍익표 황희

○속개 시 재석 의원(95인)

강병원 고용진 권미혁 기동민  
 김경협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상희 김석기 김성수  
 김성식 김수민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김종민 김종훈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문미옥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남춘	박병석	박영선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박완주	박재호	박정	박주민	손혜원	송기석	송기헌	송석준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설훈	소병훈	손혜원	송기석	신동근	신보라	신용현	신창현
송기헌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민석
신창현	심재권	안규백	안호영	안상수	안철수	안호영	양승조
양승조	어기구	오영훈	우상호	어기구	엄용수	엄동열	오세정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종오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윤호중	이상돈	이석현	이원욱	유민봉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이인영	이재정	이찬열	이채익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이철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찬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재옥
이훈	임종성	전재수	전현희	윤종오	윤종필	윤호중	이개호
정세균	정재호	정춘숙	조응천	이동섭	이만희	이상돈	이상민
조훈현	진선미	진영	표창원	이석현	이양수	이언주	이완영
한정애	홍영표	홍익표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우현

○산회 시 재석 의원(256인)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이종걸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곽상도	권미혁	권석창	권은희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이철우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현재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이훈	인재근	임종성	장병완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전현희	전희경	정동영	정성호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정세균	정양석	정운천	정유섭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정인화	정재호	정종섭	정진석
김성원	金成泰	김세연	김수민	정춘숙	정태욱	조배숙	조승래
김순례	김승희	김영주	김영진	조원진	조응천	조정식	조훈현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종대	주광덕	주승용	진선미	진영
김종민	김종석	김종인	김종태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새)	최경환(국)
김종희	김종훈	김중로	김진태	최교일	최도자	최명길	최연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추미애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정애
김현미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미옥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희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영선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지원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배덕광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형수				

○출장 의원(1인)

김정재

○청가 의원(4인)

강길부 강효상 서청원 지상욱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우윤근  
입법차장 진정구  
의사국장 권영진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최인호 · 추혜선 의원 발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16. 9. 22. 김명연 · 운영석 · 김성원 · 정종섭 · 이채익 · 김규환 · 이만희 · 김현아 · 김정재 · 이양수 · 민경욱 · 김도읍 · 김상훈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16. 9. 22. 김명연 · 김도읍 · 정태욱 · 강석진 · 강효상 · 염동열 · 이우현 · 김성원 · 홍문종 · 정병국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6. 9. 22. 심재철 · 이은재 · 이종명 · 오신환 · 주호영 · 권석창 · 이현재 · 문진국 · 정운천 · 윤종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

(2016. 9. 22. 김현미 · 윤후덕 · 임중성 · 유은혜 · 김정우 · 표창원 · 신창현 · 윤관석 · 어기구 · 민병두 의원 발의)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

(2016. 9. 22. 김동철 · 윤영일 의원 외 88인 발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2016. 9. 22. 김영우 · 권성동 · 유기준 · 이장우 · 김정재 · 천정배 · 김종태 · 조원진 · 주광덕 · 나경원 · 이은재 의원 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2016. 9. 22. 김영우 · 권성동 · 유기준 · 이장우 · 김정재 · 천정배 · 김종태 · 조원진 · 주광덕 · 나경원 · 이은재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2016. 9. 22. 김영우 · 권성동 · 유기준 · 이장우 · 김정재 · 천정배 · 김종태 · 조원진 · 주광덕 · 나경원 · 이은재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2016. 9. 22. 김영우 · 권성동 · 유기준 · 김정재 · 천정배 · 김종태 · 조원진 · 주광덕 · 안상수 · 나경원 · 이은재 의원 발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2016. 9. 22. 김영우 · 이은재 · 나경원 · 권성동 · 유기준 · 이장우 · 천정배 · 김종태 · 조원진 · 주광덕 · 김정재 의원 발의)

이상 25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

(2016. 9. 23.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 지원특별위원장 제출)

○서면답변서 제출

**비긴급 신고전화 상담센터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6. 9. 22. 국민권익위원장 제출)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